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양평섭 · 여지나 · 박현정 · 배승빈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02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 중화권 |

양평섭 · 여지나 · 박현정 · 배승빈

.....

서 언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중국은 경제규모 세계 4위, 무역규모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13억 인구의 거대 시장으로서 외국기업의 가장 매력적인 해외투자처로 부상하여 2006년 말까지 각국의 대중 투자누계액은 7,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그간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상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어 앞으로 중화권의 경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은 지난 15년간 중국과의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으므로, 중국의 경제발전이 동아시아와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기업들의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편 중국의 경쟁력 제고에 따라 한국의 경쟁력 우위 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을 받는 등 위협 요소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력 확대에 따른 기회와 도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전략적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의 대중화권 중장기 통상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화권 중장기 통상전략 추진 방향을 제시한 후 무역, 투자, FTA, 금융, 물류, 에너지, 기술 등의 구체적 분야에서 다양한 범주의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이 다년차 과제로 진행 중인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보고서 시리즈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국별·지역별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보고서는 전세계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다루는 총괄보고서와 함께, 국별·지역별로 출간되는 12개의 보고서 중 중국과 홍콩 및 대만 지역을 포함한 중화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양평섭 부연구위원과 여지나, 박현정, 배승빈 연구원이 작성하였습니다.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인천대학교 김민수 교수, 산업자원부 이기영 사무관, 영남대학교 최의현 교수, SK 경영경제연구소 김완중 박사, KIEP 김홍중 박사, 이장규 박사, 남호선 연구원, 강찬주씨와 익명의 평가자들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연구서는 무역, 투자와 여러 경제 협력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하고 더불어 구체적인 협력분야와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이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되고 정부의 대중화권 통상정책을 평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든 하나의 기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학계에서도 이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대중화권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중심연구주제 중의 하나로 부상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7년 12월
원장 이 경 태

.....

국문요약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상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중화권 내에서는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맞는 새로운 대중화권 통상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중국의 경쟁력 제고에 따라 현재 한국이 중국 및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경쟁력 확대에 따른 기회와 도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 혹은 중국 중심의 중화권 경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략적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그에 대한 답으로서 대중화권 중장기 통상전략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포괄적·다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경제관계를 위주로 발전되어 온 한·중 관계의 협력 의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심화되어 있으나, 중국이 안전성장 일변도를 걷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므로 우리의 장기적인 경제안보를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외교 분야에 걸친 보다 광범위한 통상외교 전략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실리적인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 가능성을 내다보고 한·중 관계의 방향을 설정해 이에 기반한 대중 통상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경제교류 분야의 쟁점인 한·중 FTA 체결에 있어서 협상

의 적절한 시기 선정과 협상력 발휘를 통하여 한·중·일 3국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향후 대중화권 통상전략에 있어 정부 차원에서는 홍콩,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지역별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민간 차원에서는 ‘하나의 중화 경제권’과 중화권 내 수 개의 경제권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국 비즈니스를 전개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홍콩과 대만에 대한 경제적 통합 가속화를 통하여 중화경제권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중화권 내 금융·물류 등 일부 영역에서 서로 경쟁과 협조를 통해 역할 분담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중국 대륙의 성장점이 다핵화되어 갈 것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연해의 주장(珠江) 삼각주, 창장(長江) 삼각주 및 환발해만 지역 이외에도 동북3성, 서남지역인 성유(成瀋)지구 등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해지역에 편중된 우리의 대중국 진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지난 15년간 한·중 경제교류를 통해 향유해온 ‘중국효과(China effect)’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고부가가치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향후 중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기술주도적인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지배력을 가진 주도적인 제조국이자 수출국이 될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제품군에 대해 한국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옮겨가거나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 사슬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인 R&D, 디자인, 핵심 부품 개발, 마케팅 등의 과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산업별로는 현재의 중심산업인 철강, 전자, 석유화학, 조선 등의 제조업 수명을 늘려야 한다. 부품 소재 사업의 경우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으나 소재의 품질이나 다양화가 최종 조립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므로 라이프 사이클이 짧지 않은 기초소재에 대해 품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소비시장뿐 아니라 생산자시장의 공략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품과 자본재 개발에 노력하고, 시장

수요의 세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대중 통상 협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향후 한·중간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될 경우 중국과 단순히 무역과 투자문제를 넘어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교류의 양적 확대와 이슈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한·중간 통상 분쟁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의 협상 전략에 대한 연구는 물론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중국 협상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선택적 공조를 통해 대중국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본 서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대중국 통상정책 방향하에서 분야별 통상협력의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무역 분야에서는 한·중간 분업구조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부품과 소재 부문의 경쟁력을 증강시켜 중국 산업구조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의한 대중국 수출유발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기업과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투자분야에서는 중국이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중국을 임가공 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China+1’ 전략을 추구하여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소비자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서비스 시장 규모 확대와 개방에 맞춰 금융, 유통, 물류 등 중국의 성장분야인 제조업 지원 서비스 분야의 진출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향후 중국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해외투자를 강화하게 되면, 양국간 투자 협력구조가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일방적 투자에서 쌍방향 투자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는 대중국 투자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통상 협력의 정부간 주요 이슈가 될 한·중 FTA의 논의에서는 포괄적인 한·중 FTA를 추진하되 경제적 실익을 우선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가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파급효과와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연구와 예측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결과에 기초하여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FTA 협상을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과 동시다발적으로 이끌어가면서 협상의 경제적 실익을 최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중 FTA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 철폐와 더불어 비관세조치의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내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금융, 물류, 에너지, 기술 등 구체적인 분야에 있어서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양자간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차 례

서 언	5
국문요약	7
제1장 서 론	19
1. 연구 목적	21
2. 연구 범위와 내용	22
제2장 증장기 중화권 경제 전망	23
1. 중화권의 경제 동향과 증장기 전망	25
가. 중화권의 경제 동향	25
나. 중화권 경제협력의 도전 과제와 대만·홍콩의 역할 변화	29
다. 중화권의 증장기 경제발전 목표와 전망	41
2. 중화권 내 경제교류 관계 현황과 전망	48
가. 중화권 내 무역협력 현황과 전망	48
나. 중화권 내 투자협력 현황과 전망	55
다. 중화권 내 FTA 현황과 전망	64
3. 중화권의 협력과 경쟁: 금융 및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70
가. 중화권 내 금융협력 현황과 허브경쟁	70
나. 중화권 내 물류산업 재편과 경쟁 심화	79

제3장 한국의 대중화권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이슈	89
1. 무역관계	91
가. 한국의 대중화권 무역협력 현황	91
나. 한·중 간 분업구조	95
2. 투자관계	99
가. 투자 현황	99
나. 투자협력 여건 변화와 전망	104
3. 한국의 대중화권 FTA 추진 현황	107
가.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전략	107
나. 대중화권 FTA 추진 현황	109
4. 기타 분야의 협력과 경쟁관계	109
가. 금융협력과 금융허브 경쟁협력	109
나. 물류협력과 물류허브 경쟁	115
다. 에너지협력	123
라. 기술개발협력	138
제4장 주요국의 대중화권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149
1. 미국	151
가.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경제협력 전망	151
나.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151
2. EU	159
가. EU의 중장기 경제협력 전망	159
나. EU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161
3. 일본	166
가. 일본의 중장기 대중국 경제협력 전망	166

나. 일본의 증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168
4. 대중국 통상정책 비교	171
제5장 한국의 대중화권 통상전략	173
1. 증장기 대중화권 통상환경 평가	175
2. 대중화권 증장기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176
가.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과제	178
나. 중국효과(China Effect)를 지속시키기 위한 과제	181
다. 대중 통상 협상력 제고방안	183
3. 분야별 통상협력 전략과 과제	184
가. 무역분야: 무역역조시대의 대비	184
나. 투자협력: China+1 전략과 쌍방향 투자시대의 대비	186
다. 포괄적 한·중 FTA 추진	188
라. 기타 분야 협력: 협력과 경쟁	190
참고문헌	200
Executive Summary	211



표 차례

표 2-1. 중국, 대만, 홍콩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28
표 2-2. 산업공동화 관련 지표	31
표 2-3. 2002~2020년 경제성장 전망(기준 시나리오)	41
표 2-4. 2002~2020년 평균 GDP 성장률	42
표 2-5. 세계 주요기관의 중국 장기 성장률 전망	43
표 2-6. Goldman Sachs의 BRICs 장기 성장률 전망	43
표 2-7. 대만의 발전 목표	44
표 2-8. 중국, 대만, 홍콩의 중장기 경제지표 전망	47
표 2-9. 중화권의 수출입 규모와 역내 교역	49
표 2-10. 중국의 수출입 규모와 역내 교역	51
표 2-11. 대만의 수출입 규모와 역내 교역	52
표 2-12. 홍콩의 수출입 규모와 역내 교역	53
표 2-13. 홍콩의 수출입 구조	54
표 2-14. 홍콩 재수출의 원산지 및 수출대상 지역	54
표 2-15. 세계 FDI에서 중화권이 차지하는 비중	55
표 2-16.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비금융기구 투자)	58
표 2-17.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59
표 2-18. 대만의 해외투자 현황	61
표 2-19. 대만의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62
표 2-20. 홍콩의 해외투자 현황	63
표 2-21. 홍콩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64

표 2-22. 중국 FTA 추진 현황	66
표 2-23.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시가총액(2007년 3월 말 기준)	71
표 2-24. 2004~2006년 3년간 IPO 현황	74
표 2-25. 2006년도 홍콩 증시 금액기준 30위 IPO 현황	75
표 2-26. 세계 20대 컨테이너항만의 처리물동량 변화 추세	80
표 3-1. 한국의 대중화권 수출입 추이	92
표 3-2. 홍콩경유 중계무역을 감안한 한국의 대중국 무역 추이	93
표 3-3.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변화	95
표 3-4.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입 구성	96
표 3-5. 주요 업종별 한·중 간 산업내무역 지수 추이	98
표 3-6. 한국의 대중화권 직접투자 현황(투자 기준)	100
표 3-7. 한국의 대중화권 투자업종 분포(2006년 말 현재)	101
표 3-8. 중화권 국가의 대한국 직접투자(신고기준)	103
표 3-9. 중화권 국가의 업종별 대한국 직접투자	103
표 3-10. 주요국별 투자대상 업종	106
표 3-1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107
표 3-12. 한국계 금융회사의 업종별·형태별 중국진출 현황	111
표 3-13. 한국계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 현황	112
표 3-14. 홍콩진출 한국계 상업은행의 인가형태별 현황	113
표 3-15. 한국계 금융기관의 홍콩 진출 현황	113
표 3-16.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 현황(2006년)	125
표 3-17. 두산중공업 원전기자재 해외수출 현황	126
표 3-18. 중국의 주요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현황(2006년)	128
표 3-19. 최근 중국 에너지 자원의 주요 해외투자 사례(2002~2006년)	130
표 3-20. 중국 원전시장의 현황	131

표 3-21. 한국의 대중국 에너지 자원 및 제품 수출	133
표 3-22. 한국의 대중국 에너지 자원 및 제품 수입	134
표 3-23. 한전의 대중 전력사업 진출 현황	136
표 3-24. 산업계 R&D 투자 현황	139
표 3-25. 산업계 인력 현황	139
표 3-26. 중국의 R&D 지출 추이 및 계획	142
표 3-27. 대만의 R&D 지출 추이	144
표 3-28. 중국내 한국 기업연구소 설립 현황	145
표 4-1. 통상법 421조에 의한 미국의 대중국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사례	156
표 4-2. 주요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비교	172
표 5-1. 중장기 대중화권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177



그림 차례

그림 2-1. 중화권의 GDP 성장 추이	25
그림 2-2. 산업공동화 관련 지표 변화 추이	32
그림 2-3. 1980~2005년 홍콩의 총수출 구성	35
그림 2-4. 중화권 역내 교역 흐름도	50
그림 2-5. 중화권 역내 직접투자 흐름도	56
그림 2-6. 중국의 해외투자 추이	57
그림 2-7. 2006년 증권시장 기업공개(IPO) 규모 세계 순위	73
그림 3-1. GDP 성장률과 사회물류총액 성장률 추이 비교	115
그림 3-2. 세계 6대 주요 에너지 소비국	127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내용

01

서론

1. 연구 목적

본 보고서는 세계 각 지역별로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통상정책을 펼쳐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과제의 일부로, 중화권, 특히 중국과의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도 보호주의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상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0년이 경과하면서 아시아의 금융 및 물류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홍콩정부는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홍콩을 금융 및 물류 허브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대만은 제조업 기반이 중국으로 이전되면서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신세기의 국가발전전략’을 통해 세계 R&D 기지 및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동시에 중화권 내에서는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맞는 새로운 대중화권 통상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중국, 홍콩, 대만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관계설정을 토대로, 대 중국·홍콩·대만 통상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통상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 범위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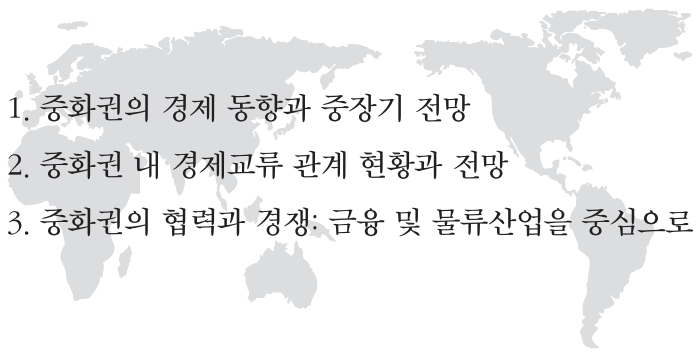
본 연구는 중국·홍콩·대만의 통상정책의 현황과 특징 및 이에 따른 한국과의 통상관계 및 환경 변화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주요 통상대상국인 미국, 일본, EU의 대중 통상전략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화권, 특히 대중국 중장기 통상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국, 홍콩, 대만의 경제현황 및 중장기 발전전략을 통해 중화권이 중장기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특히 중화권의 대외 경제관계의 특징과 향후 이슈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둘째, 한·중 간의 경제협력 현황과 현안을 무역, 투자, FTA 등 주요 이슈별로 살펴보았다. 셋째, 우리의 대중화권 통상전략 수립에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하고자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대중화권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세계경제, 동북아 및 우리에게 있어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살펴보고, 중국의 부상이 우리의 통상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우리의 대중화권 중장기 통상전략을 무역, 투자, 기술, 자원, 금융 등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보고서는 서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중화권의 중장기 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시에 중화권의 역내외 경제협력 현황·분업·경쟁관계를 무역, 투자, 금융, 물류, FTA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화권 간 경제협력 현황과 협력 관련 주요 이슈를 무역, 투자, FTA, 금융, 물류, 에너지, 기술개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국, EU, 일본의 중화권, 특히 중국에 대한 통상전략과 향후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중장기 대중화권 통상 환경의 변화, 통상전략 목표와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무역, 투자, FTA, 기타 협력 분야로 구분하여 우리의 부문별 중장기 통상 및 협력 전략을 모색하여 보았다.

제2장

중장기 중화권 경제 전망

- 
1. 중화권의 경제 동향과 중장기 전망
 2. 중화권 내 경제교류 관계 현황과 전망
 3. 중화권의 협력과 경쟁: 금융 및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중화권 경제 전망

1. 중화권의 경제 동향과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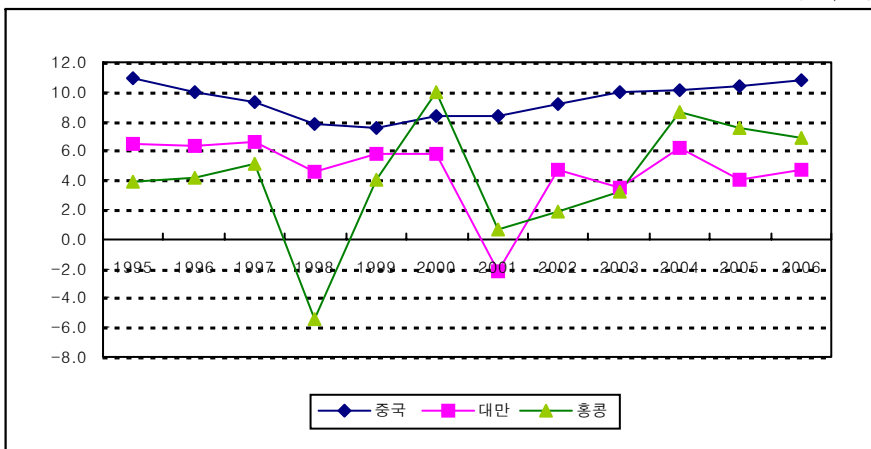
가. 중화권의 경제 동향

1) 중국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9%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며, 2003

■ 그림 2-1. 중화권의 GDP 성장 추이 ■

(단위: %)



자료: Global Insight.

년부터는 10%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1980년 3,034억 달러에서 2006년 2조 6,270억 달러로 증가하여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로 올라섰고, 1인당 GDP도 1980년 154달러에서 2006년에는 1,998달러로 증가하였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외무역 급증과 외국인직접투자 증가가 주도하여 왔다. 중국의 수출 및 수입 규모는 1982년 각각 223억 달러, 192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각각 9,693억 달러와 7,91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 3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대외무역 확대로 중국의 GDP 대비 대외무역의존도는 2001년 43%에서 2006년 6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대외무역의 확대와 함께 중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온 원동력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982년 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695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는 영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한 이유는 글로벌화와 다국적 투자경영의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국제 분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다국적기업이 중국의 저비용 경쟁력과 거대한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고정자산투자 역시 중국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왔으나 2003년 후반기부터 과잉투자에 따른 경기과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통화량 및 대출규모 억제, 지급준비율 인상, 금리인상 등을 골자로 한 경기진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투자과열에 따른 과잉생산 문제와 소비격차 확대 및 농촌소비 둔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진작 정책을 통한 소비수요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 대만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대만경제는 1950년대 공업발전과 1960~1970년대 사이 수출 지향적 가공조립산업의 발전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이루었다. 1980년대부터는 임금상승과 환율강제로 전자 및 석유화학 등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을 발전시켜 세계 최대의 컴퓨터 관련제품의 생산지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반도체와 LCD 산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 경제는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2000년 기간에도 5% 내외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1년에는 급격한 경기침체로 -2.2%의 성장률을 보이기도 하였다(그림 2-1 참고). 그러나 이후 대만은 WTO 가입과 시장개방, 경제 자유화 정책 추진, 산업구조조정 실시,¹⁾ 하이테크 산업 육성, 수출호조 등으로 평균 4%대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오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대만경제는 수출과 외국인투자유치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등 내수경기는 저조한 현상(外熱內冷)을 보였으나, 2007년부터는 수출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민간소비 회복 등 내수부문의 성장이 제고되는, 보다 균형 잡힌 성장세(外溫內溫)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 홍콩

홍콩은 싱가포르, 대만, 한국과 함께 저임금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경제발전을 시작했으나, 싱가포르, 대만과 한국이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반해 홍콩은 서비스 산업 위주²⁾로 경제 발전을 해오고 있다.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홍콩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조류독감 발생, 그리고 사스(SARS) 발생 등으로 경제성장 추이의 기복이 심하였다(그림 2-1 참고). 1997년 하반기와 이듬해 아시아 금융위기 및 조류독감의 강타로 1998년 경제성장률이 -5.5%로 추락했다. 또한 2003년 홍콩을 덮친 사스도 경제에 큰

1) 대만은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2년에 2002~2007년간 국가발전계획인 'Challenge 2008'을 발표하였다. 'Challenge 2008'에서는 최소 15개 이상의 세계 제일 최첨단 기술의 개발, 유명 브랜드 개발, R&D 투자의 확대(GDP의 3%로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대만 정부가 육성하고자 한 산업은 'two trillions and the twins stars'이다. 'Two trillions'는 반도체와 TFT LCD 산업으로 연간 생산량(2006년 기준)이 1조 대만달러(약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며, 'the twins stars'는 디지털 콘텐츠(디지털 게임과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와 바이오산업을 의미한다.

2)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물류·금융·관광 서비스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8.6%, 12.7%, 그리고 3.2%(2005년 기준)이다. 이 외에 전문 서비스 및 기타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도 10.6%를 차지하고 있다.

■ 표 2-1. 중국, 대만, 홍콩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

국가	항목	단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중국	GDP 성장률	%	10.9	8.4	8.3	9.1	10.0	10.1	10.4	10.7
	명목 GDP	십억 달러	728	1,198	1,325	1,454	1,641	1,932	2,225	2,627
	1인당 GDP	달러	601	946	1,038	1,132	1,270	1,486	1,702	1,998
	CPI	%	17.1	0.4	0.7	-0.8	1.2	3.9	1.8	1.5
	공업생산 증가율	%	16.1	11.2	9.9	12.9	17.0	16.2	16.0	16.2
	소매판매 증가율	%	26.8	9.7	10.1	11.8	9.1	13.3	12.9	13.7
	수출 증가율	%	24.9	27.9	6.8	22.4	34.6	35.4	28.5	27.2
	수입 증가율	%	15.5	35.2	8.1	21.3	39.8	35.8	17.6	19.7
	FDI 유입	백만 달러	37,521	40,715	46,878	52,743	53,505	60,630	72,406	
대만	GDP 성장률	%	6.5	5.8	-2.2	4.6	3.5	6.2	4.1	4.7
	명목 GDP	십억 달러	274	321	292	298	306	332	355	365
	1인당 GDP	달러	12,905	14,520	13,096	13,294	13,606	14,695	15,678	16,036
	CPI	%	3.7	1.3	0.0	-0.2	-0.3	1.6	2.3	0.6
	공업생산 증가율	%	4.7	6.9	-7.8	7.9	7.1	9.8	4.6	6.2
	소매판매 증가율	%	#N/A	#N/A	#N/A	#N/A	#N/A	#N/A	#N/A	#N/A
	수출 증가율	%	20.2	22.7	-16.9	7.1	11.3	21.1	8.8	12.8
	수입 증가율	%	21.4	26.7	-23.0	4.4	13.2	32.2	8.6	11.0
	FDI 유입	백만 달러	1,559	4,928	4,109	1,445	453	1,898	1,625	
홍콩	GDP 성장률	%	3.9	10.0	0.6	1.8	3.2	8.6	7.5	6.9
	명목 GDP	십억 달러	144	169	167	164	158	166	178	190
	1인당 GDP	달러	23,429	25,316	24,802	24,273	23,541	24,444	26,095	27,677
	CPI	%	9.0	-3.7	-1.6	-3.0	-2.6	-0.4	0.9	2.0
	공업생산 증가율	%	N/A	N/A	N/A	N/A	N/A	N/A	N/A	N/A
	소매판매 증가율	%	4.7	3.8	-1.2	-4.1	-2.3	10.8	6.8	7.3
	수출 증가율	%	#N/A	16.0	-5.8	4.9	12.1	15.9	11.2	9.7
	수입 증가율	%	#N/A	18.6	-5.5	3.1	12.2	17.0	10.2	11.6
	FDI 유입	백만 달러	6,213	61,924	23,777	9,682	13,624	34,032	35,897	

자료: Global Insight.

타격을 주어 그 해 실업률이 8%로 치솟았다.

그러나 2003년 6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경제무역관계긴밀화협정(CEPA)을 체결한 이후 홍콩 경제 성장률은 반등하여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7%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03년 이후 CEPA 체결과 개인여행허가 등으로 중국과 홍콩 간의 실물경제교류가 촉진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2006년 처음으로 홍콩을 국가 5개년 개발계획에 편입시켜 범주강삼각지역(泛珠江三角區)³⁾과의 경제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1997년 중국으로의 홍콩 반환 이후 중국의 간섭으로 인한 경제자유도 하락을 우려해 홍콩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여전히 홍콩은 매력적인 FDI 투자처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⁴⁾ 또한 반환 초기 중국의 통제로 홍콩의 금융산업이 시들어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2006년 홍콩 증시는 412억 달러(약 38조 4,000억 원)의 자본을 조달해 경쟁도시인 런던과 뉴욕의 기업공개 규모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홍콩 금융시장은 중국을 배경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고 있다.⁵⁾

나. 중화권 경제협력의 도전 과제와 대만·홍콩의 역할 변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성취한 고도성장은 중화권 형성의 강한 추진력이 되었지만, 대만과 홍콩에게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중국의 고도성장전략이 대외지향적 전략으로 대만, 홍콩의 발전전략과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점은 세계의 공장 중국의 부상으로 대만·홍콩 기업의 중국 진출이 확대되면서 제조업의 상당부분이 중국으로 이전하고 국내

3) 범주강삼각지역은 푸젠(福建), 장시(江西), 후난(湖南), 광둥(廣東), 광시(廣西), 하이난(海南), 쓰촨(四川), 구이저우(貴州), 윈난(雲南) 9개 성과 홍콩, 마카오 2개 특별행정구를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4) 2005년 홍콩의 FDI 유치 순위는 아시아 2위, FDI 유입량은 전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

5) 2006년을 기준으로 홍콩 증시에는 350여 개의 중국기업이 7,000억 달러를 넘는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 홍콩 증시에서 이루어진 신규 기업공개 물량 가운데 중국 본토기업의 비중은 92%에 달했고, 2006년에는 홍콩 발행 H주 시장에 중국 공상은행, 중국은행과 초상은행(招商銀行)이 상장되었으며, 이보다 먼저 건설은행과 교통은행이 상장되었다.

투자가 부진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과 부상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에 대만과 홍콩이 어떻게 대응하여 왔으며 그로 인해 중화권의 경제협력과 대만 · 홍콩의 역할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대만의 산업공동화와 대응전략

가) 대만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대만은 1960년대에 공업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1, 2, 3차 산업별 GDP 비중을 살펴보면, 21.1 : 23.0 : 55.9에서 1973년 10.3 : 35.6 : 54.1로 변화하여 농업의 비중이 절반으로 줄고 공업, 특히 제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해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경공업 위주의 제조업 체제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제1차 석유파동으로 대만의 제조업 구조는 점차 중공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조정되었고, 1986년 공업의 비중이 39.4%였으며, 이 가운데 제조업은 32.7%를 차지하면서 제조업 비중이 최고점에 이르렀다. 1970년대 중반 노동집약형 경공업에서 중화학 및 자본 ·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전환되어 1988년부터 중공업의 생산총액이 제조업 내 중화학공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의 50%를 넘어섰으며, 기술집약형 산업의 수출 비중도 제조업 수출 총액 비중의 60.3%를 기록하였다. 이후 제조업의 비중은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나 노동생산성이나 경쟁력은 제고되었고, 특히 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다. 서비스 산업 비중 역시 상승하여 2001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섰고 2005년 73.3%에 달해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요약하면 대만의 산업구조는 공업화 과정 중에 순조롭게 고도화되어 농업 위주에서 노동집약적 경공업으로, 이후 중화학공업 및 자본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현재는 지식집약형산업과 전자 · 정보통신 산업 중심의 생산구조로 고도화되고 있다.

나) 산업공동화(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대만 내 논의

1980년대 중반 이후 GDP와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공업, 특히 제조업의 비

중이 줄어들고, 많은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동남아시아 및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대만의 실업률이 상승하자 대만 내에서는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표 2-29 참고). 이러한 수치상의 변화로 제조업이 공동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GDP의 구조가 변화하고 첨단기술을 응용한 기술집약적 제품이 주력 수출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도 발전되는 등 대만 경제의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공동화보다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대만 내 전문가들이 산업구조 고도화에 무게를 실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87년 이후 GDP 및 고용자 수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었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중공업 비중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화학산업 및 기술집약형 제조업의 비중은 모두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어 제조업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었다(표 2-2 참고). 1987~2005년 사이 제조업의 1인당 GDP 성장률은 4.2%로 서비스 산업의 3.7%보다 0.5%포인트 높았다. 특히 2000~2005년 사이 제조업의 1인당 GDP 성장률은 3.28%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 산업은 1.07%를 기록하였는데, 이

■ 표 2-2. 산업공동화 관련 지표 ■

(단위: %)

연도	1986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실업률		2.9	1.7	1.8	3.0	4.6	5.2	5.0	4.4
대중 투자/ 전체 해외투자	-	9.5	44.6	33.9	38.8	53.3	53.7	67.2	71.1
GDP 내 제조업 비중	32.6	27.5	24.0	24.0	22.7	22.9	23.8	24.6	25.1
전체 고용 내 제조업 비중	34.1	32.0	27.1	28.0	27.6	27.1	27.1	27.3	27.4
중공업/ 전체 제조업 생산액	47.0	54.3	652.5	75.1	74.8	76.8	78.4	80.8	81.9
기술집약산업/ 전체 수출액	53.9	59.9	69.9	79.0	78.7	80.6	81.9	83.8	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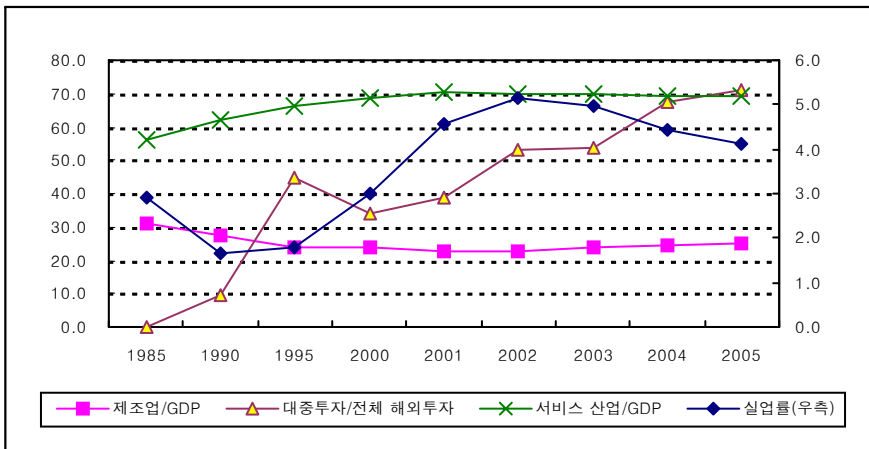
자료: 經濟部統計處「工業生產統計」; 財政部統計處「進出口貿易統計」; 行政院主計處「薪資與生產力統計」

는 제조업 내부의 고도화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즉 정밀기기, 전자부품 등의 하이테크 제조업의 성장이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⁶⁾ 따라서 대만의 경제발전에서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실업률의 경우도 GDP에서 차지하는 대만의 제조업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1985~95년 사이⁷⁾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2-2 참고). 대만의 실업률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대만의 대중 투자가 급증한 데서 주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실업률은 2002년 5.2%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대중 투자 비중은 200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실

■ 그림 2-2. 산업공동화 관련 지표 변화 추이 ■

(단위: %)



자료: 經濟部統計處「工業生產統計」; 財政部統計處「進出口貿易統計」; 行政院主計處「薪資與生產力統計」

6) 예컨대, 1999~2005년 사이 제조업 1인당 취업자 산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3.7%를 기록하였는데, 이 가운데 광학 의료기기와 석유산업이 모두 10.6%를 기록하였고 전자 부품제조업과 자동차 부품이 각각 9.4%와 4.4%를 기록하였다. 반면 가구산업, 방직산업과 같은 전통 제조업의 경우 -4.7%와 -4.3%를 기록하였다. 대만 행정원 주계처(통계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1~2005년 제조업 경쟁력 평가에 있어서도 정밀기기, 광학기기, 전자부품 제조업, 운수 제조업 등이 상위 1~4위를 차지하였다.

7) 1987~1995년 사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연평균 4.4% 감소하였다.

업률 상승이 전적으로 대중 투자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보다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고용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실업률이 5%를 넘어선 2002년은 대만 정권이 교체된 시기여서 대만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의 실업률은 2007년 상반기 3.9%를 기록하고 있어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의 고용흡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만의 해외투자 확대 역시 산업공동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제조업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대만에서는 1980년대 대만달러의 평가절상,⁸⁾ 노동비용 상승, 토지자원의 한계, 환경보호의식 대두 등으로 대만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시작되었다. 초기 해외투자는 주로 비용절감을 위해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집중되었다. 1987년 대만 정부가 계엄령을 해제하고 대만인의 중국 본토 친척 방문을 허용하면서, 대만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시작되었다. 대만의 대중 투자는 1990년부터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2001년 말에서 2002년 초 중국과 대만이 WTO에 가입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이후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대중 투자의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대만 전자산업 대기업의 중국 투자가 활성화되는 1996년 이후 대중 투자의 규모가 커지고 투자항목이 하이테크 산업으로 전환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 물류, 백화점, 소매 등 서비스 산업의 대중 투자가 시작되면서 대만의 실업률은 1995년 1.8%에서 2002년 5.2%로 급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만의 해외투자, 특히 대중 투자 확대가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지만, 이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이 확대되었고 이는 대만의 GDP 성장, 수출 증가, 산업구조 개선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생산구조의 중심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고 서비스 산업 역시 발전하고 있어 해외투자로 인해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⁹⁾

8) 달러에 대한 대만달러는 1986년 9.18%(1달러=35,952대만달러), 1987년 19.58%(1달러=28,912대만달러) 평가절상되었다.

다) 소결

현재 대만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산업이 주도하는 경제체제로 변환 중이다. 산업구조상에서 대만은 GDP 내 3차산업의 비중이 이미 70%를 넘어서 선진국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취업인구 비중은 58.3%로 선진국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서비스 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서비스 산업이 무형적 · 지식 집약적 · 자본집약적 특성이 강한 데다, 각종 법규 마련이 수반되어야 하는 까닭에 서비스 산업이 일시에 대만 경제의 발전을 주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조업, 특히 하이테크 제조업은 당분간 대만의 발전을 주도하는 주요 산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결합한 생산자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병행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만의 산업발전 방향은 크게 하이테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조업의 경우 중국의 제조업 발전과 추격을 고려해 OEM 생산방식을 지양하고 연구개발 능력 강화와 브랜드 창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하이테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안간 수직 분업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이테크 기업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중국의 기술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현재 제조업보다 낮은 산업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내부구조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광고 · 법률 컨설팅 · 인력자원 관리 등 자본 · 지식 집약형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의 육성과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산업, 대만 관광수요에 대비한 관광산업 등을 육성해 나갈 것이다. 한편 세계화

9) 대만의 실업률 증가 시기인 1994~2004년 사이 매년 노동인구는 12.5만 명 증가하였고, 취업인구는 약 10만 명이 증가하였다. 증가한 취업인구 10만 명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산업은 12.25만 명, 공업 1.17만 명(제조업은 2만 명) 증가하였고, 농업은 3.45만 명 감소하여 산업별 취업 공헌율은 -34.3% : 11.4%(제조업 19.7%) : 122.9%임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취업인구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총 취업인구 구조에서 여전히 정(正)의 공헌을 하고 있어 1990년대 실업률 증가는 제조업의 위축 혹은 산업공동화에서 왔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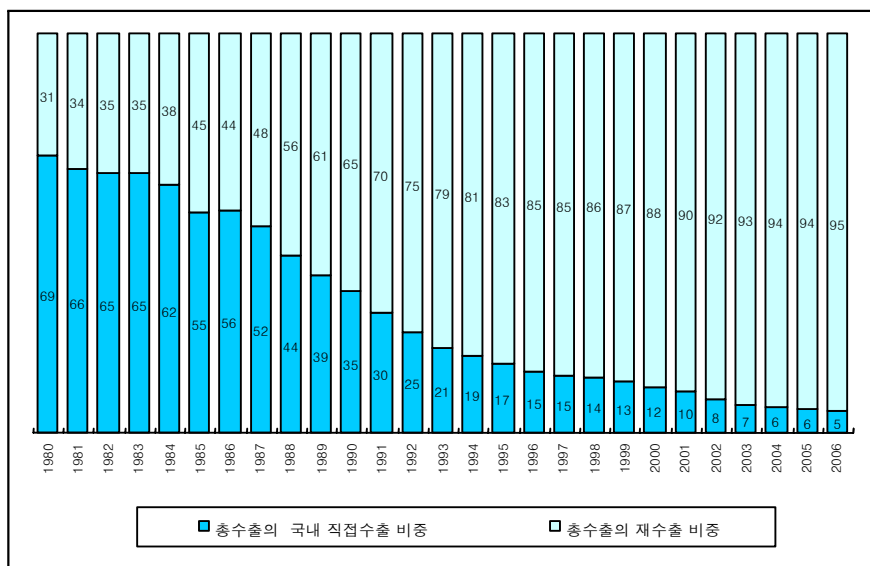
추세에 대비해 대만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동아시아 경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과의 분업 및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양안 공동시장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만 기업들이 지역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고급인력 수요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력, 특히 중국의 인력을 활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홍콩의 산업공동화 대응전략

가) 생산시설의 이전과 변화된 무역구조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홍콩의 제조업자들은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고 수출을 위한 중국산 제품을 아웃소싱하는 등 생산활동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

그림 2-3. 1980~2005년 홍콩의 총수출 구성



자료: Hong Kong SAR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다. 제조원가 절감, 원자재 수급과 관련된 이 같은 역외 생산기지 이전으로 중국 대륙은 홍콩 수출품의 주요 생산기지가 되었다. 1980년대 제조원가 상승과 인력시장의 위축으로 홍콩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자 이러한 경향은 더욱 본격화되었다. 중국에 원자재와 반제품들을 수입하여 최종 생산품을 홍콩으로 들여와 재수출하는 무역구조가 성립되어 국내 직접수출을 대체하게 되었다.

제조업 부문의 해외생산 확대로 국내 공장들이 폐쇄되어 1989년에 5만 566개였던 공장이 2006년 3월에는 1만 5,332개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사업을 중지한 것은 아니며, 홍콩 내에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생산활동을 경영·조정 및 지원하게 되었다. 동시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의 자원 공급이 확대됨으로써 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무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로써 1989년에서 2006년 사이에 4만 4,810개의 무역회사가 설립되었다.

홍콩의 무역발전국(Trade Development Council)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 9월 현재 조사대상 홍콩 기업 중 90%가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하고 있었으며, 지역은 광둥성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항만 시설이 급속하게 확대되어 감에 따라 홍콩 기업들은 홍콩을 거치지 않고 중국산 제품들을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TDC 조사에서 이러한 직접수출이 1997년과 2000년에 각각 34%와 39% 수준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50%로 증가하였고 대부분의 수출시장은 미국과 EU 15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생산공정 재배치에 따른 공동화 논의 전개

생산 공정이 재배치되고 역외무역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 때문에 홍콩 산업의 ‘공동화 현상(hollowing out)’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배치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홍콩의 지역경제와 무역서비스 발전에 유익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상당 부분의 역외무역 활동이 여전히 홍콩을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서비스 수요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은 홍콩이 비즈니스 허브로서 갖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홍콩을 거치지 않고 역외무역을 하는 홍콩 기업들조차도 상당수 무역금융이나 서비스 측면에서는 홍콩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입 무역 서비스와 관련한 공식통계에 따르면 홍콩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수년 간 증가일로에 있으며 무역지원 서비스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과정의 중국 이전을 공동화로 인식하기보다는 홍콩이 글로벌 가치 체인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로 인식해야 한다.

역외무역의 급속한 증가는 화물선적의 다변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홍콩의 재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홍콩 항만설비는 타 지역에 비해 통합적인 선적과정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선적 일정을 잡기가 편리하고 루트 선택폭이 더욱 다양하다. 그러나 선적 비용에 있어서는 중국이 높은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을,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는 홍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홍콩은 금융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콩의 기업들은 전반적 매니지먼트와 계획을 위한 본사를 홍콩에 두는 경향이 있다. 또한 판매와 마케팅 및 무역 금융/보험 업무, 무역서류 준비업무에 있어서도 홍콩이 우위를 갖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제조, 품질 제어 및 생산 매니지먼트와 코디네이션에서 강점을 가진다. 따라서 양자간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홍콩은 비즈니스 업무에 있어서 홍콩의 경제정책과 시스템, 지원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기업에 편의를 제공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낮고 간단한 세제 시스템, 법제도, 비즈니스의 통합성, 수출입 정책과 통관시스템, 인프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금융서비스의 편리한 제공, 해외 시장과의 네트워크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에서 이러한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반면 중국은 내수시장의 규모, 노동인력의 임금, 토지 사용, 원자재와 부품 조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홍콩 기업들은 저비용 생산기지를 중국에 둬으로써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홍콩에 매니지먼트와 플래닝을 위한 본사를 둬으로써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여 홍콩 기업

들은 소비재 경공업 제조영역의 경쟁에서 일찍이 우위를 점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중국과 홍콩 사이에 강한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홍콩 기업의 생산 관련활동이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 이동한 것에 대하여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홍콩의 생산설비가 중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실업과 자본 유출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아무리 경제가 호황이라도 서비스업의 고용이 제조업에서의 고용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변동성이 심해서 경제가 악화될 때 실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제조업 분야는 한 경제의 대들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홍콩이 서비스 중심의 경제라는 사실은 불변이지만, 이러한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강력한 기반도 역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콩은 자본과 기술의 흐름이 통과하는 효율적인 허브가 되기 위해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범주강삼각주(PRD: Pan Pearl River Delta) 지역에서 홍콩기업이 생산을 하는 구조는 Made by Hong Kong과 Made in the PRD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홍콩이 주요 생산서비스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PRD 지역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만일 이러한 형태가 홍콩 제조업의 전부를 차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홍콩의 제조업 발전에는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홍콩은 중국과 독립된 경제체제로서 존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균형을 이룬 경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다. 이에 중국으로 이전한 제조업 설비의 일부가 다시 홍콩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홍콩의 지가와 임금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반면 중국 일부 지역의 사업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중국에 진출한 홍콩기업들도 내지로 이동하거나 다른 해외기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CEPA의 발효로 홍콩 제품의 수입관세 철폐 결과, 홍콩에서 제조된 제품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2005년 중국의 WTO 양허안 이행에 따른 쿼터제 철폐로 인해 중국 내에 공장을 운용하는 매력이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홍콩에 새로운 기반을 다질 제조업 분야를 선택하고 육성해야 하며, 그러한 산업들은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여 좋은 품질과 디자인의 수출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부문이어야 한다.

이처럼 홍콩의 재산업화 혹은 신공업화(neo-industrialization)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먼저 이를 직접 계획·관장할 정부기구를 만들고, 전문가들을 양성하며 R&D 지출을 늘리는 한편, 공업용지와 공장부지의 사용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하고 전기가격을 인하하며 PRD와의 생산 코디네이션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중화경제권의 형성과 홍콩과 대만의 역할 조정

중화경제권은 활발한 무역과 안정적인 자본 공급, 활발한 해외투자 유치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역동적인 경제권이라 할 수 있다. 중화경제권의 형성은 이 지역이 광대한 시장을 갖추었고 교역규모도 세계 최고라는 점, 또한 가장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 경제성장이 가장 빠르며 향후 경제성장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후술하겠지만 중국의 고도성장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전망이 실현될 경우, 중국의 부상과 함께 형성된 중화경제권 내 중국, 홍콩, 대만 3개 지역의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의 중국 반환과 중국-홍콩 간 CEPA 체결 이후 홍콩 경제와 중국 경제통합이 가속화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경제의 성장 및 부상으로 인해 홍콩은 물론 대만이 중국의 흡인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중화경제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홍콩은 향후에도 그 역할과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우선 홍콩은 중계무역지로서 자유무역시대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중국과 홍콩 간 경제일체화가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졌으며, 중국과 대만의 중계무역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성숙한 금융시장인 홍콩이 중국 본토에 다원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중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시

스텝의 개혁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자본은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투자를 실현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화 경제권의 R&D 센터, 특히 하이테크 산업의 R&D 센터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지만 중국으로의 기술투자가 활발한 상황이어서 대만은 중화경제권 내에서 R&D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지역 중 하나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만, 홍콩 3개국(지역)이 고른 발전을 통해 중화경제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분명 과제와 한계도 존재하고 있다. 우선 3개국 간에 경제발전의 수준과 목표, 무역자유화의 범위와 정도, 경제제도 등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운용에 아직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남아있고, 경제는 선진국의 범주에 들어섰지만 정치적 혼란이 변수인 대만,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개방된 경제 중 하나인 홍콩이 진정한 경제통합을 이루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양안간 정치적인 긴장관계도 중화경제권 발전의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중화경제권은 제도적 통합으로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경제적 장애가 제거되어 세계경제를 주도할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이다. 3개 지역 모두 WTO 회원국이 되었고 중국이 세계적으로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화권은 세계적으로 무역교섭에 있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만과 홍콩의 유기적인 상호협력 관계는 경제블록을 형성하여 타 지역과 주변국에 대해 배타적 작용을 할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중화경제권 형성에 대해 적절한 참여의 기회를 마련함¹⁰⁾과 동시에 다자간 무역체제 및 지역경제협력 체제에서 중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0) 기획의 대표적 예시는 이들 지역과의 FTA 추진을 위한 노력일 것이다. 홍콩과 대만 중 중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 홍콩이라는 점에서 홍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도 중요할 것이다.

다. 중화권의 중장기 경제발전 목표와 전망

1) 중국의 중장기 비전과 전망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은 이미 불가역적인 대세로 정착되었으며 갈수록 심화·확대될 전망이다. 후진타오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00년 대비 4배로 늘려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장기적인 경제비전을 제시하였다.¹¹⁾ 이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매년 7% 이상의 성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 계획이 실현되면 1인당 GDP 역시 2020년까지 3,000달러, 2030년까지 8,000달러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비전에 대해 중국의 국책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학자들은 대부분 2001~2020년 기간 동안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컨대 2007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과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이 함께 작성한 중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11·5 기간(2006~2010년) 동안 중국 경제는 여전히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며 연평균 8.9% 내외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1·5 기간 이후에는 성장속도가 다소 완만해져 2016~2020년에는 7%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성장률의 하락은 주로 인구 노령화, 사회보장제도 확충, 재정정책 변화 등에 따

■ 표 2-3. 2002~2020년 경제성장 전망(기준 시나리오) ■

(단위: %)

		2002~2005년	2006~2010년	2011~2015년	2016~2020년	2002~2020년	2006~2020년
GDP		10.1	8.9	8.3	7	8.4	8.1
성장 원천	노동력	0.4	0.4	0.2	0	0.2	0.2
	자본	7.7	6.5	6.1	5	6.2	5.9
	TFP	2	2	1.9	2	2	2

자료: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2007).

11) 중국은 종합국력 신장을 위한 3단계 발전전략을 이미 1980년대에 세웠다. 즉 온포(溫飽)단계 진입 → 소강사회 실현 → 공산당 창당 100주년 해인 2020년에는 GDP를 2000년의 4배로 끌어올리고 → 건국 100주년인 2050년에 국가 현대화를 완성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라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자본투자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저축률이 예상보다 빨리 하락하고 생산성 향상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성장률이 상당히 크게 떨어지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동시에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15년까지 7%대의 성장이 가능하고 2010년 이후에도 5~6%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는 주요 개발도상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매우 높은 성장속도이다.

■ 표 2-4. 2002~2020년 평균 GDP 성장률 ■

(단위: %)

	2002~2005년	2006~2010년	2011~2015년	2016~2020년	2002~2020년	2006~2020년
기준 시나리오	10.1	8.9	8.3	7	8.4	8.1
낙관 시나리오	10.1	9.5	8.8	7.6	8.9	8.6
비관 시나리오	10.1	8.4	7.1	5.8	7.6	7.1

자료: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2007).

세계 주요 연구기관과 전망기관들도 중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경기호황이 이어지면서 경기과열에 이은 경착륙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대부분의 기관들은 단·중기적으로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찍이 세계은행(“China 2020”, 1997)은 중국 경제가 1996~2020년 연평균 6.6%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았고 미국 NIC(“Global Trends 2015”, 2000)도 2015년까지 연평균 7%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Goldman Sachs가 BRICs와 G6의 경제성장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2015년까지 BRICs 중 중국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Global Insight도 중국이 향후 10~20년간 적어도 6%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

■ 표 2-5. 세계 주요기관의 중국 장기 성장률 전망 ■

(단위: %)

	2000~2005년	2005~2010년	2010~2015년	2015~2020년	2020~2025년	2025~2030년
Goldman Sachs	8.0	7.2	5.9	5.0	4.6	4.1
Global Insight	8.6	7.0	6.1	6.0	5.9	-

자료: Goldman Sachs(2003); Global Insight(2007).

였다. Global Insight 자료를 토대로 2020년까지 전망해본 중국경제지표의 예상치는 [표 2-5]와 같다. 향후 20년간 중국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5%대로 저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또한 북경 올림픽과 상하이 박람회 등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있어 중국은 우선 2010년까지 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그 이후 2020년 까지는 경제의 질적 성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2-6. Goldman Sachs의 BRICs 장기 성장률 전망 ■

(단위: %)

	중 국	인 도	브라질	러시아
2000~2005년	8.0	5.3	2.7	5.9
2005~2010년	7.2	6.1	4.2	4.8
2010~2015년	5.9	5.9	4.1	3.8
2015~2020년	5.0	5.7	3.8	3.4

2) 대만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망

대만은 현재 국제적 아웃소싱의 증가, 인구 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 발전의 가속화, 에너지 및 자원 부족 현상의 심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대만 내 경제 전문가들은 대만을 향후 10년 내에 ‘전 세계 고부가가치 서비스 센터’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들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대만이 경제발전의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해 글로벌 아웃소싱에 적극 참여하고, 전세계 인재 활용을 통해

‘혁신’을 이루며, 세계적 브랜드 육성으로 경제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혁신·가치를 통한 세계적 서비스센터 건설’이라는 경제발전 비전은 뒤집어 생각하면, 대만이 ‘개방 확대·혁신능력 제고·가치 극대화’ 등을 국가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제약요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대만 정부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서 지난 2006년 7월 ‘2015년 경제발전 비전(2015年 经济发展远景)’을 발표하여 2015년까지 투자를 대폭 늘려 연평균 5%의 경제성장과 1인당 GDP 3만 달러 달성(2009년까지 2만 달러)이라는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2015년 까지 대만의 발전목표는 다음과 같다.

■ 표 2-7. 대만의 발전 목표 ■

(단위: %)

연도		2005년	2009년	2015년
1인당 GDP(달러)			20,000	30,000
산업구조 (%)	농업	1.7	1.5	1.2
	공업	25.0	24.1	22.7
	제조업	21.4	20.8	20.0
	서비스 산업	73.3	74.4	76.2
실질성장률* (%)	농업	-8.1	1.0	1.0
	공업	5.9	4.2	3.9
	제조업	6.5	4.9	4.3
	서비스 산업	3.5	5.5	5.5

주: * 2009년 실질성장률은 2006~2009년, 2015년 실질성장률은 2006~2015년의 연평균 성장률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발전 방안도 마련되었는데, 이는 크게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과 ‘산업발전의 새로운 기반 창출’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대만 정부는 토지·노동력·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부터 종합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대만경제 및 산업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기

반을 다질 방침이다. 둘째, 산업발전의 새로운 기반 창출은 산업별 발전전략 및 목표설정 이외에 신흥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산업구조 고도화에서 소외될 수 있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함께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 경제부는 경제발전을 선도할 신흥산업으로 인공지능 로봇, Digital Alliance, 소프트웨어, 원격의료 산업, 건강 관련산업 등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산업고도화를 위해 ‘산업고도화 촉진 조례(促進產業升級條例)’를 제정하여 지속적인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산업별 지원보다는 기능별 지원(예컨대 연구개발 활동, 자동화 설비 개발,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발전전략 달성에서 대만이 극복해야 할 여러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대만 경제의 주요 현안들은 주로 중국과 관련된다. 경제의 중국의존도 심화현상과 IT 산업에서의 중국의 기술추격, 중국경제 부상으로 인한 대만 경제의 고립화 등이 그것이다. 대만의 전체 해외투자 중 70%, 전체 수출의 약 1/3이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대만의 GDP 성장, 수출확대, 산업구조조정¹²⁾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대만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대만 제조업 공동화와 구조적 실업 등에 대한 토론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중국정부의 지원하에 중국의 상당수 IT 기업들이 OEM·ODM 생산능력을 갖추에 따라 대만 IT 기업의 고객기업 수도 줄어들고 있어 중국으로 인해 대만의 IT 산업은 변화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지역경제협력으로부터 대만의 고립은 단순히 대만의 산업발전과 수출에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물류산업,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해외진출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만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¹³⁾

12)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2006년을 기준으로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44%, 공업은 24.99%, 농업은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13) 예컨대, 외자기업의 대만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다국적기업은 대만에 설립한 구매 센터나 아태지역 영업 본부를 중국이나 홍콩으로 이전하고 있다. 또한 대만 주식시장의 불황으로 대만

따라서 대만의 중장기 경제성장은 대중국 의존도 심화로 인한 문제 해결, 고부가가치 창출의 지식경제로의 전환, 경제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협력 참여를 위한 우호적인 양안관계 설정 등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만의 중장기 경제성장에 대해 Global Insight는 2013년까지 연평균 약 4.7%, 그 이후로는 약 2.5~4%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중장기 경제성장 예상 지표는 표 2-8 참고).

3) 홍콩의 중장기 비전과 전망

홍콩은 그동안 중국 관문으로서의 지정학적 위치, 안정된 금융시스템, 세계적인 물류 및 통신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금융·비즈니스 중심지로 기능해왔다.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홍콩이 담당한 중계무역과 국제금융 중심지라는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환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홍콩의 중요한 지위는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다.

향후 경제발전에서 홍콩특별자치구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홍콩의 모든 정책 중 가장 우선시 하고 있다. 홍콩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홍콩을 아시아 경제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금융은 물론 물류·해운·관광 등의 분야를 더욱 강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홍콩-중국 경제무역관계긴밀화협정(CEPA)과 중국 남부 9개성과 홍콩, 마카오를 묶는 단일 경제권인 범주강삼각주를 이용하여 중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다국적 기업 혹은 해외로 나가려는 중국기업을 지원하는 교두보 역할도 견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홍콩은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1년)에서 홍콩의 금융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명시하였다. 중국은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콩 금융시스템을 활용할 필요성이 크며, 따라서 홍콩을 세계적 규모의 국제금융센터로

대기업들이 홍콩 상장을 추진하였으며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홍콩 주식에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표 2-8. 중국, 대만, 홍콩의 중장기 경제지표 전망 ▮

국가	항목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5년	2020년
중국	GDP 성장률	%	10,6	9,4	8,8	8,4	7,1	6,4
	명목 GDP	십억 달러	3,182	3,889	4,600	5,221	9,120	14,759
	1인당 GDP	달러	2,407	2,925	3,440	3,881	6,593	10,437
	CPI	%	3.1	2.8	3.0	2.8	2.9	3.0
	공업생산 증가율	%	16,0	12,9	11,3	10,5	9,2	7,6
	소매판매 증가율	%	15,3	14,7	14,2	14,0	13,6	13,3
	수출총액	백만 달러	1,161,535	1,361,269	1,523,854	1,773,603	3,485,973	6,442,654
	수출 증가율	%	19,8	17,2	11,9	16,4	13,6	12,5
	수입총액	백만 달러	946,327	1,181,079	1,395,071	1,665,951	3,441,865	6,559,625
	수입 증가율	%	25,9	24,8	18,1	19,4	14,8	12,5
무역흑자액	백만 달러	215,208	180,190	128,783	107,652	44,107	-116,971	
대만	GDP 성장률	%	4.0	4.8	5.3	5.1	3.7	3.1
	명목 GDP	십억 달러	378	413	459	513	806	1,145
	1인당 GDP	달러	16,564	18,003	19,956	22,199	34,034	47,295
	CPI	%	1.4	1.8	2.1	2.3	2.6	2.4
	공업생산 증가율	%	2.0	4.8	5.1	5.7	4.3	3.0
	소매판매 증가율	%	#N/A	#N/A	#N/A	#N/A	#N/A	#N/A
	수출 총액	백만 달러	239,153	260,317	284,601	309,617	411,464	490,348
	수출증가율	%	6,9	8,8	9,3	8,8	4,5	3,1
	수입총액	백만 달러	28,408	29,803	30,343	29,821	26,395	17,805
	수입 증가율	%	7.5	7.2	6.6	5.8	3.3	1.6
무역흑자액	백만 달러	210,745	230,514	254,258	279,796	385,069	472,544	
홍콩	GDP 성장률	%	5.3	5.9	6.1	5.9	4.3	3.9
	명목 GDP	십억 달러	201	217	236	255	364	499
	1인당 GDP	달러	29,066	31,189	33,548	36,025	49,625	66,223
	CPI	%	1.9	2.6	2.5	2.9	2.6	2.4
	공업생산 증가율	%	#N/A	#N/A	#N/A	#N/A	#N/A	#N/A
	소매판매 증가율	%	6.3	6.8	8.1	7.6	5.5	4.2
	수출 총액	백만 달러	343,489	377,195	415,081	451,793	639,755	842,319
	수출증가율	%	8,1	9,8	10,0	8,8	6,5	5,1
	수입총액	백만 달러	-15,245	-14,226	-14,459	-16,071	-15,996	-17,121
	수입 증가율	%	-7.6	-6.5	-6.1	-6.3	-4.4	-3.4
무역흑자액	백만 달러	358,733	391,420	429,540	467,864	655,751	859,441	

자료: Global Insight.

육성하여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더욱 제고할 것이다.¹⁴⁾

한편 홍콩은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인식되었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재양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토지 이용면에서는 ‘특별공업용지’를 조성할 예정인데, 이는 주로 공업원구(클러스터), 과학원구, 그리고 비즈니스 상업지역 등을 의미한다. 홍콩은 이를 통해 과학기술 및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접 중국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각 대학에서의 전문 과학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산업과 더불어 무역 및 물류 · 해운 · 관광 등 서비스산업발전에 힘입어 향후 홍콩 경제는 5~6% 정도의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3월 홍콩정부는 2008~2011년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금융, 무역, 물류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제통합 진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실질 경제성장률을 연 4.5%(명목 경제성장률 연 6%)로 전망한 바 있다.

2. 중화권 내 경제교류 관계 현황과 전망

가. 중화권 내 무역협력 현황과 전망

1) 3국간 교역규모와 역내 교역현황

중국이 세계 3대 무역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중화권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다. 중국, 홍콩, 대만 3개국의 수출액은 1995년 4,342

14) 중국의 중앙정부 및 광둥성, 심천 등 홍콩과 인접한 지방정부는 중국과 홍콩의 협력수준 제고를 통해 대주강삼각주의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홍콩이 지니고 있는 회계, 광고, 관리 등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를 바탕으로 광둥성 기업(특히 민영기업)들이 국제경제체제로의 편입을 돕고, 광둥성 민영기업들은 홍콩 시장 상장을 통해 자본을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홍콩 유수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제휴 · 협력이 차이나 리스크를 극소화하고 실리는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홍콩을 국제금융 허브와 더불어 중국 대륙 공략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향후 우리의 과제라 할 것이다.

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1조 5,000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8.8%에서 12.9%로 높아졌다. 또한 3개국의 수입액은 4,285억 달러에서 1조 3,29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에서 10.9%로 높아졌다.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3국간 경제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역내 교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3국의 수출에서 역내 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1995년 1,456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4,324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역내 수입액도 1,147억 달러에서 3,03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화권의 수출과 수입에서 역내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역내 수출비중은 1995년 33.5%에서 2006년에는 28.6%로, 역내 수입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26.8%에서 22.8%로 낮아졌다.

중화권의 역내 교역흐름은 1995년에는 홍콩-중국, 홍콩-대만 간 교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6년에는 중국-홍콩, 중국-대만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었다. 역내 교역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6.9%에서 2006년에는 40.1%로 높아졌고, 홍콩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0%에서 36.9%로 높아졌다. 반면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이

■ 표 2-9. 중화권의 수출입 규모와 역내 교역 ■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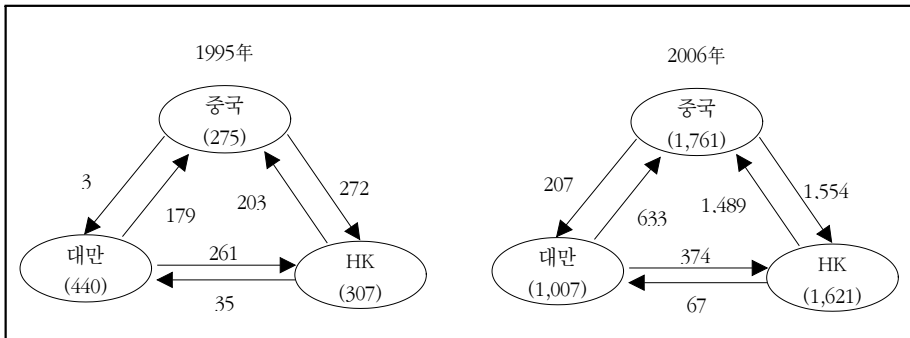
	수 출			수 입		
	대세계	역내 수출	비중(%)	대세계	역내 수입	비중(%)
1995년	4,342	1,456	33.5	4,285	1,147	26.8
2000년	5,998	1,819	30.3	5,785	1,511	26.1
2001년	5,797	1,787	30.8	5,523	1,460	26.4
2002년	6,614	2,128	32.2	6,167	1,657	26.9
2003년	8,130	2,554	31.4	7,734	1,908	24.7
2004년	10,352	3,167	30.6	10,016	2,335	23.3
2005년	12,503	3,681	29.4	11,428	2,658	23.3
2006년	15,101	4,324	28.6	13,292	3,032	22.8

자료: 각국의 무역통계를 기초로 계산함.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43.0%에서 22.9%로 하락하였다. 수출액을 기준으로 쌍무적인 교역 흐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홍콩 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6.8%에서 2006년에는 69.3%로, 중국-대만 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8%에서 19.1%로 높아진 반면, 홍콩-대만 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9.0%에서 10.0%로 대폭 하락하였다.

■ 그림 2-4. 중화권 역내 교역 흐름도 ■

(단위: 재수출 포함, 억 달러)



주: ()안은 역내에 대한 수출액임.

자료: 각국 무역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함.

2) 중국의 수출입

2006년 중국의 수출액은 9,693억 달러로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도 7,918억 달러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역대국이다. 중국의 교역 대상국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홍콩과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수출에서 홍콩과 대만에 대한 수출액은 1990년 275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1,76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중국의 수출에서 홍콩과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43.8%에서 18.2%로 하락하였고, 중국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1.3%에서 12.4%로 하락하였다.

표 2-10. 중국의 수출입 규모와 역내 교역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대세계 (A)	역내 (B)	B/A (%)	역내 교역 중		대세계 (C)	역내 (D)	D/A (%)	역내 교역 중	
				홍콩	대만				홍콩	대만
1990년	62,760	27,483	43.8	27,163	320	53,810	16,820	31.3	14,565	2,255
1995년	148,959	39,102	26.3	36,004	3,098	132,164	23,383	17.7	8,599	14,784
2000년	249,208	49,560	19.9	44,520	5,040	225,175	34,928	15.5	9,431	25,497
2001년	266,709	51,509	19.3	46,503	5,006	243,567	36,768	15.1	9,424	27,344
2002년	325,744	65,073	20.0	58,483	6,590	295,440	48,870	16.5	10,788	38,082
2003년	438,364	85,303	19.5	76,289	9,014	412,836	60,483	14.7	11,119	49,364
2004년	593,358	114,426	19.3	100,878	13,548	561,422	76,560	13.6	11,800	64,760
2005년	762,337	141,064	18.5	124,505	16,559	660,218	86,887	13.2	12,232	74,655
2006년	969,284	176,175	18.2	155,435	20,740	791,793	97,936	12.4	10,795	87,141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함.

3) 대만의 수출입

대만의 대외무역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0% 정도의 증가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지난해 대만의 수출총액은 2,240억 달러로 전년대비 12.9% 증가했고, 수입총액은 2,027억 달러로 전년대비 11.0% 증가해 2006년도에는 사상 최초로 수출 및 수입 총액이 각각 2,0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무역수지 흑자 역시 213억 달러로 전년대비 34.6% 증가하였다. 대만 수출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6.0%에서 2006년에는 28.3%로 높아졌으며, 여기에 홍콩을 포함할 경우 대만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대중국 수출이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에서 직교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서, 대만의 대중국 수출 중 홍콩을 경유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후반까지는 95%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 직교역으로 전환되면서 2006년에는 18.2%로 하락

하였다. 수입의 경우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2005년 이후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의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수출액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2006년 247.8억 달러/전체 수입의 12.2%)를 기록해 2006년도 기준으로 385.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 표 2-11. 대만의 수출입 규모와 역내 교역 ■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대세계 (A)	역내 (B)	B/A (%)	역내수출 중			대세계 (C)	역내 (D)	D/A (%)	역내수입 중	
				중국 (전체)	중국 (직수출)	홍콩				중국	홍콩
1995년	111,659	44,004	39.4	17,898	377	26,106	103,550	4,934	4.8	3,091	1,843
2000년	148,321	57,480	38.8	26,144	4,391	31,336	140,011	8,416	6.0	6,229	2,187
2001년	122,866	52,568	42.8	25,607	4,895	26,961	107,237	7,752	7.2	5,903	1,849
2002년	135,317	64,489	47.7	31,529	10,527	32,960	113,245	9,884	8.7	7,969	1,915
2003년	150,600	69,161	45.9	38,293	22,891	30,868	128,010	12,935	10.1	11,018	1,917
2004년	182,370	81,826	44.9	48,930	36,349	32,896	168,758	19,101	11.3	16,792	2,309
2005년	198,432	90,308	45.5	56,272	43,644	34,036	182,614	22,204	12.2	20,094	2,110
2006년	224,017	100,714	45.0	63,333	51,809	37,381	202,698	26,664	13.2	24,783	1,881

자료: 대만무역국 통계로부터 작성함.

4) 중계무역항으로서 홍콩의 역할 강화

홍콩은 세계 12대 수출국으로서 중국의 중계무역기지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콩의 수출에서 중국과 대만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8.9%에서 2006년에는 49.1%로 높아졌으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45.8%에서 53.4%로 높아졌다. 홍콩의 가장 큰 수출시장은 중국, 미국, EU, 일본이며 2006년을 기준으로 각국이 홍콩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7%, 15%, 14%와 15%이다.

표 2-12. 홍콩의 수출입 규모와 역내 교역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대세계	역내		역내수출 중		대세계	역내		역내수입 중	
		수출액	비중(%)	중국	대만		수출액	비중(%)	중국	대만
1990년	82,272	23,798	28.9	20,332	3,466	82,490	37,779	45.8	30,313	7,466
1995년	173,556	62,453	36.0	57,861	4,592	192,765	86,353	44.8	69,738	16,615
2000년	202,249	74,864	37.0	69,744	5,120	213,328	107,803	50.5	91,804	15,999
2001년	190,081	74,645	39.3	70,096	4,549	201,474	101,441	50.3	87,522	13,919
2002년	200,320	83,193	41.5	78,744	4,449	208,024	106,991	51.4	92,032	14,959
2003년	224,040	100,917	45.0	95,477	5,440	232,580	117,405	50.5	101,260	16,145
2004년	259,423	120,494	46.4	114,180	6,314	271,458	137,879	50.8	118,051	19,828
2005년	289,509	136,772	47.2	130,283	6,489	299,967	156,742	52.3	135,084	21,658
2006년	316,819	155,548	49.1	148,853	6,695	334,691	178,616	53.4	153,651	24,965

자료: 홍콩정청통계국으로부터 작성함.

특히 홍콩의 제조기반이 중국으로 이전되면서 중국에 대한 홍콩의 중계무역 기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홍콩기업의 중국 이전으로 인해 홍콩의 무역에서 중계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다. 홍콩의 수출에서 재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19.6%에 불과하였으나, 홍콩기업들이 중국을 가공무역기지로 활용하는 투자가 증가하면서 1988년에는 중계무역 비중이 50%를 넘어섰으며, 2006년에는 94.4%에 달했다. 반면 홍콩산 제품의 수출액은 1990년대 전반에는 300억 달러 내외에 달하였으나 2006년에는 173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홍콩을 통한 중계무역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중국으로 역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홍콩의 재수출 상품의 원산지를 국별로 살펴보면 전체 재수출용 상품의 62.8%로 중국산이며, 이 외에 대만산이 7.2%, 일본산이 8.1%, 한국산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재수출의 대상지에서는 48%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 외에 미국이 14.5%, EU지역이 13.6%, 일본이 5.0%, 대만과 한국이 각각 2%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홍콩

의 재수출 상품의 원산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의 55.5%를 저점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재수출 목적지에서 중국이 차지

표 2-13. 홍콩의 수출입 구조

(단위: 백만 달러)

	수입	수출			재수출 비중 (C/A, %)
		총수출(A)	국내수출(A)	재수출(B)	
1980년	22,401	19,747	8,762	3,865	19.6
1985년	29,703	30,221	16,694	13,531	44.8
1990년	82,490	82,272	29,033	53,213	64.7
1995년	192,765	173,556	29,776	142,991	82.4
2001년	201,474	190,081	19,733	170,626	89.8
2002년	208,024	200,320	16,829	183,752	91.7
2003년	232,580	224,040	15,641	208,322	93.0
2004년	271,458	259,423	16,193	243,333	93.8
2005년	299,967	289,509	17,485	271,741	93.9
2006년	334,691	316,819	17,291	299,036	94.4

주: 국내수출 및 재수출액은 1US\$ = 7.78HK\$로 환산함.

자료: 홍콩정청통계계로부터 작성함.

표 2-14. 홍콩 재수출의 원산지 및 수출대상 지역

(단위: 백만 달러)

	재수출	원산지(Origin)						재수출 지역(Destination)					
		중국	미국	일본	대만	한국	기타	중국	미국	대만	일본	한국	기타
1990년	532	309	31	54	39	15	83	143	113	27	31	17	201
1995년	1,430	818	72	168	107	48	217	494	297	36	90	25	489
2000년	1,789	1,093	84	177	113	59	262	629	401	43	106	35	576
2001년	1,706	1,040	84	162	103	51	266	639	363	39	108	32	526
2002년	1,838	1,112	81	174	121	61	289	736	369	39	104	38	552
2003년	2,083	1,244	81	207	138	73	339	908	367	50	117	44	597
2004년	2,433	1,461	79	250	172	83	389	1,094	390	57	135	55	703
2005년	2,717	1,689	83	239	196	95	415	1,245	415	58	147	60	792
2006년	2,990	1,879	89	243	214	109	456	1,435	435	61	148	64	847

주: 재수출액은 1US\$ = 7.78HK\$로 환산함.

자료: 홍콩정청통계계로부터 작성함.

하는 비중은 1990년의 26.8%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홍콩의 무역호조는 대다수의 홍콩 기업이 광동지역으로 제조업 기반을 확대한 것과 관련이 깊은데, 홍콩의 대 중국 수출의 36%가 역외가공활동과 관련된 것이며, 52%가 국내수출이고 35%가 재수출이었다.

나. 중화권 내 투자협력 현황과 전망

1) 역내 투자 현황

2005년 말 세계 FDI 유입액의 12%를 차지하며, 최근에는 중국기업에 대한 M&A는 물론 중국기업에 의한 해외기업 M&A가 증가하는 등, 중화권은 세계

■ 표 2-15. 세계 FDI에서 중화권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Inflow			Outflow		
	World(a)	3 CHINA(b)	b/a(%)	World(c)	3 CHINA(d)	d/c(%)
1990년 말 현재	1,789,303	75,499	4.2	1,791,092	46,731	2.6
1991년	158,428	6,175	3.9	199,288	5,831	2.9
1992년	175,841	13,746	7.8	200,800	14,221	7.1
1993년	217,559	30,483	14.0	240,900	24,724	10.3
1994년	242,999	36,829	15.2	284,261	26,041	9.2
1995년	331,189	39,408	11.9	352,514	29,983	8.5
1996년	337,550	44,764	13.3	333,629	32,313	9.7
1997년	481,911	47,170	9.8	476,934	32,213	6.8
1998년	686,028	58,667	8.6	683,211	23,455	3.4
1999년	1,079,083	65,100	6.0	1,096,554	25,553	2.3
2000년	1,392,956	102,886	7.4	1,200,783	66,992	5.6
2001년	823,825	70,703	8.6	711,445	23,709	3.3
2002년	651,188	66,660	10.2	647,363	25,430	3.9
2003년	557,869	67,582	12.1	566,104	11,022	1.9
2004년	710,755	96,560	13.6	813,068	54,666	6.7
2005년	916,277	109,928	12.0	778,725	49,894	6.4
2005년 말 누계	10,129,739	892,761	8.8	10,671,889	614,062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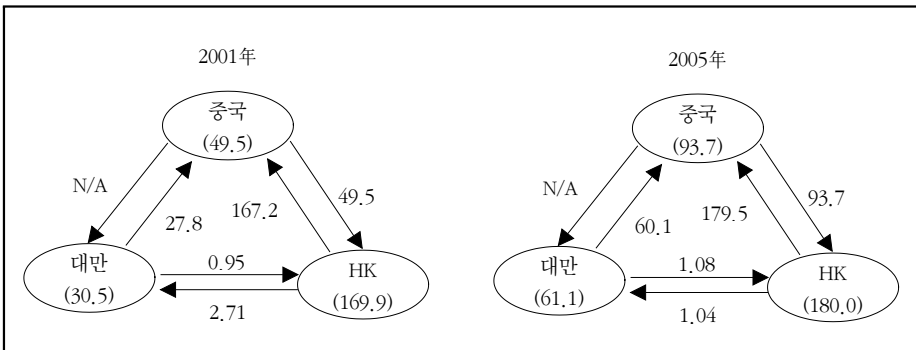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각 연도 판을 기초로 작성함.

투자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지역의 하나이다. 2005년 세계의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1,099억 달러로 전세계 FDI 유입액의 12%를 차지하였으며, 중화권의 대세계 FDI 유출액은 499억 달러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국경간 M&A 시장에서 중화권 기업에 대한 M&A 건수는 전년대비 115건이 증가한 463건이었으며, M&A 금액은 184.8억 달러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기업에 대한 M&A 건수는 2004년 217건에서 2005년에는 25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M&A 금액은 82억 5,300만 달러로 22% 증가하였다.

중화권의 역내 투자흐름은 홍콩과 대만으로부터 중국으로의 직접투자 흐름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홍콩으로의 투자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역내 투자액은 2001년 250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33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증가율 면에서는 중화권 지역의 해외투자액은 2001~2005년 중 연평균 20.4% 증가한 반면, 역내 투자액은 7.6% 증가에 그쳤다.

■ 그림 2-5. 중화권 역내 직접투자 흐름도 ■

(단위: 억 달러)



주: 1) 홍콩의 대대만 투자는 대만의 대홍콩 외국인투자 유치액임. 대만의 대중국 투자액은 대만의 3개국 경우 간접투자를 포함함. 중국의 대홍콩 투자는 홍콩정부의 대중국 inflow임.

2) N/A: 중국에서 대만으로의 직접투자는 공식통계가 없음.

자료: 각국 무역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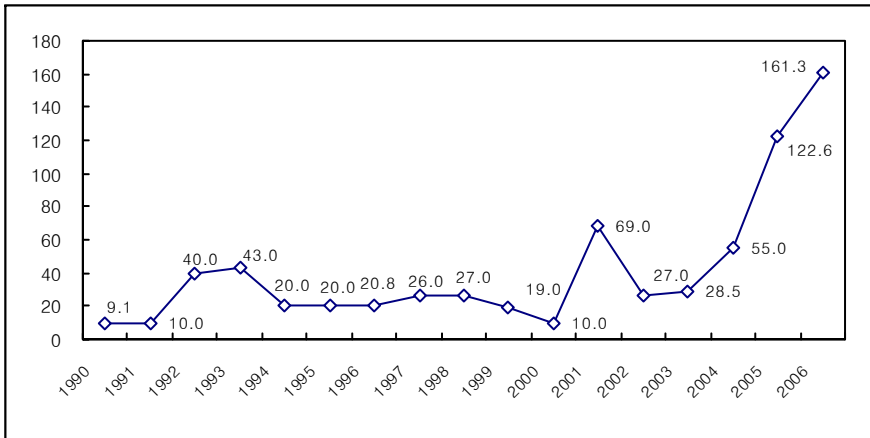
2) 중국

가) 해외투자

중국의 대외직접투자(금융업 제외)는 2000년까지 누계투자액이 37.3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1년 WTO 가입 이후 해외진출이 본격화되면서 2006년 말 현재 733.3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특히 중국의 투자액은 2004년 55억 달러(전년대비 + 92.6%)에 이어 2005년에는 122.6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¹⁵⁾ 2006년 해외투자액은 161.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1.6%가 증가하였다. 특히 2007년은 중국의 상품과 서비스시장 개방에 이어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는 원년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¹⁶⁾

■ 그림 2-6. 중국의 해외투자 추이 ■

(단위: 억 달러)



자료: 중국 상무부(인가기준).

15) UNCTAD에 따르면 세계 전체의 연간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0.9%에서 2005년 1.68%로 증가하였다.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06*에 의하면 2005년 말 누계 기준의 해외투자 잔액은 463억 달러로 전세계 투자 잔액 10조 6,719억 달러의 0.4%를 차지함. 연도별 해외투자 규모는 2004년 18억 달러, 2005년 113억 달러 등으로 중국 측 발표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함.

16) Zhao(2006),

첫째,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2005년 말 현재 57.7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10.1%에 불과하고, 서비스업이 408.8억 달러로 71.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석유 등 자원 확보를 위한 광업 투자가 86.5억 달러로 15.1%를 차지하였다.

둘째, 투자지역도 과거에는 홍콩 등 아시아에 편중되었으나 최근 들어 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중국의 해외투자의 63.8%가 홍콩에 투자되었으며, 이 외에 케이맨 제도와 버진아일랜드의 2개 조세회피지역에 각각 15.6%, 3.5%가 투자되었다.¹⁷⁾

셋째,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Green Field 방식보

■ 표 2-16.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비금융기구 투자) ■

(단위: 백만 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2005년 말 현재 누계	
				금 액	비중(%)
합 계	2,855	5,498	12,261	57,206	100.0
아시아	1,500	3,000	4,375	40,629	71.0
- 홍콩	1,150	2,628	3,420	36,507	63.8
- 한국	154	40	589	882	1.5
아프리카	75	317	392	1,595	2.8
유럽	150	171	505	1,598	2.8
중 남 미	1,040	1,763	6,466	11,470	20.0
- 케이맨 제도	807	1,286	5,163	8,936	15.6
- 버진아일랜드	210	386	1,226	1,984	3.5
북 미	58	126	321	1,263	2.2
- 미국	65	120	232	823	1.4
대 양 주	34	120	203	650	1.1

자료: 중국 상무부, CEIC.

17) 이들 조세회피지역으로 투자한 중국자본은 세탁과정을 거쳐 외국자본으로 변신해 중국에 재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국에 대한 투자액은 5.89억 달러로, 한국은 조세회피지역을 제외하면 중국의 최대 투자국가임.

다 M&A나 전략적 제휴 등을 선호하고 있다.¹⁸⁾ 그 일례로 중국 최대의 PC 제조업체인 Lenovo는 미국 IBM의 PC부문을 인수하였으며 중국 최대의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하이얼은 미국, 일본 등 세계 13개 지역에 현지공장과 R&D 센터를 설립하였다.

나) 외국인투자 현황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를 크게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WTO 가입 이후 5년 중국의 연평균 외국인투자 계약건수는 4만여 건으로 이전 4년간 평균의 2배로 증가하였으며,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580억 달러로 이전의 4년간 평균인 433억 달러에서 34%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WTO

■ 표 2-17.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외국인투자 실행액	홍콩, 대만		지역별	
		금 액	비중(%)	대만	홍콩
1990년	3,490	2,102	60.2	222	1,880
1995년	37,521	23,210	61.9	3,160	20,050
1996년	41,726	24,160	57.9	3,480	20,680
1997년	45,278	23,920	52.8	3,290	20,630
1998년	45,463	21,424	47.1	2,915	18,508
1999년	40,319	18,962	47.0	2,599	16,363
2000년	40,715	17,796	43.7	2,296	15,500
2001년	46,878	19,697	42.0	2,980	16,717
2002년	52,743	21,832	41.4	3,971	17,861
2003년	53,505	21,077	39.4	3,377	17,700
2004년	60,630	22,116	36.5	3,117	18,998
2005년	72,406	20,101	27.8	2,152	17,949
2006년	69,468	22,369	32.2	2,136	20,233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통계적요 2007 등 참고.

18) 일본과 한국이 해외투자 초기에 그린 필드 방식을 선호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미국과 같이 사모펀드를 활용하는 M&A 방식이 주류를 차지함. M&A 방식에 의한 해외투자는 2005년 65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53%를, 2006년 77.2억 달러로 47.9%를 차지함.

가입 이후부터 2004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중국의 외국인투자 증가세가 2005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06년에도 전년대비 4.5% 증가한 데 그쳤다. 특히 2006년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포함할 경우 중국의 외국인 투자액은 695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입에서 홍콩과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60.2%에서 1992년에는 77.7%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2005년에는 27.8%까지 낮아졌다.

2) 대만

가) 해외투자 현황

2006년 대만의 대중 투자는 1,090건, 투자금액은 76억 4,233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2% 증가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했고 건당 투자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의 주요 해외투자 대상국은 중국, 카리브해 영국령 지역, 싱가포르, 미국 등이며 전체 투자금액의 60% 이상이 중국대륙에 집중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장수(江蘇)성(28억 달러, 38%)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광둥(廣東)성(14억 달러, 19%), 상하이(10억 달러, 14%) 순이었다. 중국에 대한 투자 업종을 살펴보면 전자부품제조업(16억 달러, 21%), 컴퓨터통신 및 AV전자산업(11억 달러, 15%), 전력기기 및 설비제조업(6억 달러, 9%), 화학 산업(5억 달러, 7%) 등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이외 지역으로의 해외투자는 478건, 43억 1,542만 달러로 전년대비 76.3%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카리브해 영국령지역(18억 달러, 42%)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8억 달러, 19%), 미국(5억 달러, 11%), 네덜란드(4억 달러, 9%) 순이다.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산업과 전자부품제조업이며,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20억 달러로 46%를, 전자부품제조업

19)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부문의 투자도 2005년 120억 8,100만 달러에서 2006년 64억 4,700만 달러로 46.6% 감소하였다.

에 대한 투자금액은 9억 달러로 21%를 차지하였다.

■ 표 2-18. 대만의 해외투자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건)

	대중국		여타 지역	
	건수	총액	건수	총액
1998년	1,284	1,519	897	3,296
1999년	488	1,253	774	3,269
2000년	840	2,607	1,391	5,077
2001년	1,186	2,784	1,388	4,392
2002년	1,490	3,859	925	3,370
2003년	1,837	4,594	714	3,969
2004년	2,004	6,941	658	3,382
2005년	1,297	6,007	521	2,447
2006년	1,090	7,642	478	4,315

자료: CEIC;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 위원회.

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대만은 2000년대 초반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이후 세계적인 경기회복과 대만 정부의 국내외 기업간 합병규제 완화 조치 등으로 2006년까지 외국인투자 유치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표 2-19 참고). 특히 2006년에는 네덜란드 필립스가 TSMC 주식 38억 달러 상당을 인수하고, 대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여파로 외국인들의 대만금융기관 인수 및 주식 매입이 증가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 금액이 전년대비 230% 증가한 140억 달러에 이르러 사상 최대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네덜란드의 투자가 54억 달러(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리브해 영국령지역(18억 달러, 13%), 일본(16억 달러, 11%) 순이었다. 투자업종별로는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가 65억 달러(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 및 투자업에 대한 투자가 42억 달러(30%)로 많이 이루어졌다.²⁰⁾

20) 제조업의 주요 투자사례는 필립스의 TSMC 주식 매수(38억 달러) 및 네덜란드 Fairchild Semiconductor

표 2-19. 대만의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전체투자총액		화교부문		외국인부문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990년	2,302	-4.8	220	24.2	2,082	-7.1
1995년	2,925	79.4	169	57.8	2,757	80.9
1996년	2,461	-15.9	170	1.1	2,290	-16.9
1997년	4,267	73.4	387	127.3	3,879	69.4
1998년	3,739	-12.4	185	-52.3	3,554	-8.4
1999년	4,231	13.2	133	-28.3	4,145	16.6
2000년	7,608	79.8	50	-62.0	7,557	82.3
2001년	5,129	-32.6	47	-6.3	5,081	-32.8
2002년	3,272	-36.2	45	-4.8	3,227	-36.5
2003년	3,576	9.3	15	-66.8	3,561	10.3
2004년	3,952	10.5	14	-7.9	3,938	10.6
2005년	4,228	7.0	10	-24.9	4,218	7.1
2006년	13,969	230.4	45	338.7	13,924	230.1

자료: CEIC.

3) 홍콩

(가) 해외투자

홍콩정부에 따르면 2005년 말 잔액기준 홍콩의 해외투자액 4,700여 억 달러 중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잔액은 1,900억 달러로 대세계 해외투자 잔액의 4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버진아일랜드에 대한 투자가 2,060여 억 달러로 44.0%를 차지하고 있다.

B.V.의 新易股分유한공사 지분투자(2억 달러)가 있으며, 금융업의 주요 투자 사례는 영국 Standard Chartered Bank의 신죽국제상업은행 인수(12억 달러), 말레이시아-싱가포르계 TPE Newbridge Taishin Ltd.의 台新은행 주식 매입(7억 달러), 네덜란드 SIFP B.V.의 日盛금융 투자(3.5억 달러), 미국 A.I.G.의 中央產物保險 투자(2억 달러) 등이다.

표 2-20. 홍콩의 해외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해외투자	2000년 말 누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5년 말 누계	구성(%)
버진아일랜드	181,440	3,265	1,298	3,188	17,584	2,326	206,851	44.0
중 국	99,961	8,522	15,977	7,699	18,612	16,748	189,897	40.4
버뮤다	14,280	-2,468	-630	-360	3,432	1,607	16,208	3.5
영 국	2,532	116	463	591	630	630	7,661	1.6
싱가포르	2,609	540	553	270	578	771	5,141	1.1
일 본	1,697	-219	-2,198	129	3,650	-1,183	3,817	0.8
파나마	2,943	1,221	283	-1,170	-347	206	3,817	0.8
미 국	3,445	-257	925	-1,208	398	116	3,380	0.7
케이맨 제도	10,925	-308	-1,311	-2,969	-167	1,902	3,226	0.7
태 국	2,365	283	334	-90	411	334	2,956	0.6
기 타	19,794	681	1,799	-566	1,003	3,740	26,697	5.7
전세계	341,992	11,375	17,506	5,514	45,771	27,185	469,653	100.0

자료: 홍콩센서스통계국.

(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홍콩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말 홍콩의 총 FDI 유입 누계액은 5,200억 달러로 동년 GDP의 293%로 나타났으며, 조세회피 지역인 버진아일랜드, 버뮤다와 케이맨 제도(각각 31.3%, 6.7%, 1.6%)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중국(전체의 31%)이었고,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8.1%), 미국(5.1%), 일본(3.2%) 순으로 나타난다. 중국은 홍콩의 주요한 투자국 중 하나로서 홍콩 자치정부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2005년 말 중국의 대홍콩 투자누적액은 1,631억 달러로 홍콩 FDI 총 누적액의 31%를 차지하였으며, 2,000개 이상의 중국 관련 기업이 홍콩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자산 총액은 2,200억 달러로 추정된다. 홍콩으로 유입된 외국인투자 분야는 주로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으며, 투자 지주회사,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 도매와 소매 및 무역, 은행과 금융 및 보험, 운송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표 2-21. 홍콩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0년 말 누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5년 말 누계	구성(%)
중국	118,201	4,949	4,075	4,884	7,969	9,370	163,483	31.4
버진아일랜드	111,684	9,602	7,635	2,545	8,059	6,041	163,329	31.3
네덜란드	25,990	-296	1,324	3,175	1,131	2,185	42,044	8.1
버뮤다	39,306	1,272	270	-1,748	1,144	4,627	34,897	6.7
미 국	23,380	1,517	-1,414	2,828	6,221	-3,817	26,452	5.1
일 본	13,895	1,093	1,967	1,825	1,401	1,812	16,928	3.2
영 국	4,910	925	1,105	578	2,339	1,761	11,375	2.2
싱가포르	9,949	1,465	823	-1,272	411	1,414	10,835	2.1
케이맨 제도	13,959	1,401	-8,830	373	835	1,542	8,573	1.6
태 국	450	26	398	-231	167	3,612	4,267	0.8
기 타	34,704	1,889	2,352	720	4,383	5,064	39,190	7.5
전 세계	396,440	23,830	9,704	13,663	34,075	33,612	521,375	100.0

자료: www.censtatd.gov.hk

다. 중화권 내 FTA 현황과 전망

1) 중국-홍콩 간 CEPA 체결

중국은 홍콩 및 마카오와는 경제무역관계진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하였다. 중·홍콩 CEPA는 2001년 11월 홍콩 특별행정장관 도널드 창이 중국 중앙정부에 제출한 ‘유사 자유무역지대’ 구상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어 2002년 초 중앙 정부의 지시하에 1년 6개월에 걸친 협상이 시작되었다.

CEPA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2003년 6월 29일과 2004년 10월에 체결되어 1,108종의 홍콩 제품이 무관세로 중국 내륙에 수출되는 길이 열렸다. 그 내용은 주로 홍콩제품의 무관세 내륙 진입, 서비스업 개방, 두 지역간 무역원활화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005년에는 CEPA 3단계가 체결된 후 261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369종이 무관세를 적용받게 되었고, 2006년 체결된 CEPA 4단

계로 2007년 1월 1일부터는 홍콩에서 제조업 신청을 거쳐 CEPA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홍콩산 제품은 중국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6월 29일 체결된 CEPA 5단계는 서비스 무역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CEPA 5단계에서는 28개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40가지의 홍콩에 대한 개방 확대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CEPA 4단계까지 11개 서비스 분야에 개방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17개의 분야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CEPA가 포함하는 서비스 개방영역은 38개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은행, 증권, 건축, 비즈니스, 운송, 통신, 관광, 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분야에서 홍콩에 대한 투자 확대 혹은 지분제한 폐지, 등록자본 및 자산조건 등의 요건 완화, 투자지역 및 경영범위 확대 등을 시행토록 하였다. 특히 5단계 서비스 분야 개방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중·ASEAN FTA의 서비스 협정 중 CEPA에 포함되지 않았던 9개 서비스 부문 즉, 컴퓨터 관련서비스, 시장조사, 기업경영 컨설팅, 건물청소용역, 사진 서비스, 프린트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환경과 스포츠 서비스 등을 포함해 11개의 서비스 부문에 대해 홍콩에도 동일한 차별적 시장접근을 허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ASEAN 국가들이 해당 분야에서 조인트벤처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 반하여 홍콩기업들은 독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5단계는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전망

중국은 2004년 ASEAN, 2005년 칠레, 2006년 파키스탄과 FTA 상품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 GCC(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아이슬란드와 협상 중이며, 남아공과 협상을 개시하였다. 한국, 인도와는 타당성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상하이 협력기구(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와 FTA 협상을 진행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한편 2007년 1월에는 ASEAN과 서비스 FTA 협정을 체결하여 2007년 7월부터 발효 중에 있다.

중국은 외교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 각국과 활발하게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는 역내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 표 2-22. 중국 FTA 추진 현황 ■

연도	CEPA	ASEAN	칠레	파키스탄	한국	기타
2001년		11월: 협상개시				
2002년	1월: 홍콩 CEPA 협상개시	11월: 기본협정체결				
2003년	6월: 홍콩 10월: 마카오 CEPA I 체결					
2004년	1월: 홍콩, 마카오 CEPA 발효 10월: 홍콩 CEPA II 체결	11월: 상품협상체결	4월: 타당성연구 개시 11월: 협상개시	12월: 무역특혜협정 (PTA)체결		6월: 남아공 협상개시 7월: GCC 기본협정 체결 12월: 뉴질랜드 협상 개시
2005년	1월: 홍콩 CEPA II 발효 10: 홍콩 CEPA III 체결	7월: 상품협상발효	11월: 상품협상체결	4월: 조기자유회조치 (EHP)체결	3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4월: GCC 협상 개시 5월: 호주 협상 개시 9월: GCC 3차 협상
2006년	6월: 홍콩 CEPA IV 체결		7월 1일: FTA 상품협정 발효	11월: FTA협상체결	12월: 민간공동연구 완료	
2007년	1월: 홍콩 CEPA IV 발효 6월: 홍콩 CEPA V 체결	1월: 서비스협정 체결 7월: 서비스협정 발효	4월: 서비스 및 투자부문 FTA 2차 협상	7월 1일: FTA협정 발효	1월: 산관학 공동연구개시 7월: 2차 산관학 공동연구 11월: 3차 산관학 공동연구	3월: 아이슬란드 협상개시 6월: 아이슬란드 2차 협상완료 9월: 페루 기본협정 서명 10월: 인도 타당성연구완료 11월: 호주 10차 협상 12월: 뉴질랜드 15차 협상

자료: 필자 작성(2007년 12월 26일 최종 작성).

목적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권을 형성하는 것이며 소극적으로는 동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에너지, 천연자원의 확보(GCC, 칠레 등 남미국가들, 파키스탄 등과의 FTA 추진), 무역마찰 회피(신규시장 개척,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경제지위 인정 유도의 방편, 산업경쟁력의 제고, 미국 통상 압력에 대한 대응, 서부지역 및 동북3성 지역의 개발촉진 등이 FTA 추진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FTA 추진 우선순위로서는 먼저 국가별로 인접지역, 개도국 우선이다. 동기별로는 에너지 및 자원 확보,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 등의 전략적 동기가 해외시장 진출이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경제적 동기보다 우선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기 체결 FTA인 중·ASEAN, 중·칠레 FTA에서 상품 분야만을 대상으로 한 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서비스 및 투자 부문은 향후 상품 FTA의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려고 할 경우,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서비스나 투자 부문 등에서 개방에 민감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FTA 협상에서 상품만을 포함하는 협정을 먼저 체결한 이후, 서비스와 투자 부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협상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을 견지하고 있다. 2004년 7월 중·ASEAN 상품 분야 FTA가 체결된 후 2년 반이 경과한 2007년 1월에 중·ASEAN 서비스 FTA를 체결하였으며, 2007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칠레와는 상품 분야 협정발효 이후 2007년 4월까지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 관한 FTA 추가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서비스 개방폭의 정도는 WTO 가입 서비스 부문 양허안 → 중·ASEAN FTA 서비스협정 → 홍콩, 마카오 CEPA 서비스 협정 순으로 나타났다.

3) 대만의 FTA 전략

대만은 현재 총 24개국과 수교관계에 있으며, 수교국 중 비교적 경제규모가

큰 파나마(2003년), 과테말라(2005년), 니카라과(2006년), 온두라스 및 엘살바도르 (2007년) 등 5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파나마, 과테말라, 니카라과와의 FTA는 이미 발효된 상태이다. 이 밖에 미국, 일본, 한국, ASEAN 등 교역규모가 큰 비(非)수교국가들과도 FTA 협상을 원하고 있으나 비(非)수교국들의 경우 대체로 대만 이외의 타국가와의 FTA 추진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대만과의 FTA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비수교국들과 정부당국자 간 실질적인 FTA 협상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비수교국가들이 대만과 FTA에 소극적인 것은 FTA 체결의 우선순위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들이 세계 최대의 통상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은 자국이 주요 FTA 네트워크에서 소외됨으로써 정치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대만은 1990년대부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필리핀 등 국가와 FTA 체결을 염두에 두고 자국과 상대국 경제 및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특히 대만은 최근 체결 · 발효된 FTA 가운데 한 · 미 FTA와 중 · ASEAN FTA를 대만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FTA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만 정부는 한 · 미 FTA로 인한 직접적인 대미 수출손실이 연간 최대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섬유 · 신발 산업 등은 한 · 미 FTA의 대표적인 피해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적인 수출손실 이외에도 한 · 미 간 FTA 체결로 인해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경제에 다양한 직 ·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대표적인 주변 경쟁국인 한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은 대만이 세계경제 무대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심리적으로 대만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한 · 미 FTA가 상징적으로 대만 경제에 심리적인 부담을 주었다면, 중 · ASEAN FTA는 실질적인 경제적 파장이 지대해 대만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및 ASEAN 지역은 역내 인구가 17억을 초과하는 대만의 전체 해외수출의 5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절대적인 시장으로 2010년 중국과 ASEAN 간 자유무역이 본격화될 경우 대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4) 중·대만 FTA 전망

대만은 2008년 3월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현 집권당인 민진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높은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당의 총통 후보인 마잉주(馬英九)는 중국과의 더욱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위해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 후보는 대만을 홍콩, 싱가포르 등과 유사한 자유무역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여 적극적인 대외개방형 경제정책을 구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대만이 중국과 중국·홍콩 CEPA와 유사한 형태의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치적인 이유로 CEPA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야 할 것임을 언급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명칭보다는 그 내용이라고 하였다.²¹⁾ 또한 대만 국내자금이 대륙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는 대중 투자비율 40% 상한²²⁾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국민당의 마잉주 후보는 양안관계에서 친중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있어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만 기업인은 75만에서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이다. 이러한 경제교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안 사이에는 어떠한 공식관계도 없으며 직접적인 교통수단도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양안간에 어떤 형태로는 공식적인 경제교류를 위한 협력틀이 필요한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것이 적극적

21) 중국이 홍콩 및 마카오와 체결한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는 용어는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권국 사이에 체결하는 양자 협정인 FTA의 용어를 쓰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양안간에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다면 대만은 CEPA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자 할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CEP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22) 대만 기업은 순가치(net value)의 40% 이상을 중국 사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인 형태의 FTA 협정의 체결이 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향후 대만의 정권교체 여부와 가장 큰 관련이 있을 것이다. 현 집권당인 민진당의 2기 연임 기간 동안 국민들의 불신임이 깊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외정책에어서 대만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됨과 동시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변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에서 고립되고 나아가 세계무대에서의 입지도 점점 좁아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는 것이다. 전세계 FTA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의 5개국과 FTA 체결을 한 것 이외에 주요국들과는 FTA 협상 논의와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준다. 따라서 독립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지속 집권해 온 민진당에 실망한 대만 국민들이 좀더 실리적이고 적극적인 양안관계를 천명하고 있는 국민당을 선택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 외로 빠른 중국과의 FTA 체결 및 경제통합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이어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상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3. 중화권의 협력과 경쟁: 금융 및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가. 중화권 내 금융협력 현황과 허브경쟁

1) 중화권 내 금융중심지와 금융협력 현황

홍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은행과 금융센터로 부상하여, 2006년 말 현재 홍콩에는 202개의 은행과 84개의 대표 사무소가 있으며 국제무역 자금조달을 위한 은행대출 총액과 홍콩 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대출된 금액은 각각 미화 195억 달러와 40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홍콩은 아시아 3대, 세계 6대 외환시장이며 2004년 기준으로 일일 순외환거래량이 1,020억 달러에 달한다. 2006년 홍콩의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시아 2위, 세계 6위를 차지하였는데 현재 상장기업시장(GEM)의 198개 기업을 포함하여

1,173개의 상장기업이 있으며 시가총액은 1조 7,150억 달러에 이른다. 한편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벤처 자금센터로서 2006년 중반 기준으로 지역의 총 자본폴의 29%를 운용하고 있다.

▮ 표 2-23.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시가총액(2007년 3월 말 기준) ▮

구 분	Main Board		GEM Board	
	2006년 3월 말	2007년 3월 말	2006년 3월 말	2007년 3월 말
상장기업 수	940	983	201	197
(H Shares)	(81)	(96)	-	(45)
(Red-Chips)	(86)	(86)	-	(4)
시가총액	HKD 9,332B (USD 1,196B)	HKD13,442B (USD1,723B)	HKD 84B (USD 11B)	HKD109B (USD14B)
평균 PER	14.58 배	15.97 배	24.53배	26.73배

자료: 주 홍콩총영사관(2007).

홍콩 금융시장이 이처럼 부활한 원동력은 ‘중국효과(China Effect)’인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10%씩 고도성장을 거듭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배후지로 두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홍콩 특유의 경쟁력이다. 홍콩은 뉴욕·런던 증시보다 상장 절차와 규정이 간편하고 아시아 문화권으로서 지리적·문화적 접근성이 높아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자금 조달의 최대 관문(gateway)으로 선호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주권 반환 이전부터 내놓은 선심성 정책을 발판으로 홍콩 금융시장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1993년 H주(중국 본토 기업주식)의 상장·거래를 홍콩에 최초로 허용하고, 2004년에는 홍콩 금융기관들에 대한 위엔화 업무를 인가했으며, 2007년 홍콩에서 위엔화 표시 채권 발행을 허가하는 등의 특혜를 준 것이 그 예이다. 한편 홍콩은 중국 본토의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이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경제의 서비스화를 이룩하여 성공적으로 생존과 번영 일로를 걷고 있다. 향후 홍콩의 발전에는 중국 본토와의 금융협력력을 지속적으로 공고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중국이 시장을 열수록 홍콩의 가치와

역할을 더욱 높인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1조 달러가 넘는 중국의 외환보유고 활용을 위해 QDII(중국 기관투자자의 해외 증시투자 허용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을 홍콩의 금융기관들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홍콩에서 위엔화 유통이 자유화되고, 위엔화 채권 발행이 본격화되면 홍콩의 금융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한편 2007년 초 중국 정부는 소위 ‘직통열차(直通列車)’로 불리는 중국 일반인의 홍콩 증시 직접투자 허용 계획을 발표하였고 2008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자금이 홍콩으로 더욱 급속하게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금융당국(HKMA)이 발간한 2006년 연례보고서에는 홍콩이 세계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하여 중국 대륙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홍콩을 중국의 국제금융센터로 자리매김하는 ‘1-3-5 청사진(1-3-5 Blueprint)’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은 One-positioning으로 중국이 홍콩을 유일한 중국의 국제금융센터로 포지셔닝하는 것이다. 3은 Three-dimension으로 홍콩과 중국 사이에 상호보완적이고, 협조적이며 상호작용적인 금융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이다. 5는 Five-areas로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 금융협력을 실행할 5가지 분야이다. 먼저 홍콩의 금융상품이 중국에 확대판매되고, 홍콩을 통하여 중국의 투자자, 펀드레이저,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의 해외 이동이 확대되며, 홍콩의 금융상품의 중국 내 거래가 허용되고, 홍콩에서 위엔화로 표시된 금융거래가 증가하며, 홍콩과 중국 간의 금융인프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 등이다.

2) 역내 주요 금융허브 육성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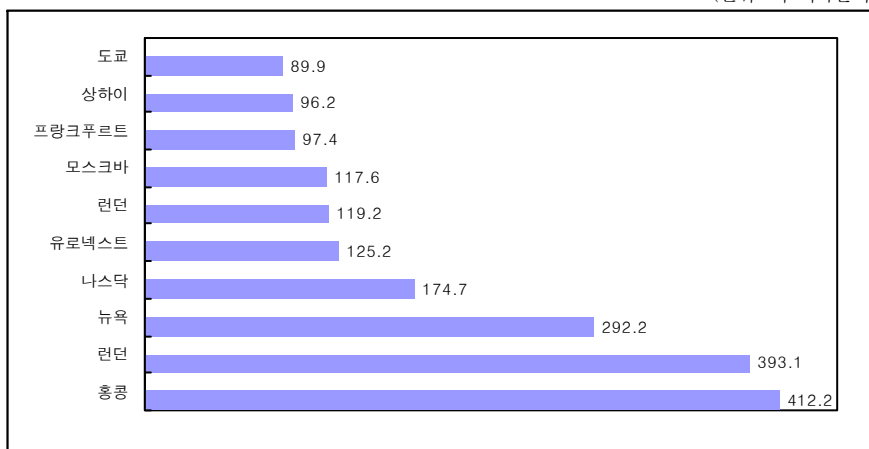
(가) 홍콩의 금융허브 전략

홍콩은 전세계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IPO 부문에서 홍콩 증시가 뉴욕 증시를 압도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중국 본토 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는 활황을 보이는 데 있다. 홍콩증권거래소는 지

난 1993년 이래 300개 이상의 본토 기업을 상장시켜 2,000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였다. 홍콩 증시가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는 이유로는 글로벌 자본 집중과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홍콩 증시는 중국 기업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자금과 세계 수준의 재정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증시로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행은 2006년 홍콩 증시 단독 IPO를 통해 6년동안 최대 규모인 112억 달러의 자금을 모집했다. 이처럼 중국은행이 대규모 자금을 모집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증시에서 홍콩 증시의 영향력이 확대됐음을 뜻한다고 풀이된다.

■ 그림 2-7. 2006년 증권시장 기업공개(IPO) 규모 세계 순위 ■

(단위: 억 미국달러)



자료: Thomson Financial.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수는 2007년 3월 말 현재 1,180개(Main Board 983, GEM 197개)²³⁾이며, 시가총액은 미화 1조 7,370억 달러(Main Board 1조 7230

23) Main Board: 한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해당되는 거래소로서 INDEX에는 우량주로 구성된 HSI, H-Share로 구성된 HSCEI 및 Red-Chip으로 구성된 HSC가 있음.

- H Share: 중국 국영기업의 주식 중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주식명에 “-H”가 붙음(예:

억 달러, GEM 140억 달러), 평균 PER는 Main Board 15.97, GEM 26.73이다. 홍콩 증시의 기업공개(IPO) 실적은 2004년 미화 117억 달러(67건), 2005년 219억 7,000만 달러(67건), 2006년 386억 달러(61건)로 금액규모가 증가 일로에 있으며 특히 H주 비율이 74%를 차지하여 홍콩 증시가 중국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 표 2-24. 2004~2006년 3년간 IPO 현황 ■

(단위: 개, 백만 미국달러)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IPO 건수	67	67	61	195
IPO 금액	11,702	21,974	38,618	72,294
(H Share)	(4,934)	(15,672)	(32,648)	(53,254)
(H주 비율)	(42.2%)	(71.3%)	(84.5%)	(73.7%)

자료: 주 홍콩총영사관(2007).

최근 3년간 홍콩의 IPO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IPO 금액 중 H주의 비율이 평균 74%로서 홍콩 증시가 중국 기업의 Fund Raising Center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2007년에는 China Citic Bank, China Everbright Bank 등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등 중국기업의 대형 IPO가 연이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주홍콩총영사관에서 인용한 홍콩의 IPO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홍콩의 전체 IPO에서 상위 5위를 석권한 중국 국영기업 H주의 금액비중은 전체 IPO 금액(미화 약 386억 달러)의 77%에 달하는 298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기업의 홍콩 상장주식인 H주와 Red-chip(전체 25건)의 IPO 금액은 330억 달러에 달해 전체 홍콩 IPO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를 넘어섰다. 이처럼 홍콩

Air China Ltd-H).

- Red-Chip: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국영기업의 주식 중 H Share가 아닌 주식으로, 홍콩에 직접 상장하지 않고 Listing Vehicle을 대개 역외 Tax -Haven 지역(예: 케이맨 제도)에 설립한 경우가 많으며, 통상 경영권은 중국정부가 가지고 있음.

GEM(Growth Enterprise Market) Board: Main Board 상장기준에 매출액 및 수익 등이 못미치는 기업들에 대해 보다 완화된 상장기준을 적용하여 상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장이나, 거래 규모 및 투자안정성 측면에서 Main Board에 훨씬 못미침.

표 2-25. 2006년도 홍콩 증시 금액기준 30위 IPO 현황

(단위: 미국달러)

순위	회사명	금액	종류
1	IND & COMM BANK OF CHINA LTD - H	13,929,534,615	H-SHARE
2	BANK OF CHINA LTD - H	9,670,171,859	H-SHARE
3	CHINA MERCHANTS BANK - H	2,411,538,462	H-SHARE
4	CHINA COMMUNICATIONS CONST - H	2,064,102,564	H-SHARE
5	CHINA COAL ENERGY CO - H	1,685,617,269	H-SHARE
6	CHAMPION REIT	806,990,000	COMMON
7	SHUI ON LAND LTD	794,780,910	COMMON
8	KINGBOARD LAMINATES HOLDING	743,269,231	COMMON
9	SHIMAO PROPERTY HOLDINGS LTD	476,862,179	COMMON
10	NINE DRAGONS PAPER	435,897,436	COMMON
11	CHINA COMMUNICATIONS SERVI-H	364,210,846	H-SHARE
12	SUNLIGHT REAL ESTATE INVEST	348,456,667	COMMON
13	GREENTOWN CHINA HOLDINGS	342,158,027	COMMON
14	CHINA BLUE CHEMICAL LTD - H	341,025,641	H-SHARE
15	SHANGHAI JIN JIANG INTL HO-H	310,256,410	H-SHARE
16	ZHAOJIN MINING INDUSTRY - H	280,910,769	H-SHARE
17	DALIAN PORT (PDA) CO LTD-H	277,307,692	H-SHARE
18	ZHUZHOU CSR TIMES ELECTRIC-H	244,995,897	H-SHARE
19	CHINA NATIONAL BUILDING MATERIAL-H	230,652,372	H-SHARE
20	HUNAN NON-FERROUS-H	227,526,538	H-SHARE
21	HAITIAN INTERNATIONAL HLDGS	202,057,692	COMMON
22	GOLDEN EQGLE RETAIL	181,730,769	COMMON
23	NEO-NEON HOLDINGS LTD	176,923,077	COMMON
24	MING AN HOLDINGS CO LTD/THE	168,798,451	Red Chip
25	SHANGHAI PRIME MACHINERY-H	161,689,769	H-SHARE
26	SPG LAND HOLDINGS LTD	153,205,128	COMMON
27	XINGDA INT'L HOLDINGS	152,420,513	COMMON
28	TIANJIN PORT DVLP HLDS LTD	139,312,821	Red Chip
29	LINGBAO GOLD CO-H	110,359,615	H-SHARE
30	NAGACORP LTD	91,666,667	COMMON
총계		37,524,429,886	

자료: 주 홍콩총영사관(2007)에서 인용하여 필자가 재구성함.

의 증권시장이 자본조달에 있어서 뉴욕을 제치고 세계 2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시장을 겨냥한 중국기업들이 홍콩의 선진 금융시스템을 거쳐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홍콩이 중국의 상하이나 싱가포르에 의해 국제금융지로서의 위상을 추월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홍콩이 중국 본토와 같은 강력한 배후지를 두고 금융시장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인도나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와 연대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상하이의 경우 금융거래에 필수적인 법치가 미흡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성숙도가 낮으며, 금융시장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에서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홍콩이 추월당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본토에도 자금은 넘쳐나고 있으며, 언제까지나 홍콩이 중국기업들을 위한 자금조달창구로서의 역할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경제 분석가 앤디 시에(Andy Xie)는 “좁은 의미의 금융센터 역할을 놓고 상하이와 홍콩이 경쟁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홍콩은 장기적으로 스위스처럼 세계 부유층의 사적 자산을 운용하는 프라이빗 बैं킹 허브로 발전전략을 짜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홍콩이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중심 논의에는 발전된 경제, 선진화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에 집중함으로써 같은 분야의 여타 중국 본토의 도시들과 경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홍콩 증시의 발전이 상하이 증시 등 중국 본토 금융시장의 동반 성장세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홍콩이 뉴욕이나 런던을 따라잡을 고부가가치의 금융센터가 되기 위해서 중국 본토의 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나) 상하이의 세계금융중심지 육성전략

중국 정부는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를 중국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에 있다. 중국 정부는 1991년부터 상하이를 금융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을 세웠다. 2002년 상하이의 금융허브 구상은 ‘산뿌저우(三步走)’ 전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2005년까지 금융허브의 기초를 마련하고 2010년에 골격을 형성한 뒤 2020년에는 아태지역의 최대 금융허브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상하이는 금융업 생산총액이 2006년 한 해 799억 위엔, 증시 IPO 규모가 1,180억 위엔, 외국계 금융기관 수 106개를 기록하며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상하이 푸둥에는 씨티, HSBC, 스탠더드차터드은행 등 외국계 금융회사와 중국 현지은행 350여 개가 밀집해 있다. 또한 2006년 9월 중국 최초의 금융선물거래소가 상하이에 설립되었다. 상하이 증시 종합지수와 IPO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도 상하이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IPO 규모는 지난해 말 1,180억 위엔(약 14조 원)으로 전년(28억 5,500만 위엔)보다 무려 40배나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이미 2007년 상반기 중 상하이 증시의 IPO 규모는 1,690억 위엔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중국정부는 2005년 8월 인민은행의 7개 부서를 상하이로 이전하고 인민은행 상하이총부를 설립했다. 이는 상하이의 금융 중심지 지위를 공고히 한 조치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2006년 말 외자은행의 위엔화 소매금융이 허용됨에 따라 HSBC, 씨티, ABN 암로 등 9개 글로벌 은행의 현지법인 설립 신청 당시, 모두 상하이를 법인 설립지로 선택하였다. 상하이 시는 2006년 말에 2010년까지 상하이 금융시장의 거래규모를 80조 위엔(약 9,680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하였다. 동시에 상하이 상품선물거래소의 거래 규모를 세계 10위권으로 키우고 상하이 은행권의 예금 잔액을 4조 5,000억 위엔으로 육성하는 등 금융허브 추진 5개년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발표했다.

이처럼 상하이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급속한 발전을 놓고 홍콩의 추월 가능

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중국 본토를 배후지로 한 홍콩의 금융기능 및 세계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홍콩을 앞지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외환시장의 일일 거래액(약 750억 달러, 2006년 말 현재)은 상하이(50억 달러)의 15배가 넘는다. 증시 시가총액도 홍콩은 12조 홍콩달러로 상하이의 5조 홍콩달러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다) 랴오닝 성 다롄의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전략

중국은 ‘싱하이만 금융시티(XBFC: Xinghai Bay Finance City)’를 개발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11차 5개년 개발계획 중에는 랴오닝 성의 다롄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이 지역은 총 240만m² 규모로 랴오닝 성과 다롄 시 정부가 모두 200억 위엔을 투자해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금융특구이다. 랴오닝 성 다롄은 지리적 이점과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 랴오닝 성은 성내 항공·해운 관문인 다롄을 중국 최고 수준의 교통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랴오닝 성은 다롄을 동북아 국제항공물류기지로 건설하는 것과 더불어 해운 부문의 위상 강화를 위해 다롄 신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중국 내 화물량이 가장 많았던 다롄 항구가 상하이에 밀리게 되면서 위상 회복을 위하여 신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롄은 이처럼 입지조건과 항공, 물류의 발전, 배후의 시장 발달 등 다양한 성공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롄은 2006년 중국 10대 금융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 6월 말 현재 다롄의 금융자산 규모는 약 5,500억 위엔으로 매년 16%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 3대 상품거래소 중 하나가 바로 다롄에 있다. 다롄 상품거래소의 선물거래량은 2억 4,100만 건으로 중국 전체 거래량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5조 2,220억 위엔으로 중국 전체 거래액 중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산업 부문 강점과 동북아 항공·물류센터를 연계해 거대 금융특구인 싱하이만 금융시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뉴욕 맨해튼 규모에 영국 런던과 같은 위상을 가진 곳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이다.

나. 중화권 내 물류산업 재편과 경쟁 심화

중화권의 물류환경은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중심의 물류 네트워크 재편과 물동량 흡수를 위한 중국·대만·홍콩 간 경쟁의 심화”로 요약된다. WTO 가입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기업들의 투자로 중국은 세계의 생산 기지로 변화하여 물류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물동량 유치를 위한 물류인프라 투자규모 확대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권 물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본격적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서비스 범위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류 허브화를 위한 중화권 각국 간에 넓게는 동아시아의 일본, 한국, 싱가포르를 포함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각국은 물동량 흡수를 위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주요 공·항만의 확충을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공·항만 배후부지와 자유무역지역 개발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항만 물류의 경우,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은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지역 항만의 지위도 급속하게 제고되고 있다. [표 2-26]에서 볼 수 있듯이 1985년 세계 20대 컨테이너항만 가운데 2개에 불과했던 이 지역은 2005년에 7개로 증가하였고, 2위에서 4위까지 모두 중화권 항만이 차지하였다. 이는 바로 세계경제와 교역에서 차지하는 중화권의 지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물동량의 증가 추세에 따라 역내 각국은 경쟁적으로 항만선석을 확충해가고 있다. 중국 상하이항의 경우 현재 26선석에서 2020년까지 52선석으로, 홍콩항의 경우는 21선석에서 2010년까지 31선석으로 확충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²⁴⁾

24) 중화권 항만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역시 항만선석을 확충해가고 있다. 부산항은 현재 21선석에서 2011년까지 51선석으로, 일본 고베항 역시 42선석에서 2011년까지 52선석으로 확충할 계

또한 물동량 유치를 위한 항만선석의 확충은 물론 항만배후물류단지 개발 및 서비스 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화권 항만들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항만들이 허브항만으로 발전하려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인프라 확보 경쟁에 따른 공급과잉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물류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IT)²⁵에 따르면 중화권이 포함된 동

▮ 표 2-26. 세계 20대 컨테이너항만의 처리물동량 변화 추세 ▮

(단위: 백만 TEU)

순위	1985년		2000년		2005년	
	항만	물동량	항만	물동량	항만	물동량
1	로테르담	2.7	홍콩	17.8	싱가포르	23.2
2	뉴욕	2.4	싱가포르	17.1	홍콩	22.6
3	홍콩	2.3	부산	7.5	상하이	18.1
4	가오슝	1.9	가오슝	7.4	선전	16.2
5	고베	1.9	로테르담	6.3	부산	11.8
6	싱가포르	1.7	상하이	5.6	가오슝	9.5
7	룽비치	1.4	LA	4.9	로테르담	9.3
8	앤티워프	1.4	룽비치	4.6	함부르크	8.1
9	요코하마	1.3	함부르크	4.3	두바이	7.6
10	함부르크	1.2	앤티워프	4.1	LA	7.5
11	지룽	1.2	선전	4.0	LB	6.8
12	부산	1.1	PTP	3.4	앤티워프	6.5
13	LA	1.1	포트클랑	3.2	칭다오	6.3
14	도쿄	1.0	뉴욕	3.2	포트클랑	5.5
15	브레멘	1.0	두바이	3.1	닝보	5.1
16	세인트존스	0.9	도쿄	3.0	뉴욕/뉴저지	4.9
17	오클랜드	0.9	팰릭스토우	2.8	텐진	4.8
18	팰릭스토우	0.9	브레멘	2.7	탄중펠라파스	4.2
19	시애틀	0.8	지오이아	2.7	브레멘	3.7
20	발티모어	0.7	요코하마	2.4	도쿄	3.7

자료: 원동욱 외(2006).

획이다.

25) <http://www.iata.org>

북아 항공시장이 여객-km 기준으로 세계항공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항공화물 취급실적면에서 세계 10대 공항이 포함된 중화권 공항으로는 홍콩 첵랍콕공항(2위), 상하이 푸둥국제공항(6위) 등 2곳이다.

중화권의 항공물류 역시 중국의 경제성장과 무역량 증가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중국의 화물운송시장은 세계 평균(약 6%)보다 높은 연평균 7.1%씩 성장하여 아태지역 항공시장의 판도가 중국을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²⁶⁾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과 홍콩은 푸둥국제공항과 첵랍콕 국제공항이라는 초대형 공항을 건설하였으며 경쟁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의 화물처리 능력을 현재 약 75만 톤에서 2010년 420만 톤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상하이 이외에 베이징과 광저우에도 허브공항 건설을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홍콩 첵랍콕 공항 역시 지속적인 확충계획 수립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동북아 허브공항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어 중화권 공항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²⁷⁾ 다음에서는 중국의 물류산업 부상과 이에 따른 홍콩과 대만의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중국의 항만 물류 현황

중국은 해안선을 따라 8대 항만 등 수많은 연해 항만이 위치해 있다. 또한 황허, 창장, 주장 등 주요 내륙 운하에도 다수의 항만이 구축되어 연해지역 항만과의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의 고속성장과 대외무역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항만에 대한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 양산(洋山)심수항, 창장 심수항로, 연해지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원유·철광석

26) Boeing(2006).

27) 중화권 내 공항과 더불어 한국 인천국제공항과 일본 간사이 공항도 동아시아 허브공항이 되기 위한 전략으로 인프라를 확충해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270만 톤의 화물처리능력을 2008년까지 450만 톤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간사이공항도 현재 139만 톤에서 2007년까지 175만 톤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등 전문부두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항만은 WTO 가입 등 중국 경제의 대외개방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지난 10년에 걸쳐 GDP 성장률보다 빠른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대 들어서 10차 5개년 계획기간(2000~2005년)에 중국 항만의 물동량과 컨테이너 물동량은 각각 17.3%와 26.4%가 증가하였고 2006년 말 현재 12개 항만²⁸⁾이 세계 역 톤급 항만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항만 물동량의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항만 인프라의 확충은 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설정되었다.

중국의 항만 개발은 그동안 연해지역의 경제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역할과 위상에 따라 허브 항만, 지역 주요 항만, 기타 중소형 항만의 개발이라는 정책을 취해 왔다. 중국 교통부는 지난 2004년 「전국연해항구발전 전략(全國沿海港口發展戰略)」과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발해만 3개 지역 연해항구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선전, 광저우항을 포함한 주강삼각주 지역을 ‘주강삼각주 항구군’으로, 상하이, 닝보항을 포함한 장강삼각주 지역을 ‘장강삼각주 항구군’으로, 또한 다롄, 텐진, 칭다오항 등을 ‘환발해만 항구군’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컨테이너 터미널과 대량화물 전용터미널 등 대형 항만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또한 2006년 9월에는 「전국연해항만배치계획(全國沿海港口布局規劃)」을 발표하여, 지방정부의 대형항만 건설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중복건설과 과잉투자 문제를 해결하고 대형항만의 중심적 지위를 확실하게 다지면서 배후지역에 대한 서비스 능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국 내 주요 항만의 전문화, 대형화 추세는 동북아 항만의 구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항만에도 이미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8) 상하이(上海), 닝보(寧波), 광저우(廣州), 텐진(天津), 선전(深圳), 칭다오(靑島), 친황다오(秦皇島), 다롄(大連), 난징(南京), 수저우(蘇州), 장수난통강(江蘇南通港), 산둥르자오강(山東日照港).

2) 중국의 항공물류 현황

중국 내 공항은 2005년 말 기준 142개로 적은 수는 아니지만, 국제공항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 상하이 푸둥(浦东) 공항, 광저우의 바이윈(白云) 공항 등 소수에 불과하다. 늘어나는 운송수요에 비해 중국 항공 인프라는 과부족 상태여서 심각한 물류 적체를 유발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10년 동안 항공운송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에도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여 허브 공항을 중심으로 인프라의 건설과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지의 공항을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허브공항으로 건설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이 중국의 공항 인프라 확충계획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허브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중점도시의 간선공항을 연결함으로써 ‘hub-and-spoke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은 2015년 까지 111개의 지방 공항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3) 홍콩과 대만의 경쟁력 강화전략

중국, 홍콩, 대만을 포함하는 지역(兩岸三地)의 항만 물류는 세계적 수준의 상하이, 홍콩, 가오슝을 포함하고 있어 협력 기반이 이미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발전하는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홍콩의 경우, 줄곧 세계 1위 항만의 자리를 유지하였으나 2005년 싱가포르에 밀려 6년 만에 2위로 내려앉았으며, 2006년에는 상하이항에 밀려 세계 3위를 기록하였다. 게다가 선전항과 광저우항 이외에 중국 남부지역도 지속적으로 항만개발을 확대하고 있어 국제물류거점으로서 홍콩항의 경쟁우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홍콩항은 그동안 정치적·법적 안정성, 거대한 배후시장, 우수한 항만 인프라, 금융 및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지정학적 이점 등으로 인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선호하는 항만이였다. 특히 중국경제의 고속성장과 이에 따른 남중국 물동량 급증의 수혜를 누려왔다.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과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도 수출입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중국

역시 항만 및 공항개발을 비롯한 물류인프라 확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항과 창이공항 등과도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남부지역의 항만은 홍콩항의 처리물량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6년 홍콩항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2,340만 TEU를 처리한 데 반해 중국 선전항은 전년대비 14% 성장한 1,800만 TEU를 처리하여 홍콩항과 격차를 줄여 나갔으며, 광저우항 역시 전년대비 40%의 고속성장을 지속해 나갔다. 게다가 중국은 주장삼각주지역에 난사항(南沙港)을 개장하여 홍콩항의 발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사실 이런 국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예견되어 왔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중국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공장이 중북부로 옮겨가면서 중국 항만의 물동량 처리가 다변화하고 다핵화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물동량 처리를 위해 중국정부가 상하이항, 선전항, 광저우항, 닝보항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홍콩항에서 처리하던 물량을 중국 자체에서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에 홍콩정부는 홍콩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홍콩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중국 항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수출입 화물의 운송원가 절감²⁹⁾을 위한 선박등록비 및 항만시설 이용료 인하, IT 기술을 활용한 무역편리화 추진 및 양안삼지 간 전자물류서비스 시스템 연구, 중국 남부지역 간 복합운송 확대를 위한 내륙운송 인프라 구축³⁰⁾ 등이다.

홍콩항은 인접한 중국의 남부지역 항만들과 실적면에서 경쟁하기보다는 기능면에서 분업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옌티엔(鹽田), 셔코우(蛇

29) 2005년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항의 화물처리 비용은 선전항이나 광저우항에 비해 약 300달러 정도 비싼 데다 육로운송에 따른 추가비용과 시간 등으로 화주들이 선전항과 광저우항을 선호한다고 한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하면 중국 동관에서 미국 서해안까지 홍콩항을 이용한 운임 비용이 선전항보다 36%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30) 복합운송 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에는 선전-홍콩 간 서부 통로 개통,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 건설, 광저우-선전-홍콩 간 고속철도 건설, 상수이(上水)-루오마저오(落馬洲) 간 철도지선의 추진 등이다.

口), 츠완(赤灣) 등 선전항의 주요 컨테이너 부두는 주로 홍콩기업의 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홍콩항과 중국 남부지역 항만의 동시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항만들이 경쟁적으로 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화물처리량이 감소하고 있는 홍콩은 규모의 확장보다는 서비스로 승부하는 발전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만의 경우, 대표적인 항인 가오슝항(高雄港)은 대만의 최대 항만이자 세계적인 환적항으로 유명하다. 2005년 컨테이너 처리물동량은 947만 TEU로 2004년의 971만 TEU에 비해 2.5% 감소했다. 이는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선전, 부산에 이어 세계 6위의 기록이다.

가오슝항이 다른 항만과 구별되는 점은 자국화물보다 환적화물이 더 많다는 것인데 전체 처리량의 절반 이상이 환적화물이다. 동남아 국가에다 중국의 화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환적화물 비중이 높아졌다. 가오슝은 항만배후에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과 특별지역(Special Zone)을 두고 있다. 수출가공구는 1995년부터 대만의 경제부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수속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출입을 자유화하고 수입관세를 면제한 생산거점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아시아태평양 경제 및 무역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항만구역 내에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외에 창고나 물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수출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상품세가 면제되고, 화물자동통관시스템(CCAS: Cargo Clearance Automation System)으로 통관관리를 하므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편이다.

그러나 한때 세계 3위로 고속성장을 거듭하던 가오슝항은 홍콩, 싱가포르와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고, 상하이, 선전 등 중국 항만의 급성장에 밀리면서 6위로 떨어졌다. 이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유럽과 미주로 가는 대형선들이 종전과 달리 대만해협을 두고 대만과 마주하고 있는 샤먼항(廈門港)으로 직기항하면서 가오슝을 기점으로 하던 중국의 환적화물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타이베이 해운대리점협회는 중국 본토의 무역량 확대와 함께 현대식 항만이 잇따라 완공됨에 따라 원양 간선 선박이 중국 항만으로 직항하는 추세

가 지속되면서 가오슝항이 피더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8년에 상하이와 선전이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데 반해 가오슝항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게다가 중국-홍콩 간 CEPA 체결은 대만의 입장에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중국-홍콩 간 CEPA 체결로 중국시장 진입 혹은 경쟁의 벽이 높아지면서 대만이 아·태 지역의 물류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고, 나아가 중국시장을 겨냥하여 미국 및 유럽의 기업들과 합작할 가능성마저 줄어들게 되었다.³¹⁾

대만 교통부는 이러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2006년 고효율, 고품질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가오슝항의 경쟁력 강화 조치를 마련했다. 즉 △ 항만 효율에 대한 특혜 조치 및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 장려조치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해 선사와 하주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포트 세일즈를 강화 △ 가오슝항의 자유무역 지역규모를 확대하고 컨테이너 장치장 부지를 최대한 확보 △ 항만 부지이용 현황을 재검토해 토지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무역항법’에 근거해 민간업체와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민간업체들이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2006년 7월부터는 가오슝 무역항 시설의 임대 및 건설요건 규정을 수정해 민간업체 운영에 정부 관여를 최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 △ 교통부의 항만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해운업계에 단일 정보창구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전자화 정보화를 추진 △ 6단계 신규 터미널 건설 가속화 △ 하역장비 교체 등 시설개선과 항로준설 등을 통해 선박 대형화에 부응하고 터미널 운영효율을 향상시키는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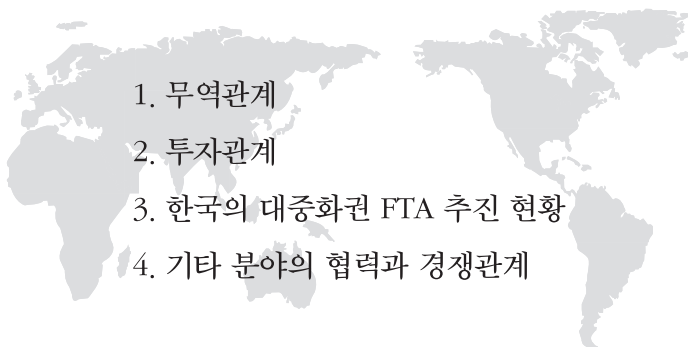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기업을 통해 대만이 글로벌 공급사슬의 필수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국제물류센터를 개발하고, 투자 및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법안 개선 및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글로벌 공급사슬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 등 세계 전자산업의 주요 제조기지인 대만은 제품

31) Lin(2004).

생산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전자산업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장제쓰 (Chian Kai-Shek)공항 화물터미널과 가오슝 항만물류단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물류센터와 고객서비스전담반(LSP) 구성하며, 세관 업무시간의 연장하고, 사전승인 관세제도를 채택하는 등 물리적 시간의 단축을 꾀하고 있다.

제3장

한국의 대중화권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이슈



1. 무역관계
2. 투자관계
3. 한국의 대중화권 FTA 추진 현황
4. 기타 분야의 협력과 경쟁관계

한국의 대중화권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이슈

1. 무역관계

가. 한국의 대중화권 무역협력 현황

한국의 중화권에 대한 교역액은 1980년 14.9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1,614억 달러로 과거 26년간 연평균 19.7%씩 증가하여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 증가율 11.2%를 크게 상회하였다. 한·중 간 교역확대 과정에서 한국의 중화권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해 왔다. 중화권이 한국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10.5%에서 2006년에는 25.4%로 높아졌으며, 특히 한국의 수출에서 중화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4.1%에서 31.2%로 상승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직교역액은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1,180억 달러로 연평균 23.2%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중화권과의 교역 확대를 주도하여 왔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1992년 27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69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1992년 6위의 수출대상국에서 2003년 이후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국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4.0%에서 2006년에는 18.6%로 높아졌으며,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3.5%에서 2005년에는 21.8%까지 높아진 이후 2006년에는 대중국 수출증가율

둔화로 21.3%로 소폭 둔화되었다.

한편 한국과 대만은 역사적으로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 정치 ·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 수교한 1992년 국교가 단절되고 한 · 중 간 경제협력이 급속하게 추진되면서 한 · 대만 간 경제교류는 크게 주목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3-1. 한국의 대중화권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1990년	1992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출입	대세계	1,349	1,584	2,602	3,327	2,915	3,146	3,726	4,783	5,457	6,348
	3 China	99	167	345	560	523	645	873	1,179	1,371	1,614
	비중(%)	7.4	10.5	13.3	16.8	17.9	20.5	23.4	24.6	25.1	25.4
	중 국	29	64	165	313	315	412	570	793	1,006	1,180
	홍 콩	44	67	115	120	107	118	174	214	176	211
	대 만	27	36	64	127	101	115	129	172	189	223
수출	대세계	650	766	1,251	1,723	1,504	1,625	1,938	2,538	2,844	3,255
	3 China	56	108	237	372	335	405	568	777	883	1,014
	비중(%)	8.6	14.1	19.0	21.6	22.3	24.9	29.3	30.6	31.0	31.2
	중 국	6	27	91	185	182	238	351	498	619	695
	홍 콩	38	59	107	107	95	101	147	181	155	190
	대 만	12	23	39	80	58	66	70	98	109	130
수입	대세계	698	818	1,351	1,605	1,411	1,521	1,788	2,245	2,612	3,094
	3 China	43	58	108	188	188	239	305	402	487	599
	비중(%)	6.2	7.1	8.0	11.7	13.3	15.7	17.1	17.9	18.7	19.4
	중 국	23	37	74	128	133	174	219	296	386	486
	홍 콩	6	8	8	13	12	17	27	33	20	21
	대 만	15	13	26	47	43	48	59	73	81	93
무역수지	대세계	-48	-51	-101	118	93	103	150	294	232	161
	3 China	13	50	129	184	146	166	263	376	396	415
	중 국	-17	-11	17	57	49	64	132	202	233	209
	홍 콩	32	51	98	94	82	85	119	149	135	169
	대 만	-2	9	13	33	15	18	12	25	28	37

자료: 한국무역협회 DB로부터 작성.

고 양국 간 경제교류는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현재 대만은 중국, 미국, 일본, 홍콩에 이은 한국의 5대 수출대상국이자 8대 수입대상국이다. 또한 한국의 대대만 무역흑자도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4년 이후 반등하고 있으며 2006년 한국의 대대만 무역흑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대만은 한국무역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중국과의 직교역이 확대되면서 홍콩을 통한 중계무역이 한·중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 수출시장인 동시에 중국에 이은 2위 무역흑자 대상국이다. 한·중 간 수교 이후 직교역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홍콩을 경유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8.0%에서 2006년에는 11.8%로 낮아져 한·중 교역에서 홍콩의 활용도는 이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홍콩은 여전히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규모는 93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홍콩 수출액의 49.1%에 해당한다.³²⁾ 또한 중국산 제품이 홍콩을 거쳐 한국

■ 표 3-2. 홍콩경유 중계무역을 감안한 한국의 대중국 무역 추이 ■

(단위: 억 달러)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대중국 수출	소 계(A=B+C)	127	231	224	288	411	565	698	788
	직수출(B)	91	185	182	238	351	498	619	695
	중계무역(C)	36	47	42	50	60	67	79	93
	C/A(%)	28.0	20.3	18.9	17.4	14.5	11.9	11.3	11.8
대중국 수입	소 계 (D)	74	128	133	174	219	296	386	486
	중계무역(E)	9	16	16	18	22	28	33	38
	직수입(F=D-E)	65	112	117	156	197	267	353	448
	E/D (%)	12.7	12.4	12.0	10.6	10.1	9.6	8.5	7.8

주: 중계무역액은 1\$=7.78HK\$로 환산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및 CEIC를 이용하여 추계함.

32) 한국의 대홍콩 수출 중에서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1995년 33.4%에서 2002년 49.3%까지 상승한 이후 2004년에는 37.2%까지 하락하였으나, 홍콩과 중국 간 CEPA 체결과 중국이 가공무역을 제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홍콩을 경유한 중계무역이 다시 확대되면서 2005년에는 50.7%까지 상승하였다.

으로 재수출되는 규모는 38억 달러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 간 교역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무역구조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한·중 수교 초기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양국 간 교역은 주로 농산물과 광물성원료 등의 일차상품과 직물, 섬유사, 섬유원료, 석유화학제품 등의 소재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은 중국에 직물 및 섬유원료,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는 농산물, 직물, 요업제품, 광물성원료, 철강제품을 주로 수입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교역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 및 휴대폰 관련부품, 자동차부품이 중요한 교역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즉 양국 간 교역이 소재류 중심구조에서 부품류 중심구조로, 노동집약적 제품 중심구조에서 기술집약적 하이테크 제품 중심구조로 변화된 것이다. 양국 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품목은 광물성원료와 철강제품, 석유화학 등 소재류 제품이다. 광물성원료의 경우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석탄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한국은 중국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분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품은 산업용 중간재로서 중국의 산업화 진전에 따라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 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양국 간 교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품목으로는 가전제품과 전자부품을 들 수 있으며, 2000년대 초반 이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품목으로는 산업용 전자제품과 자동차부품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기술수준에서 비교적 높은 단계에 속한 제품들이면서 자본재나 중간재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는 중국이 전자산업의 세계적인 최종재 조립가공 기지로 등장하면서 관련설비 및 부품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양국 간 교역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품목으로는 섬유 관련품목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위축된 품목으로는 직물, 가죽 및 모피제품, 제지원료 및 종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기술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단계에 속한다. 즉 1990년대 후반까지는 이 상품들이 한국의 주중

수출품이었지만, 해당산업에서 중국 내 생산이 증가하면서 점차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표 3-3.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순위	1992년		1997년		2001년		2006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총계	2,654	총계	13,572	총계	18,190	총계	69,459
1	철강	802	석유화학	2,252	석유화학	3,337	전자부품	13,235
2	석유화학	460	광물성연료	1,549	광물성연료	1,671	석유화학	11,311
3	직물	267	직물	1,432	전자부품	1,636	산업용전자제품	10,136
4	가죽·모피	142	철강	949	직물	1,595	광물성연료	5,047
5	섬유원료	130	가죽·모피	807	산업용전자제품	1,429	철강	3,540
6	산업기계	108	전자부품	583	철강	1,380	수송기계	3,509
7	제지원료·종이	90	산업기계	528	가죽·모피	676	기초산업기계	3,334
8	광물성연료	83	섬유사	508	가정용전자제품	676	비철금속제품	2,746
9	전자부품	68	섬유원료	507	산업기계	615	가정용전자제품	2,078
10	정밀 화학제품	55	제지원료·종이	457	정밀 화학제품	581	산업기계	2,042
	소계	2,204	소계	9,572	소계	13,596	소계	56,978

주: MTI 2단위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DB(www.kita.net).

나. 한·중 간 분업구조

1) 가공단계별 교역구조

한·중 간 교역을 가공단계별³³⁾로 구분하여 보면 한·중 간의 교역에서 중간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가공단계

33) UN의 BEC(Broad of Economic Categories) 분류는 HS 6단위(또는 SITC 3단위)의 제품을 가공단계 별로 재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 국제무역 데이터를 일차상품,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S 상품분류 코드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HS 6 단위를 사용하여 BEC 분류를 시도하였다.

별로 살펴보면,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의 88.8%에서 2006년에는 79.9%로 낮아졌으나 한국의 전체 수출구조 및 전세계 수출상품 구조와 비교할 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지나치게 중간재에 편중되어 있다.³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서는 반제품에서 부품과 부분품 중심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대중국 수출에서 반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84.0%에서 2006년에는 44.0%로 하락한 반면, 부품과 부분품 비중은 4.8%에서 35.9%로 높아졌고 자본재 비중도 7.3%에서 16.7%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세계의 생산기지로 자리 잡으면서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주변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간재 비중이 2002년을 저점으로 다시 높아진 것은 휴대폰과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에 조립공장을 설립하면

■ 표 3-4.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입 구성 ■

(단위: %)

구 분		1992년	1997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대 중 수 출	일차상품	0.5	0.3	0.4	0.4	0.5	0.5	0.6	0.6	0.1	
	중간재	소 계	88.8	82.6	84.9	83.4	76.1	76.5	79.7	82.0	79.9
		반제품	84.0	72.3	65.2	64.0	52.0	46.2	43.9	42.0	44.0
		부품 및 부분품	4.8	10.3	19.7	19.5	24.1	30.3	35.8	40.0	35.9
	최종재	소 계	10.7	17.1	14.7	16.2	23.4	23.0	19.7	17.3	20.0
		자본재	7.3	11.2	9.9	11.1	18.5	18.6	16.2	14.0	16.7
소비재		3.5	5.9	4.8	5.1	4.9	4.4	3.5	3.3	3.3	
대 중 수 입	일차상품	37.1	20.6	16.1	12.9	12.6	12.5	9.1	9.4	5.9	
	중간재	소 계	50.3	53.2	50.3	48.9	48.2	48.0	52.8	54.7	57.9
		반제품	48.6	44.4	34.4	32.0	31.4	29.9	34.2	35.3	36.9
		부품 및 부분품	1.6	8.9	16.0	16.9	16.8	18.1	18.6	19.4	20.9
	최종재	소 계	12.6	26.2	33.6	38.2	39.1	39.4	38.1	35.8	36.2
		자본재	2.6	6.6	13.7	14.5	14.9	16.9	18.4	18.5	18.7
소비재		10.0	19.5	19.8	23.6	24.3	22.5	19.8	17.3	17.5	

자료: 한국무역협회 DB(www.kita.net).

34) 200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세계 수출상품 구성은 중간재가 57.5%(반제품 31.5%, 부품 및 부분품 25.9%), 최종재가 42.4%(자본재 27.6%, 소비재 14.8%), 일차상품이 0.1%로 대중국 수출구조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서 휴대폰과 완성차 등 최종재 수출이 관련부품 수출로 대체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중국 수입에서도 중간재 비중은 상승세를, 소비재와 일차상품 비중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7.9%로 2002년에 비해 9.7%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최종재 비중은 36.2%로 2.9%포인트 하락하였다. 중국의 자원 수출 규제와 대중국 의류 수입 증가를 둔화로 일차상품과 소비재 비중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자·통신 분야의 산업내 분업 확대, 중국 소재 한국기업의 역수입 등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 한·중 간 분업 구조

한·중 간 교역의 분업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통계를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교역구조를 살펴보고, 산업내무역지수³⁵⁾를 추정하였다. 양국이 무역을

35) 산업내무역의 측정에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Grubel-Lloyd 지수(GL 지수)라고 할 수 있다. Grubel Lloyd(1975)는 산업내무역을 “개별산업의 수입액과 정확하게 중복되는 동일 산업의 수출액”으로 정의하고 특정 i 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GL_i = \left(\frac{(X_i + M_i) - |X_i - M_i|}{(X_i + M_i)} \right) = 1 - \frac{|X_i - M_i|}{(X_i + M_i)}$$

또한 n 개의 세부 산업을 포함하는 대분류 산업 또는 전체 산업내무역지수는 세부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를 교역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할 수 있다.

$$GL_{Total} = 1 - \frac{\sum_{i=1}^n |X_i - M_i|}{\sum_{i=1}^n (X_i + M_i)}$$

이 GL 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지수값이 0인 경우는 완전한 산업간 무역을 나타내며, 수출 또는 수입 중 어느 하나가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전체 무역액 중에서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큰 것을 의미하며, 이 지수가 1인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이 정확히 중복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Data는 한국무역협회의 data base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있어 HS 6단위를 기준의 공산품 수출입 통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업내무역지수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 품목을 고려하여 산업내무

재개한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양국 간 무역은 경제발전단계에 차이가 나는 인근 국가 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무역구조를 나타내었다. 즉 한국이 농수산물, 석탄, 원유 등의 1차 상품과 섬유직물 그리고 저급의 철강 및 화학제품을 주로 수입하는 반면, 고급 철강제품, 합성수지 등의 석유화학 제품, 고급 직물 등의 수출용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고 또한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의 소비재를 일부 수출하는 구조를 나타냈다. 이 시기 양국 간 무역은 대체로 산업간무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국 간 무역에서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의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의 비중이 크게

▮ 표 3-5. 주요 업종별 한·중 간 산업내무역 지수 추이 ▮

(단위: %)

	제조업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석유화학	기타제조업
1992년	11.90	11.47	22.37	4.52	9.39	7.37	2.30	17.56
1993년	13.05	8.52	29.20	0.53	6.99	10.42	3.30	19.93
1994년	18.49	18.43	35.33	3.26	7.41	12.54	5.22	25.40
1995년	19.36	19.12	47.72	2.02	6.74	12.75	6.63	23.89
1996년	20.74	17.32	56.07	2.93	9.10	13.26	5.26	21.07
1997년	19.86	12.63	55.78	6.78	13.13	14.73	5.94	15.32
1998년	18.37	7.58	44.90	2.24	10.04	16.73	2.63	16.34
1999년	23.40	12.78	46.51	8.63	15.15	16.66	3.17	21.27
2000년	26.02	12.77	52.53	14.73	15.48	15.91	3.40	22.15
2001년	28.07	12.64	54.94	7.04	19.93	15.70	3.27	24.78
2002년	27.90	15.00	45.22	7.42	18.47	18.68	3.76	25.01
2003년	28.11	12.92	45.39	4.34	16.75	18.67	3.36	25.94
2004년	28.73	20.95	47.00	4.85	18.74	19.03	3.13	23.73
2005년	29.96	22.43	48.96	8.06	26.28	22.86	4.01	21.58
2006년	34.15	22.06	55.37	16.33	32.33	22.81	7.73	24.85

자료: 한국무역협회 DB(www.kita.net).

역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통계를 이용하여 한·중 간 무역구조를 산업간무역과 산업내무역으로 구분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한·중 간의 산업내무역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중 간 무역은 산업간무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내무역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HS 6단위를 기준으로 한·중 간 공산품 교역에 있어 산업내무역지수는 1992년 11.9에서 2005년에는 34.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투자관계

가. 투자 현황

1) 한국의 대중화권 투자 현황

2006년 말 현재 중화권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 건수는 1만 6,914건으로 전체 해외투자 건수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액은 202억 5,800만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액의 29.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 국가로서 2006년 말 현재 대중국 투자건수는 1만 5,921건, 투자액은 17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축소하고 가공 무역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면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대만 간 투자는 무역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대대만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실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2003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5년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약 1.7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LCD 장비 업체가 4,000만 달러 규모의 LCD용 포토마스크 공장을 타이중(台中)에 신설함으로써 2005년도의 투자금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2006년도 대대만 투자진출은 모두 26건, 약 3,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6년 투자 역시 반도체 및 LCD 장비·부품 업체의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며

제조업 분야에서의 대대만 투자는 대만 내 고객사에 대한 제품공급 목적의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대(對)홍콩 투자는 총 누계로 2006년 말 현재 834건, 30억 달러를 기록하여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투자대상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의 중화권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에 편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 표 3-6. 한국의 대중화권 직접투자 현황(투자 기준) ■

연도	대세계		3 China*				중 국		홍 콩		대 만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	백만 달러	건	비중 (%)	백만 달러	비중 (%)	건	백만 달러	건	백만 달러	건	백만 달러
1990년 말 누계	1,511	2,888	131	8.7	54	1.9	32	23	96	29	3	2
1991년	444	1,110	90	20.3	60	5.4	69	42	19	13	2	4
1992년	497	1,217	211	42.5	190	15.6	170	141	38	44	3	5
1993년	689	1,264	413	59.9	296	23.4	382	264	31	31	0	1
1994년	1,487	2,304	878	59.0	687	29.8	840	636	35	46	3	5
1995년	1,332	3,102	791	59.4	933	30.1	751	842	37	88	3	3
1996년	1,471	4,458	774	52.6	1,077	24.2	740	930	26	100	8	47
1997년	1,331	3,710	660	49.6	806	21.7	631	742	26	57	3	8
1998년	617	4,813	290	47.0	1,087	22.6	266	696	17	377	7	14
1999년	1,095	3,330	497	45.4	705	21.2	459	366	31	334	7	6
2000년	2,088	5,072	841	40.3	970	19.1	775	712	54	252	12	6
2001년	2,153	5,164	1,097	51.0	762	14.7	1,049	639	40	99	8	23
2002년	2,494	3,702	1,457	58.4	1,269	34.3	1,389	1,032	59	228	9	8
2003년	2,811	4,067	1,759	62.6	1,790	44.0	1,679	1,671	68	107	12	12
2004년	3,763	5,991	2,249	59.8	2,519	42.0	2,143	2,301	85	197	21	21
2005년	4,396	6,560	2,343	53.3	2,978	45.4	2,243	2,649	68	272	32	57
2006년	5,190	10,759	2,433	46.9	4,076	37.9	2,303	3,320	104	725	26	32
2006년 말 누계	33,369	69,509	16,914	50.7	20,258	29.1	15,921	17,005	834	2,998	159	255

주: * 3 China는 중국, 홍콩, 대만을 가리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한국의 대중화권 투자 건수의 77%, 투자액의 75%가 제조업에 투자되었으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투자건수의 19%, 투자액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국 대륙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홍콩과 대만에 대한 투자는 서비스업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84%에 달하

▮ 표 3-7. 한국의 대중화권 투자업종 분포(2006년 말 현재) ▮

업종	투자건수(건)					투자액(백만 달러)				
	3 China	구성(%)	중국	대만	홍콩	3 China	구성(%)	중국	대만	홍콩
농림어업	238	1.4	234		4	77	0.4	73		4
광업	73	0.4	71		2	62	0.3	58		3
제조업	13,049	77.1	12,671	64	314	15,166	74.9	14,314	75	777
음식료품	919	5.4	911	3	5	695	3.4	666	1	28
섬유의복	2,397	14.2	2,372		25	1,564	7.7	1,539		24
신발가죽	729	4.3	712	1	16	476	2.3	462	0	14
목재가구	427	2.5	425		2	120	0.6	120		0
종이인쇄	259	1.5	250	2	7	187	0.9	154	2	31
석유화학	1,160	6.9	1,130	5	25	1,797	8.9	1,543	7	248
비금속광물	402	2.4	399	2	1	848	4.2	841	7	1
1차금속	295	1.7	288	1	6	924	4.6	923	0	1
조립금속	605	3.6	598		7	477	2.4	469		8
기계장비	1,486	8.8	1,444	11	31	1,305	6.4	1,148	15	142
전자통신장비	1,947	11.5	1,775	35	137	4,107	20.3	3,835	41	230
수송기계	685	4.0	676	2	7	1,899	9.4	1,880	1	18
기타제조업	1,738	10.3	1,691	2	45	769	3.8	735	1	33
건설업	235	1.4	218	6	11	568	2.8	394	2	172
도소매업	1,380	8.2	998	55	327	2,289	11.3	830	82	1,376
운수창고업	133	0.8	95	5	33	210	1.0	124	2	84
통신업	43	0.3	34	4	5	134	0.7	95	35	4
금융보험업	5	0.0	2		3	5	0.0	1		4
음식숙박업	517	3.1	508	1	8	331	1.6	330	0	2
기타 서비스업	1,151	6.8	1,007	24	120	740	3.7	476	59	204
부동산업	89	0.5	82		7	675	3.3	308		367
미분류	1	0.0	1			1	0.0	1		
전산업	16,914	100.0	15,921	159	834	20,258	100.0	17,005	255	2,99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는 반면, 대만과 홍콩에 대한 투자는 각각 29%와 26%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중국 투자의 경우 11%에 불과한 반면, 대만과 홍콩의 경우 각각 70%와 6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 외에 대홍콩 투자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국 투자액의 약 85%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기계·전자 등 노동집약형 가공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IT 관련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전자통신 관련 분야의 대중국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현대자동차의 중국 진출 이후 자동차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활발해졌다. 최근 들어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 또한 활성화되어 2006년 말 현재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국 투자건수는 2,644건으로 전체 대중국 투자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액은 18억 5,700만 달러로 대중국 투자액의 10.9%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소규모 투자사업인 도소매 등 유통 관련업종과 음식숙박업이 각각 37.3%와 19.6%로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자동차 관련 서비스, 전자 및 통신기기 판매 서비스 등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중화권 국가의 대한국 투자 현황

2006년 말 현재 중화권 3개 국가의 대한국 직접투자 건수는 신고기준으로 6,501건을 기록해 한국의 전체 외국인투자 건수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는 5,225건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중화권 국가로부터의 투자액은 54억 4,800만 달러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17억 9,500만 달러, 홍콩으로부터의 투자가 28억 8,700만 달러이다.

투자업종에 있어서는 서비스업 투자가 투자건수의 83%에 해당하는 5,487건이며 투자액은 3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제조업 투자건수는 1,015건, 투자액은 23억 3,300만 달러로 중화권 대한국 투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표 3-8. 중화권 국가의 대한국 직접투자(신고기준)

연도	투자건수(건)				투자액(백만 달러)			
	3 China	홍콩	중국	대만	3 China	홍콩	중국	대만
1990년 말 누계	167	146	2	22	239	226	3	10
1991년	21	15	3	3	11	10	1	1
1992년	19	9	6	4	12	10	1	2
1993년	48	15	29	4	84	75	7	2
1994년	67	27	33	7	114	43	6	65
1995년	95	35	51	13	78	58	11	10
1996년	98	26	63	9	237	229	6	2
1997년	118	32	76	11	92	85	7	1
1998년	138	24	97	20	53	38	8	6
1999년	422	59	323	41	518	460	27	32
2000년	1,303	68	1,165	72	451	123	76	251
2001년	913	70	812	32	552	167	70	314
2002년	555	86	442	28	492	234	249	9
2003년	617	62	522	35	120	55	50	15
2004년	696	69	596	32	1,271	89	1,165	17
2005년	775	64	672	39	901	820	68	13
2006년	449	80	333	37	223	165	40	18
2006년 말 누계	6,501	887	5,225	409	5,448	2,887	1,795	766

자료: 산업자원부.

표 3-9. 중화권 국가의 업종별 대한국 직접투자

	3 China		중 국		대 만		홍 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결과	6,608	5,515	5,312	1,805	415	770	902	2,940
농·축·수산·광업	40	11	34	6	4	5	2	0.09
제조업	1,015	2,330	540	1,453	179	142	303	736
서비스업	5,487	3,004	4,693	341	230	623	578	2,039
전기·가스·수도·건설	66	170	45	5	2	0	19	165

주: 신고기준, 2007년 3월 말 현재.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한국 투자의 주요 목적은 기술획득과 시장개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건수는 예상 외로 많으나 중국의 대한국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무역업과 관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편이다. 특히 2002년부터 중국 업체들이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장려정책에 힘입어 기술획득을 위해 한국기업을 상대로 M&A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만의 대한국 투자는 대만 IT 기업 및 창업투자회사들의 국내 벤처기업 투자와 전자부품 수출입을 위한 무역업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지분투자 및 상호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³⁶⁾ 홍콩의 대한국 투자는 무역업, 금융업 등 서비스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 투자협력 여건 변화와 전망

지금까지 한국과 중화권과의 투자협력을 평가하면 한국에서 중화권, 특히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투자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저임금과 방대한 내수시장 잠재력을 가진 중국을 한국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지만, 그동안 중국의 해외투자 여력 부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방대한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한·중 간 투자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1)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전환과 대중 투자 전망

중국정부는 산업정책과 외국인투자정책의 연계를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36) KOTRA에 의하면, 2006년 하반기에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 업체인 윈본드가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인 EMLSI에 141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것이 최대의 투자 사례이다. 또한 2006년 6월 대만 虹京(Hong Jing) 사가 360만 달러의 화학 폐촉매 처리공정의 투자를 신고하기도 하였다. 이 투자 건은 모두 제3국의 조세피난처(버진아일랜드 및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를 경유해 공식 정부 통계상으로는 대만 업체의 투자로 집계되지는 않았다.

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업종과 에너지 및 자원 다소비형 투자는 제한하고 신기술 또는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선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산업구조조정 촉진잠정규정」과 이에 근거한 「산업구조조정목록」을 발표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수정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산업정책 구조조정 목록에서는 향후 도태될 구체적인 산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³⁷⁾ 한편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³⁸⁾ 등 내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조치 또한 해소되어야 할 선결과제로 제시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도 축소 또는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우대정책의 변화로 동부 연해지역 투자에 대한 우대는 축소하는 대신에 외국인투자를 통해 저개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중서부 지역³⁹⁾과 동북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 중국내 인건비 및 지가 상승 등으로 중국을 가공무역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가 둔화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중국의 해외투자(走出去) 전략과 중국자본 유치 전망

2000년 10월 개최된 중공 15기 5중전회는 ‘10차 5개년(2001~2005년) 계획에 관한 건의’에서 走出去 전략을 대외개방정책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의미를

37) 2005년 12월 국무원이 발표한 「산업구조조정촉진잠정규정」 제12조와 13조 「산업구조조정목록」에서는 산업을 장려류, 제한류, 도태류로 분류하고, 도태류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원낭비, 환경오염, 안전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종은 도태류로 규정하고(제15조), 기술이 낙후되어 산업구조조정에 불리한 제한류에 대해서는 설비 확장 및 신축을 금지하고 있다(제16조).

38) 2007년 3월에 개최된 전인대 제10기 5중전회에서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율을 통일하는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 법에서는 기업소득세율을 30%에서 25%로 인하하였으며, 그동안 경제특구 등 일부 개방지역의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세율을 폐지하고, 수출기업과 일반 제조기업에 부여하였던 세제감면 우대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하이테크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하이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영세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39) 2003년 3월 11일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 발표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년 3월 전인대는 10.5 계획 강요에서 走出去 추진에 있어 4가지 과제⁴⁰⁾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2005년에 들어 중국은 대대적인 해외투자 규제 완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走出去 전략의 등장에는 ①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 달성, ② 중국 국내시장에서의 공급과잉 현상 발생, ③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 수요 증가, ④ 지속적인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 축적⁴¹⁾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해외투자 가이드라인으로서 ① ‘대외투자 국별 산업 지도 목록’, ② 중남미 지역에 대한 방직 가공업 무역 투자의 국별 지도 목록, ③ 아시아 지역에 대한 방직 가공업 무역투자의 국별 지도 목록, ④ 해외 가공무역 장려 제품 목록 등을 제정·공포하였다. 특히 2004년에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대외투자 국별 산업지도 목록」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67개 국가의 투자 또는 인수장려 산업들을 기업들에게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향후에는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가 점차 증가할

▮ 표 3-10. 주요국별 투자대상 업종 ▮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한국	- 자동차 등 교통운송설비 제조 - 화공원료 제조 -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	- 무역, 유통 - R&D - 건축, 교통운송
일본	-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 - 인쇄 기계제조 - 계측기 및 문화사무용품 기계 제조	- 무역, 유통 - R&D, 건축 - 소프트웨어 개발 - 교통운송
미국	- 자동차부품 등 교통 운송설비 제조 - 가전용 전자기기 제조 - 방직의류제조 - 원예설비 - 전동기구	- 무역, 유통 - 창고, R&D - 소프트웨어 개발 - 전신 서비스 - 교통운송, 금융

자료: 「대외투자국별산업지도목록」 정리.

40) ① 해외공사계약수주, 노동수출을 발전시키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며, 제품·서비스·기술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 ② 국내 부족한 자원에 대해 해외에서의 공동개발을 지지하고,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과 자원 효율제고를 촉진, ③ 해외의 지적자원(知的資源)을 이용한 R&D 센터 설치 장려, ④ 유력한 기업의 다국적 경영을 추진하고, 국제적인 발전실현 지원 등

41) 2006년 말 현재 1조 663억 달러에 이른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의 대한국 투자목적이 기술습득에 있다는 점에서 기술보호, 기술유출방지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며 중국기업에 의한 한국 전략산업에서의 M&A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의 대중화권 FTA 추진 현황

가.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전략

한국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

▮ 표 3-1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협상 단계	해당국가	진행상황
1단계	한·중 FTA	2007.10 산관학 공동연구 3차
	한·메르코수르(MERCOSUR) FTA	2007.10 공동연구 결과발표
2단계	한·미 FTA	2007.4.2 협상타결
	한·ASEAN FTA	2007.6 18차 협상(서비스협상)
	한·캐나다 FTA	2007.4 10차 협상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07.11 8차 협상
	한·EU FTA	2007.11 5차 협상
	한·일 FTA	2004.11 6차 협상
	한·멕시코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2006.6 3차 협상
3단계	한·칠레 FTA	2004.4.1 발효
	한·싱가포르 FTA	2006.3.2 발효
	한·EFTA FTA	2006.9.1 발효
	한·ASEAN FTA	상품 2007.6.1 발효
기타*	한·GCC FTA	2007.3 대통령 중동방문시 추진 합의

주: * 공동연구는 하지 않았으나 FTA 추진에 합의한 국가이다. FTA 추진 단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FTA 추진 의사 확인 후, FTA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1단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전개하여 FTA 협정 최종합의에 도달한 후(2단계), 마지막으로 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되는 단계(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자료: 필자작성.

보하고 개방을 통한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15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고 2007년 4월에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 41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07년 11월에는 ASEAN 과 서비스 분야의 협상이 타결되었다. 좀더 자세한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표 3-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한국 정부는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대외경제 규모가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경쟁국이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하에서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03년 이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으며, 2007년부터는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속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였으며, 현재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체결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나. 대중화권 FTA 추진 현황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양국 간 FTA에 대한 민간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이 양국의 간사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동 연구는 (1) 한·중 경제협력 현황, (2) 한·중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3) 한·중 FTA의 무역 및 투자효과, (4) 한·중 FTA의 산업별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양국은 2년간의 민간공동연구를 종료하였고 2006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2007년부터 1년간 한·중 FTA의 타당성에 대해서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산·관·학 공동연구에서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포괄 범위, 산업별 영향 분석, 민감품목 보호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4. 기타 분야의 협력과 경쟁관계

가. 금융협력과 금융허브 경쟁협력

1) 대중국 금융협력

(가) 정부 차원의 금융협력

한·중 간 금융협력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 따라서 양국은 우선적으로 아시아 금융협력 체계의 큰 틀 내에서 금융 협력을 진행하여 왔다. 2000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선언’⁴²⁾을 통해 ASEAN 스왑체제의 자금규모를 확대하고 ASEAN+3 내에서 양자 간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수지의 보전과 단기 유동성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안정을 제고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 9일 중국인민은행이 태국은행, 일본은행, 한국은행 및 말레이시아 국가은행 등과 85억 달러에 달하는 양자 간 스왑협정을 체결하였다. 2003년에는 양국 간 협정이 모두 체결되었는데 그 총액은 365억 달러 규모였다. 2007년 5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통화스왑협정 총액을 800억 달러로 확대하고 다자간 협력구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CMI 틀 내에서 역내 채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소규모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의 금융협력은 구체화되었다기보다는 주로 협의와 논의를 진행하는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3년 한·중 금융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2006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재정부와 중국인민은행이 참가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2006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14차 한·중 고위급 금융협력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중국 측에서는 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보험관리감독위원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양국 금융기관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감독 개선사항과 양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밖에도 2001년 6월 중국 증권 감독위와 한국 금융감독위는 「증권 및 선물감독관리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 장성(長城)자산관리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42)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당시 금융 부문의 지역협력체가 없어 타격을 입은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9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2회 ASEAN+3 정상회담에서 아시아지역의 포괄적 금융협력 추진을 합의했다. 2000년 5월에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역내금융위기 예방 시스템)」를 채택했다.

(KAMCO)가 양국 금융기관 간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협력과 관련하여 「재무 자문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금융기관들의 중국 진출 현황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9월 말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기관은 지점,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포함하여 총 45개이며 이 중 은행이 24개, 보험회사 13개, 증권사 5개, 할부금융 등 기타 3개 등이 있다(표 3-12 참고).

하나은행이 청도에 합작은행을 설치한 것을 제외하면 한국의 은행들은 모두 지점과 사무소 형태로 중국에 진출해 있으며 영업점 진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민, 기업, 산업, 수출입, 신한, 외환, 우리, 하나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중국에 20개 지점과 3개 사무소, 1개 현지법인을 설치하고 있다. 진출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톈진, 선양, 다롄, 광저우 등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 주재 한국계 은행들의 주요업무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신용장 관련업무, 현지 외환대출과 일부 위엔화 대출 등을 포함한다.

■ 표 3-12. 한국계 금융회사의 업종별·형태별 중국진출 현황 ■

업종	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계
은행	3	20	1	24
손해보험	7	0	2	9
생명보험	3	0	1	4
증권	5	0	0	5
신기술사업	2	0	0	2
할부금융	1	0	0	1
합계	21	20	4	45

주: 2007년 9월 말 기준.

자료: 국제금융센터; 필자 추가 정리.

표 3-13. 한국계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 현황

업종	회사명	진출형태	도시명	개설일자
생보	삼성생명	사무소	북경	1995년
생보	대한생명	사무소	북경	2003년
생보	교보생명	사무소	북경	2004년
생보	삼성생명(중항삼성생명보험주)	현지법인	북경	2005년
손보	삼성화재	사무소	북경	1995년
손보	LIG화재	사무소	북경	1996년
손보	현대해상	사무소	북경	1997년
손보	코리안리	사무소	북경	1997년
손보	삼성화재(삼성화재(중국)법인)	현지법인	상하이	2001년
손보	LIG화재	사무소	상하이	2003년
손보	삼성화재	사무소	청도	2003년
손보	동부화재	사무소	북경	2006년
손보	현대해상(현대재산보험유한공사)	현지법인	북경	2007년
신기술사업	KTB 네트워크	사무소	북경	2001년
신기술사업	KTB 네트워크	사무소	상하이	2007년
은행	산업	사무소	북경	1992년
은행	수출입	사무소	북경	1993년
은행	신한	지점	천진	1994년
은행	외환	지점	천진	1994년
은행	외환	지점	대련	1995년
은행	우리	지점	상하이	1995년
은행	산업	지점	상하이	1996년
은행	하나(청도국제은행)	현지법인	청도	1996년
은행	외환	지점	북경	1996년
은행	기업	지점	천진	1997년
은행	하나	지점	상하이	2000년
은행	기업	지점	청도	2003년
은행	우리	지점	북경	2003년
은행	외환	지점	상하이	2003년
은행	신한	지점	상하이	2003년
은행	수출입	사무소	상하이	2004년
은행	하나	지점	심양	2004년
은행	기업	지점	심양	2005년
은행	산업	지점	광주	2005년
은행	우리	지점	심천	2005년
은행	신한	지점	청도	2005년
은행	기업(한국기업은행 연대은행)	지점	연대	2006년
은행	우리	지점	소주	2007년
은행	국민	지점	광주	2007년
증권	우리투자증권	사무소	상하이	1996년
증권	현대증권	사무소	상하이	1998년
증권	삼성증권	사무소	상하이	2002년
증권	한화증권	사무소	상하이	2003년
증권	미래에셋증권	사무소	북경	2007년
할부금융	현대캐피탈	사무소	북경	2005년

주: 2007년 9월 말 현재. ()안은 현지법인명.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해외점포 현황.

2) 대홍콩 금융협력

홍콩진출 한국계 금융기관은 2007년 9월 현재 총 25개 사이다. 상업은행은

표 3-14. 홍콩진출 한국계 상업은행의 인가형태별 현황

구분	은행명	비고
완전인가은행(3)	외환*, 우리*, 하나*	모든 종류의 예금수취 가능 당좌예금계정 개설 가능
제한인가은행(4)	산업, 기업*, 국민, 신한*	HK\$50만 이상 예금수취 가능
예금수취회사(3)	수출입, 신한투자은행, 우리투자은행	만기 3개월 이상, HK\$10만 이상 예금수취가능

자료: 문일재(2007), p. 4.

표 3-15. 한국계 금융기관의 홍콩 진출 현황

업종	회사명	진출형태	개설일
은행	외환	지점	1967년
	우리	지점	1980년
	신한(신한아주금융유한공사)	현지법인	1982년
	산업(산은아주금융유한공사)	현지법인	1986년
	산업	사무소	1986년
	기업	지점	1993년
	하나	지점	1994년
	국민(국민금융아주유한공사)	현지법인	1995년
	수출입(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현지법인	2004년
	우리(홍콩우리투자은행)	현지법인	2006년
리스	신한	지점	2006년
	한국개발금융(한국개발리스홍콩현지법인)	현지법인	1992년
	스타리스(한일리스금융유한공사)	현지법인	1993년
생보	CNH캐피탈(조흥리스금융유한공사)	현지법인	1995년
	삼성생명(삼성자산운용아주유한공사)	현지법인	2002년
손보	코리안리(홍콩중개현법)	현지법인	1996년
증권	대우증권(대우증권 홍콩현지법인)	현지법인	1994년
	우리투자증권(우리증권 홍콩현지법인)	현지법인	1995년
	현대증권(현대증권 홍콩현지법인)	현지법인	1997년
	한국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아주유한공사)	현지법인	1998년
	삼성증권(삼성증권 홍콩법인)	현지법인	2001년
	한누리투자증권(한누리 홍콩현지법인)	현지법인	200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미래에셋홍콩자산운용(주))	현지법인	2006년
미래에셋증권	현지법인	2007년	

주: 2007년 9월 말 현재. ()안은 현지법인명.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해외점포 현황.

산업, 기업, 수출입, 외환, 신한, 신한투자, 우리, 국민, 하나, 우리투자은행 등 총 10개사이며, 사무소 형태의 한국은행 포함시 11개 사가 된다. 홍콩에 진출한 국내 증권사는 대우, 삼성, 우리투자, 현대, 한누리, 한국투자,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사 등 8개 사이며, 보험사로는 코리안리가 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국계 금융기관이 최고 82개 사까지 진출하였으나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3) 대(對)대만 금융협력

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을 위한 정부간 및 중앙은행간의 협력 기제 중 한국과 대만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1994년 출범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와 1966년 설립된 중앙은행 간 협력기구인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이다. SEACEN은 처음에 훈련과 연구조사를 위한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회원국 중앙은행들 간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포럼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정부간의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금융협력 기제는 없다.

한편 최근 글로벌 은행들이 대만 시장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과달리, 국내 주요 은행들은 120여 개에 달하는 해외점포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만에 지점을 둔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 2004년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대만은행 인수를 고려한 적이 있었으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대만 은행들은 해외 투자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 대만 정부는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대만 진출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며, 지속적인 금융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계 빅뱅이 예상되는 등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물류협력과 물류허브 경쟁

1)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과 주변국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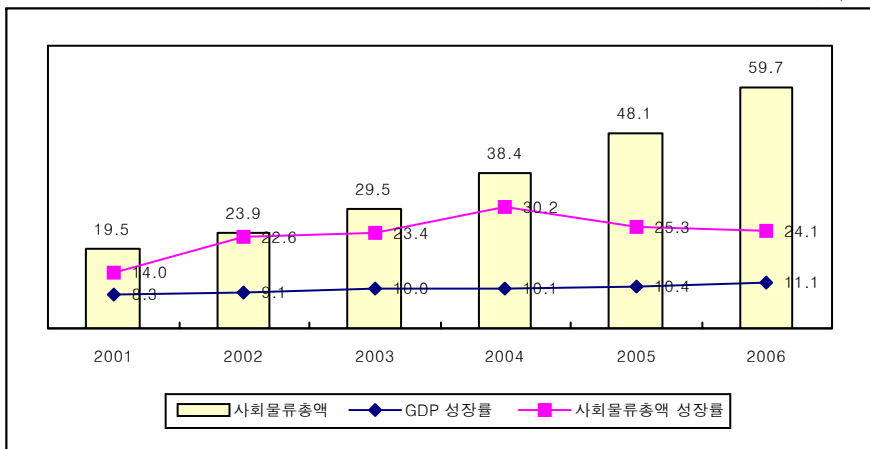
(가) 중국 물류산업 발전 현황과 발전 전망

개혁개방 이래 연평균 10%가 넘는 경제성장과 수출입 물동량 확대, 그리고 내수시장의 성장 등으로 중국의 물류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국제 분업 확대와 공급사슬 경영 강화로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중국 물류시장의 위상도 강화되어가고 있다.

중국의 물류 규모를 나타내는 ‘사회물류총액’⁴³⁾은 2001~2006년 사이 연평균 20%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GDP 성장속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그림 3-1 참고). 중국은 향후 10~15년 사이, 특히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경제의

■ 그림 3-1. GDP 성장률과 사회물류총액 성장률 추이 비교 ■

(단위: 조 위엔, %)



자료: 중국물류연감(2006).

43) 중국의 ‘사회물류총액’은 제조업, 농업, 수입 등의 제조,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의 제반 분야에 걸쳐 총체적으로 발생한 물류수요의 총량을 말한다.

고속성장과 수출입 무역의 증가세에 힘입어 물류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 기간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8.5%에 이를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물류총액도 16%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0년에는 80조 위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성장은 물류서비스 수요를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으나 물류 서비스 공급은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중국정부는 물류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낙후된 물류인프라와 비효율적인 운영시스템 등으로 인해 GDP에서 차지하는 국가물류 비중은 2006년 기준 18.3%로 선진국의 10%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GDP 대비 국가물류비의 비중은 1991년 24.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운영효율면에서 일정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물류산업은 개혁개방 이후 규모나 기술면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물류산업의 육성을 국가발전의 중요한 정책으로 격상시키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가고 있다. 특히 WTO 가입과 그에 따른 개방화 요구에 따라 물류산업의 제반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정책 주도와 각 지방정부의 강력한 추진하에 물류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물류산업 육성과 규제완화를 위해 이미 WTO 가입 이전인 2001년 3월에 「현대 물류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我国现代物流发展的若干意见)」과 2004년 9월 이의 후속조치인 「현대 물류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我国现代物流业发展的意见)」을 발표하였다.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있어서도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계 물류기업 및 제3자 물류기업의 중국 물류시장 진출과 중국 물류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2005년 11월 중국 물류시장의 전면개방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지분제한이 철폐되면서 많은 다국적 물류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물류업 시장이 개방되었고, 항만 및 도로 등 물류인프라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허용되면서 해운, 운송대리 및 특송 서비스 등을 위주로 하는 외자물류기업이 중국에서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국가표준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전국 물류 표준 2005~2010년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물류 표준 항목을 제시했으며, 2010년까지 300개 정도의 물류 표준을 제정하고 수정할 계획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경제성장과 무역량의 급증으로 국제물동량을 비롯한 물류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산업 개방을 확대하여 물류시장의 경쟁을 가속화시켜 물류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통한 선진 물류시스템의 도입을 가속화하여 물류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계획은 중국 물류기업의 경쟁력이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 로컬 물류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가 단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중국에 등록된 73만 개의 물류기업 가운데 종합물류서비스가 가능한 기업은 1% 미만이며, 관리시스템이 낙후되어 주로 중국기업의 저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 100대 물류기업의 대부분이 운송, 보관, 통관 등과 같은 단순 물류서비스에 치중하고 있고, 세관·통관·금융기관의 시스템과 연결된 기업은 53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반면 1990년대 전후로 중국기업과 합자형태로 중국시장에 진출한 대형 다국적 물류기업들은 국제적 네트워크와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물류산업 중 가장 먼저 개방된 국제택배업무의 절대부분을 담당해 왔다. 2005년 11월 물류시장의 전면개방 이후 다국적 물류기업은 중국의 도로, 철도, 해운, 항공, 항만, 물류 부동산 개발 등 물류관련 분야에 진출한 상황이다. 2006년 들어 다국적 물류기업들은 초기 합자 및 합작 경영방식에서 주식매입·M&A 등을 통해 독자 경영 혹은 다수 지분확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컨대, UPS는 1억 달러를 지불하여 기존 합자 파트너였던 중국와이윈(中国外运, Sinotrans)과 결별하고

44) 한국 무역협회(2007. 1), 「중국 100대 물류기업 현황」.

독자기업으로 전환하였고, TNT는 화위(华宇)물류기업을 인수하였다. 또한 FedEx는 파티엔(大田)과 합자회사 파티엔-리엔방특급(大田-联邦快递有限公司)을 설립하고 이 회사 주식의 50%를 4억 달러에 매수하였다. 물류 부동산 시장에 진입한 대표적 기업으로 PROLOGIS를 들 수 있는데 이 기업은 베이징, 텐진, 상하이, 선전, 난징, 우시, 다롄, 충칭, 칭다오, 청두, 지아싱 등의 지역에 원구(园区)개발 협의를 마쳐 전국적인 물류창고 배송망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호주의 맥커리가 6개 대형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외자기업은 철도 물류, 자동차 물류, 에너지 물류, 항구 물류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06년 일본의 미쓰이(三井)는 바오강 철강, 안산철강 등과 전국적인 철강 가공 운송망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물류산업이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이를 외국인투자 장려 업종으로 정하였으며, 기업운영 측면에서 중국 로컬 물류기업과 해외 다국적 물류기업과의 인수합병 및 협력을 통해 선진 물류관리 노하우를 습득하여 물류관리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또한 중국 물류기업의 세계 물류시장 진입을 적극지원하고 있다. 중국에는 이미 2005년 매출액 기준 세계 7위인 COSCO와 25위인 China Post라는 대형 물류업체가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 에너지, 물류 등 전 산업에 걸쳐 자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SIPG(상하이국제항무그룹)는 M&A를 통한 해외진출을 선언하고 최근 벨기에의 제브뤼헤항(Zeebrugge) 지분의 40%를 인수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COSCO Pacific은 싱가포르(COSCO-PSA), 홍콩(COSCO-HIT)에 이어 유럽 및 지중해 지역 터미널 확보경쟁에 나서며 글로벌 기업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물류산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각 지방마다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방도시의 물류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중국 정부가 물류기업에 대해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물류 운영계획, 시장분석, 인력 활용, 기술

협력 등에서 기업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류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기업들의 진입으로 중국 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기업들은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을 통해 물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물류시장도 분야별로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령 항만물류, 항공물류, 자동차 물류, 철강물류, 의약품물류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WTO 가입에 따른 시장의 개방화와 규범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기업수요 증가에 따라 제3자 물류 발전 역시 빠른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나) 주변국에 대한 영향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부상함에 따른 물류수요 확대로 중국의 물류산업은 항만물류를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1990년까지만 해도 세계 20대 컨테이너항만 가운데 단 한 개도 포함되지 않았던 중국은 2005년에는 상하이, 선전항을 포함하여 칭다오, 닝보, 톈진 등 5개나 세계 20위권에 진입하였다. 컨테이너 물동량 경우 2006년 7,790만 TEU를 처리하여 전년대비 22.3%의 물동량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중국 항만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8대 항만⁴⁵⁾은 2006년에 중국 총 컨테이너 물동량의 80%가 넘는 6,804만 TEU를 처리하여 전년대비 22%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2007년 1~5월 사이에도 중국 8대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3,472만 TEU로 전년동기대비 25%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항은 1,028만 TEU를 처리하여 8대 항만 실적의 1/3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물동량 증가 추세가 2007년 말까지 이어지는 경우, 칭다오, 톈진, 닝보, 다롄, 광저우항 등 중대형 항만들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게 되어 동북아 경제권의 항만구도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으로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

45) 중국의 8대 항만은 상하이, 선전, 다롄, 칭다오, 톈진, 서먼, 광저우, 닝보항임.

는 동북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본격적인 진출을 가속화하였으며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 허브화를 위한 동북아 각국 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중국이 국내 항만, 공항, 철도, 도로 등 물류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물류산업 발전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홍콩·대만·싱가포르·일본 등 동아시아 경쟁국가들 역시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물동량 선점을 위해 경쟁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물류산업 발전과 동아시아 물류환경의 변화는 동북아 물류허브를 추진하는 한국의 전략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항만의 경우 동북아 허브항만의 위치를 놓고 홍콩, 상하이, 부산, 가오슝, 고베, 요코하마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중화권 항만과의 경쟁이 만만치 않다. 처리물동량을 기준으로 한 세계 컨테이너 항만의 순위를 살펴보면, 홍콩, 상하이, 선전, 칭다오, 닝보 등 중화권의 주요 항만은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중화권 항만과 경쟁을 하고 있는 부산, 가오슝, 요코하마 등은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표 2-26 참고).⁴⁶⁾

항공의 경우 세계화물운송시장이 2020년까지 연평균 약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의 경우 2020년까지 지역 내 항공화물운송 증가율이 8.6%로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2010년경에 이르러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항공시장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항공수요에 맞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홍콩 등은 대규모 공항을 건설하였으며 지속적인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3대 허브공항에 대한 대대적인 확충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동북아지역 허브공항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동북아지역 내 물류 허브화 전략

46) 예컨대, 상하이 항의 경우 컨테이너항만 순위가 2000년 6위에서 2005년 3위로, 선전항은 11위에서 4위로 상승한 반면, 부산항은 3위에서 5위로, 도쿄항은 16위에서 20위로 하락하였다(Containerisation International Yearbook).

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물류산업 발전과 이로 인한 환경 변화로 국제물류 정책에 새로운 방향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 물류산업의 대중 진출 현황⁴⁷⁾

일반적으로 한국의 물류업체는 제조업체의 중국진출에 따라 물류기업들이 동반 진출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는 독자적인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진출 다국적 물류기업들과 비교해볼 때 중국시장에서의 사업 확대가 낙관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역적으로도 한국 기업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칭다오, 상하이, 다롄, 톈진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으로는 한진해운, 대한항공, 현대택배, CJ GLS, 한국복합물류 등이 진출해있는 상황이며 본격적인 사업은 2005년 이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한진해운은 1995년부터 중국에 진출, 상하이에 독자법인인 한진해운 유한공사를 설립했고 상하이, 칭다오, 다롄, 톈진(天津), 홍콩에 물류 자회사를 두고 있다. 2005년 (주)한진은 자본금 244만 달러에 75% 지분을 투자하기로 하고 ‘칭다오교운육해국제화운주식유한공사(青岛交运路海国际货运股份有限公司)’와 중국 내 첫 현지법인인 ‘칭다오한진육해국제물류유한공사(青岛韩进陆海国际物流有限公司)’를 설립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한진은 2006년을 중국 시장 진출의 원년으로 정하고 상반기에 상하이, 다롄, 웨이하이(威海) 등 3 곳에 영업소를 신설한 데 이어 칭다오 현지법인 설립을 발판으로 향후 3년 내에 톈진 등 10여개 지역에 지점을 설립,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항공도 2014년까지 취항도시를 현재의 14개에서 30여 개로 늘리고 중국 시장 매출을 2006년 4,000억 원에서 2조 원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06년 SINOTRANS와 항공화물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정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항공과 SINOTRANS는 각각 지분 51% (3,315만 달러)와 25%(1,625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47) 한진해운, 대한항공, 현대택배, CJ GLS, 한국복합물류 등 한국기업의 대중 진출 현황은 주로 이성우 (2007)를 참고하여 작성함.

현대택배는 2007년도에 중국물류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현재 상하이 총공사와 베이징, 선전, 난통, 난징, 우시(無錫), 푸둥 등 15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 현대아륜(現代亞輪)의 네트워크를 대폭 확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10개 지사를 설립, 향후 전국적인 중국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해운, 항공의 복합운송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대아륜의 사업 영역을 3자 물류 및 통관, 육상운송, 택배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국제 특송 사업에도 진출하여 한·중 택배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주지역에도 특송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동방은 해외 물류사업 진출 확대와 제3자 물류 영업 강화를 위해 2006년 7월 중국 다롄에 570만 달러를 투자해 ‘다롄동방현대물류유한공사(大連東方現代物流有限公司)’를 설립하기도 했다.

CJ GLS는 2005년 ‘칭다오희걸물류유한공사(靑島希杰物流有限公司)’ 설립을 통하여 해외물류시장에 최초로 진출했다. 중국에 진출한 2005년에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06년에는 1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할 만큼 급성장하였다. 칭다오지역의 물류대행 서비스부터 시작한 칭다오법인은 현재 보하이만 지역으로 서비스지역을 확대하였으며, 중국 산둥(山東)성, 베이징, 톈진, 상하이, 랴오닝(遼寧)성, 광저우에서 활발한 물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중국 내 물류서비스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물류서비스 영역도 확장할 계획이다.

한국복합물류는 2007년 3월 ‘난징금호타이어유한공사(南京錦湖輪胎有限公司)’와 각각 90%와 10%를 출자하여 설립자본금 100만 달러 규모의 ‘금호화운(상하이)유한공사(錦湖貨運(上海)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 금호화운(상하이)유한공사는 금호타이어 중국 판매법인의 전국 8개 물류센터 운영과 거점 간 운송 업무에서 향후 국제운송대리업무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며, 상하이 물류법인은 초기 타이어 물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시장을 공략, 제3자 물류 이용고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국적 물류기업들이 1990년대 전후에 중국 기업과의 합자 형태로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중국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해

온 데 반해 한국 물류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은 그 시기가 늦은 상황이며 기술력이 낮고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장점유율 확대에 많은 장애가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조업체와의 동반 진출보다는 중국 내륙 물류 네트워크와 종합물류 서비스의 구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내 물류기업과의 제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지방마다 규제가 다르고 사업인허가도 지방정부가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물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제3자 물류시장 잠재력과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중국시장의 경쟁상대를 고려해 국내 물류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도 요구된다. 대형 물류업체가 없는 한국의 경우 영세한 물류업체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가진 IT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진출할 수 있는 창고관리나 운송관리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 에너지협력

1) 한국의 해외에너지 협력 현황과 전략

한국은 주요 에너지 자원인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석탄의 순수입은 74.7%에 이르고 석유와 가스는 비축과 국제 병커링을 고려하면 각각 110.3%와 100.1%로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원유는 자체의 생산능력은 거의 전무한 반면 소비는 세계 원유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기준 2.8%로 미국(1위), 중국(2위) 등과 인도(6위)에 이어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소비가 높은 국가이다.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은 세계 원유 교역량의 5.2%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약 253.6만 배럴을 수입함으로써 미국, 일본, 인도에 이어 세계 4위의 원유수입국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도입 원유의 83%가 중동산 원유로서 중동지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이며 그 수입비중은 여전히 지속적

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의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세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면서 에너지 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제정하여 매 3년마다 10년 단위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에너지 비전 2030」을 발표하여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 친환경 등을 향후 에너지 정책의 3대 중심축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안정적인 에너지시장 확보를 위해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사업현황을 보면, 그 투자금액이 2002년 5억 달러 수준에서 2006년 사상 최대인 21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37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 2006년 현재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해 해외에 진출해있는 국내 기업은 아시아 10개국의 26개 사업, 미주·유럽 9개국의 40개 사업, 중동·아프리카 11개국의 17개 사업에 투자, 진출해 있고 이 가운데 석유부문이 28개국 72개 사업으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형태도 과거 단순지분투자 위주에서 벗어나 사업운영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변화하여 유전 분야에서만 2002년 17개 사업에서 2007년 6월 현재 40개로 증가하였으며 산업간·기업간 동반진출 또한 늘어나면서 자원개발 투자 패턴이 점차 발전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석유·가스 개발사업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시작된 1977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의 62.5%인 40.2억 달러를 민간기업이 투자하였고 전체의 34.8%인 21.5억 달러를 공기업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⁸⁾ 특히 2004년부터 에너지 국제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제

48) 국회예산정책처(2006) 참고.

기되면서 석유·가스 분야의 민간투자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현상은 자원의외교의 증가, 성공불용자제도 확대, 에너지 자원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산업자원부의 조직개편 등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강화에서 상당 부분 비롯되기도 하였다.

최근 유례없는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에 대한 수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에너지 다소비국의 핵심적인 안보문제로 간주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을 놓고 국가간 경쟁과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자원개발에 역점을 둔 산업자원부는 매 3년마다 향후 10년간의 해외자원개발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⁴⁹⁾을 수립하고 있는데 2007년 8월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13년 20%, 2016년 28% 달성으로 제 2차 기본계획

■ 표 3-16.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 현황(2006년) ■

아시아		미주 & 유럽		중동 & 아프리카	
국명	사업수	국명	사업수	국명	사업수
인도네시아	7	미 국	12	오 만	1
베트남	2	브라질	3	카타르	1
중 국	2	아르헨티나	4	나이지리아	2
미얀마	2	페 루	3	알제리	1
카자흐스탄	7	러시아	3	이집트	1
우즈베키스탄	1	영 국	6	에 멘	3
호 주	2	캐나다	7	베 녕	2
태 국	1	베네수엘라	1	코트디부아르	2
동티모르	1	볼리비아	1	마다가스카르	1
캄보디아	1			적도기니	2
				리비아	1
10개국 26개 사업		9개국 40개 사업		11개국 17개 사업	

자료: 산업자원부(www.mocie.go.kr).

49) 동 계획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의 추진목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의 향상, 해외자원개발의 전문 인력 양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유통의 원활화, 해외자원개발의 합리적인 조정 및 관리, 기타 해외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

보다 2%포인트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개발펀드의 활성화,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금융 확충 등 투자재원의 마련과 자원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의 지원,⁵⁰⁾ 민간기업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인력,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화석연료 이외에 원자력 발전 부문에서는 두산중공업 등 한국 원전산업체들이 설비공급, 인력연수, 기술자문 등의 형태로 해외에 분야별로 진출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수주한 금액은 약 1.4억 달러 규모이다. 원전기자재 수출현황으로 보면, 2006년 기준 두산중공업의 수출 누계액은 약 4.5억 달러이며 두산중공업의 수출액을 포함한 한국 원전업계의 총 수출액은 약 5.4억 달러로 이 중에서 대중국 수출액이 약 1.4억 달러이다.⁵¹⁾

■ 표 3-17. 두산중공업 원전기자재 해외수출 현황 ■

연도	내 용	비고
1998년	中 진산원전 원전 주기기 set 공급	핵심기기
1999년	美 Sequoya 원전 1호기 증기발생기 공급	핵심기기
2002년	美 Watts Bar 원전 1호기 증기분리기 공급	핵심기기
2005년	中 진산원전 원자로 용기 공급 美 ANO 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원자로 헤드 등 공급	핵심기기
2006년	美 Sequoya 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공급 Palo Verde 1, 2, 3호기 원자로 헤드 공급	핵심기기

자료: 산업자원부(www.mocie.go.kr).

50) 동 계획에서는 자원개발을 위한 한국의 현행 기술수준이 선진국 주요 메이저 석유회사의 약 50~60%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51) 2007년 들어서는 중국 절강성 三门, 산둥성 海阳에 건설될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신형원전인 AP1000에 두산중공업이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핵심기자재인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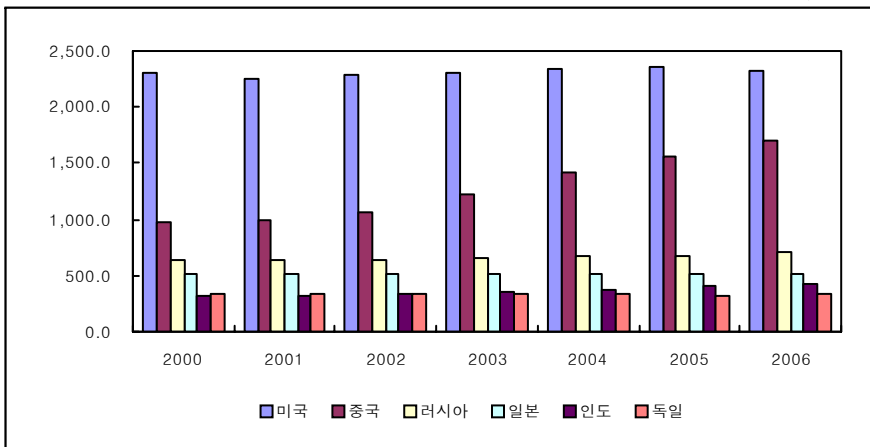
2) 대중국 에너지 협력 현황과 이슈

(가) 중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및 정책

최근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빠른 공업화 전략으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면서 국제유가 급등과 3차 오일쇼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10·5 기간 동안 중국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9.5%를 상회하였고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1.2%로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주요 에너지 소비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에너지원인 원유 소비에서 중국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 약 8.5%에 이르며 2008년에는 9%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OPEC의 중장기 수급 전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원유 수요 비중은 2010년 9.7%에서 2030년 13.9%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⁵²⁾

■ 그림 3-2. 세계 6대 주요 에너지 소비국 ■

(단위: Mtoe)



자료: BP(2007).

52) World Energy(2006).

이렇게 중국 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량 또한 연평균 14%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석유 생산량은 2000년 1억 6,200만 톤에서 2006년 1억 8,400만 톤으로 증가하여 전세계 석유생산량의 4.7%를 차지하였고 석탄은 2000년 656.7Mtoe에서 2006년 1,212.3Mtoe로 급증하여 전 세계 생산량의 39.4%를 점하였다. 그러나 [표 3-18]와 같이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은 기본적으로 자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석유는 생산량이 연평균 1.9%씩 증가한 데 반해 소비증가율은 매년 5.3%에 달해 수입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로 중국은 1993년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후 원유 관련 무역수지가 급속하게 커져 2006년 기준으로 중국의 원유 수입량과 생산량의 비율이 각각 41.2%, 58.8%로 10여 년 만에 원유의 수입의존도가 41.2%까지 크게 증가하였다.⁵³⁾

▮ 표 3-18. 중국의 주요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현황(2006년) ▮

	확인매장량		생산량		소비량	
		비중		비중		비중
석탄(Mtoe)	114500*	12.6	1212.3	39.4	1191.3	38.6
석유(백만 톤)	2200	1.3	183.7	4.7	349.8	9.0
천연가스(억m)	24500	1.3	586	2.0	556	1.9

주: 비중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단위는 백만 톤.

자료: BP(2007).

석유 수입원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중동지역에 의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최근 중국정부의 수입선 다변화 정책으로 2006년에는 아프리카로부터의 조달 비율이 총수입량의 31%를 차지하면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앙골라에서 수입한 석유가 전년대비 34.3% 증가한 2,300만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16.2%를 차지한다.⁵⁴⁾ 이는 중동지역에 대한 지나친 수입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에너지 정책 결과이며 중국정부는 중동에 대한 대

53) IEA는 2010년, 2020년 중국의 원유 수입의존도가 각각 60%, 76%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54) 中国经济信息网(www.cei.gov.cn).

안지역으로 카스피해 지역, 러시아, 아프리카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CNPC, CNOOC, SINOPEC 등 중국의 3대 국영석유기업들은 중국정부의 막대한 자금력과 적극적인 자원의외교를 바탕으로 중동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유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카스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3대 국영석유기업 중 하나인 CNPC를 통해 1997년부터 추정 매장량이 10억 배럴에 달하는 지나졸 유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유전개발회사인 악토베무나 이가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카자흐스탄의 쿰콜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페트로카자흐스탄(PK)⁵⁵⁾을 42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으며 이어 추정 매장량이 35억 배럴에 이르는 다르칸 유전을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 회사(KMG)와 함께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⁵⁶⁾ 또 최근에는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카자흐스탄 중부 아타수와 중국 서부 아라산커우 간 998km 구간의 송유관을 완공하여 연간 5,000만 배럴, 2011년에는 1억 배럴이 중국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⁵⁷⁾ 또한 중국은 러시아의 동시베리아·극동 지역에 대해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는 산유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동 석유의 주요 대안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동시베리아의 유전으로부터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일본과의 동시베리아 송유관 경쟁이었다. 양국은 중국 다칭(大慶)으로 향하는 노선과 러시아 나훗카로 향하는 두 노선을 두고 러시아와 협상을 벌였으나 중국 측에서 시베리아 개발에 12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푸틴 대통령은 결국 중국의 협상안을 받아들였다. 이 밖에도 중국은 아프리카 등 주요 자원 생산국과 무역관계를 강화하고 원조를 공여하며 채무를 변제하고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해주는 등 다양

55) 중앙아시아의 최대 산유국인 카자흐스탄 내 3위 석유업체로서 연간 산유량이 700만에 이르며 PK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의 추정매장량은 5억 5,000만 배럴에 달한다. PK 인수는 당시 인도와의 경쟁이었고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등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기울인 결과로 알려져 있다.

56) 다르칸 유전은 스페인의 국영석유회사 랩솔이 5년간 공동으로 운영권을 확보하기 직전에 CNPC가 높은 가격을 불러 합의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57) 이코노미스트(2005).

한 환심정책을 펴고 있으며 미국이 소위 ‘불량국가’로 지목한 수단, 이란 등의 국가와도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당히 공세적인 자세로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전력 부문에서도 빠른 경제성장과 공업화로 매년 전기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전력 공급능력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전력공급과 수요 간의 불균형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즉 2006년 중국 전역의 전기사용량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2조 8,200억kW였고 발전량은 13.5% 증가한 2조 8,300억kW로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여전하지만 전반적인 수급 불

|| 표 3-19. 최근 중국 에너지 자원의 주요 해외투자 사례(2002~2006년) ||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업종	지역	비고
中国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	유전분야	석유	북아프리카	3.94억 달러 출자, 75% 지분 인수
中国石油	Deveon Energy-Indonesian Oil	석유	인도네시아	2.62억 달러 출자, 100% 지분 인수
Baosteel(宝钢)	Rio Tinto's Hamersley Iron사와 합자투자	철광석	호주	3,000만 달러 출자, 46% 지분 인수
中海集团天然气勘探开发公司, 中国石油天然气公司	Salyan Oil Ltd	석유		5,200만 달러 출자, 30% 지분 인수
中国海洋石油总公司	Repsol-YPF SA	석유	인도네시아	5.85억 달러 출자
中国海洋石油总公司	Tangguh Gas 분야	가스	인도네시아	2.75억 달러 출자, 12.5% 지분 인수
中国化工推出口总公司	Atlantis	석유분야 서비스	노르웨이	2.75억 달러 출자, 12.5% 지분 인수
中海油, 中石化	영국 천연가스사	천연가스	카자흐스탄	6.15억 달러 출자, 카스피해 프로젝트 1/12 인수
中国石油国际公司	AHIH	석유	말레이시아	50% 지분 인수
中海油	호주 Gorgon 사	액화 천연가스	호주	12.5% 지분 인수
中国航油	싱가포르 국가공사	석유	싱가포르	20.6% 지분 인수
中国石油天然气公司	페트로카자흐스탄(PK)	석유	카자흐스탄	42억 달러 출자, 67% 지분 인수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06)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정리.

균형은 다소 해소된 상황이다.⁵⁸⁾ 그러나 문제는 화력 발전량이 2조 3,000억kW로 전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력공급에 따른 화석연료의 소비가 동시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는 10기(7,700MW)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5기(4,200MW)가 건설 중에 있어 설비용량 기준으로 보면 세계 11위 수준이지만 전체 전력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이에 중국은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는 원전설비를 4,000만kW로 확대할 예정이며 100만kW급 원전을 기준으로 신규원전 약 30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원전전력 비중이 현재 1.6%에서 2020년에는 4%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의 원전시장은 원자력 발전의 공급 안정성과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임계, 대형 주단조물, 내고열, 내부식 강관 등 핵심 생산기술이 부재

▣ 표 3-20. 중국 원전시장의 현황 ▣

원전명	노형	용량(MWe)	공급자	준공	위치	비고
大亚湾 (#1, #2)	경수로	900	프랑스: 프라마톰	1994. 2~1994. 5	广东省	운전 중
秦山 1단계 (#1)	경수로	300	중국: CNNC	1994. 4	浙江省	운전 중
秦山 2단계 (#1, #2)	경수로	600	중국: CNNC	2002. 4~2004. 5	浙江省	운전 중
秦山 3단계 (#1, #2)	경수로	700	캐나다: AECL	2002. 12~2003. 7	浙江省	운전 중
嶺澳 1단계 (#1, #2)	경수로	1000	프랑스: 프라마톰	2002. 5~2003. 1	广东省	운전 중
田湾 (#1, #2)	경수로	1000	러시아	2006~2007	江苏省	건설 중
嶺澳 2단계 (#1, #2)	경수로	1000	프랑스: 프라마톰	2010~2011	广东省	건설 중
秦山 2단계 (#3, #4)	경수로	600	중국: CNNC	2011~2012	浙江省	건설 중

자료: 산업자원부(www.mocie.go.kr).

58) 中国经济信息网(2007).

한 상황이므로 향후 중국정부의 원전설비 확대 정책과 맞물려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들의 중국 발전설비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990년대 초 Siemens, ABB, Alcatel Alsthom 등 30~40개의 외국기업들이 발전소 건설 및 설비 공급업체로 중국의 발전설비 시장에 진출하여 약 30%의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력공급 과잉과 지방정부의 계약 불이행, 전력 시장의 규범 부재 등으로 2001~2002년과 2003~2004년에 걸쳐 외자기업들의 1, 2차 철수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력공사, 두산중공업 등 원전업체들이 성장단계에 있는 중국의 원전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에너지 안보문제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선결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에너지 및 자원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인 ‘국가에너지부’를 별도로 신설할 예정에 있으며 2008년 3월 전인대(全人大)에서 개각 인사가 확정되는 대로 에너지부를 설립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에너지법」⁵⁹⁾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 기본법의 부재로 에너지 관련 입법 자체가 어떤 특정 분야의 관계 조정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향후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중국은 해당 법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략과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에너지 전 분야에 걸친 관계와 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법」의 핵심 요지가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과 권리를 통일하며, 분급관리의 관리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 선결해야 하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에너지법」에서는 중국의 에너지 및 경제 안보 보장,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촉진, 에너지 구조의 최적화와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에너지 관리체제 개혁과 정부행위의 규범화, 에너지시장 진입허가 및 경쟁규칙 설정에 의한 투자구조의 최적화, 에너지 기술개발과 혁신 등 6가지 내용을 주요골자로

59) 중국은 2006년 1월 각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에너지법」초안작성팀을 설립하였고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내부 토론회를 소집, 중국 30여 개 성(시)의 발개위(發改委), 경무위(經貿委) 및 각 에너지 기업들이 토론회에 참여하여 내부초안 20여부, 정식 업무초안 5부를 작성하였다. 현재 「에너지법」초안의 기본틀은 총 12장, 100여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안보 관련정책은 외적 요인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가하는 수입의존도를 완화시키고 수입 선을 다변화하면서 갑작스러운 에너지 공급중단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한편으로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走出去」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여 공식적인 에너지 안보정책으로 해외의 자원 탐사·생산기업을 인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해외석유자산에 대한 투자가 중국의 에너지 안보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에 석유수입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응 방안으로서 중국은 수요 측면의 조절에 점차 주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5년에는 석유소비량을 제한하기 위해 「승용차 연료소모량 제한치(乘用車燃料消耗量限值)」를 발표하였고 2006년에는 자동차 중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에너지 고소비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 폐지 등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연료 사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동-서 파이프라인 및 LNG 터미널 건설 등을 통한 천연가스 시장의 발달과 원자력, 바이오 연료, 청정석탄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⁶⁰⁾

■ 표 3-21. 한국의 대중국 에너지 자원 및 제품 수출 ■

(단위: 백만 달러)

	석탄	원유	석유제품	총액	총상품	비중(%)
2000년	0,065	-	1,842	1,842	18,455	10.0
2001년	0,008	-	1,685	1,684	18,190	9.3
2002년	0,004	-	1,228	1,227	23,754	5.2
2003년	0,010	-	1,792	1,792	35,110	5.1
2004년	0,111	-	2,675	2,675	49,763	5.4
2005년	-	-	3,286	3,286	61,915	5.3
2006년	0,004	-	5,071	5,071	69,459	7.3

주: 비중은 대중국 전체 수출상품에서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킴.

자료: 한국무역협회.

60) IEA(2007).

(나) 한·중 간 에너지 교역 및 협력 현황

현재 한국이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 부문은 석탄과 석유제품이며 원유는 대중국 수입을 통해 최근 그 교역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과의 석탄교역은 석유제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대중국 석유제품 수출은 2003년을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전년 대비 54.3%가 증가한 50.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 역시 2002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5년 43.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다시 증가 추세를 전환되었다. 즉 석탄 교역량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와 정제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석유제품의 교역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표 3-22. 한국의 대중국 에너지 자원 및 제품 수입 ■

(단위: 백만 달러)

	석탄	원유	석유제품	총액	총상품	비중(%)
2000년	717	109	325	1,151	12,799	9.0
2001년	904	47	338	1,290	13,303	9.7
2002년	928	97	448	1,474	17,400	8.5
2003년	1,004	208	401	1,613	21,909	7.4
2004년	1,557	299	234	2,090	29,585	7.1
2005년	1,529	343	417	2,289	38,648	5.9
2006년	1,260	428	424	2,113	48,557	4.4

주: 비중은 대중국 전체 수입상품에서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킴.

자료: 한국무역협회.

에너지 자원 협력 부문에서는 양국이 1994년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정부 간 협의 채널로 구성된 “한·중 산업협력위원회”⁶¹⁾를 통해 양국 간 산업

61) 1994년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중 산업협력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2002년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가 협력체제와 운영방식을 재정비하여 한·중 산업협력장관회의로 개칭, 2006년 8월 7차 회의를 재개하였다. 동 장관급 회의는 산업자원부와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재로 개최되며 산업협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들이 진행된다.

협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자원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2006년 8월 개최되었던 7차 회의에서 양국은 그 동안 무역 및 투자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에너지 자원 분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에너지절약, 화력발전 및 원전, 석유비축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경험과, 가스 및 유전개발 분야에서 중국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자원개발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은 주로 원유와 천연가스인데 원유탐사에서는 중국의 ‘마황산 서광구’와 인도네시아의 ‘방코 광구’를 중국과 공동 개발하였다. 중국 마황산 서광구 개발은 공동석유개발계약(Contract for Joint Petroleum Development)형태로 체결되었고 한국 측의 석유공사와 삼성물산이 중국 측의 Sinopec, 난천광업투자공사와 1999년에 한·중 합작사를 설립하여⁶²⁾ 2007년 10월 첫 원유생산에 성공하였다. 동 유전의 가채매장량은 약 230만 배럴이며 초기 일 생산량 800배럴에서 시작하여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예정이다. 동 유전개발 건은 소규모이긴 하지만 단순한 지분 참여 형식이 아니라 한국기업이 운영권자로서 직접 탐사, 생산정 굴착, 생산시설 건설 등 전 과정에 참여하여 성공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인도네시아의 방코 광구는 한국의 SK 주식회사와 중국의 CNPC가 각각 25%와 75%의 참여지분을 가지고 전개되었던 사업으로 1995년에 시작되어 2005년 2월부터 원유생산이 시작되었다.

천연가스 부문에서는 중국과 함께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코빅틴스크 가스전’에 대한 공동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를 대표 간사로 하는 한국 컨소시엄과 중국의 CNPC, 러시아의 러시아페트로플롬 사가 대표로 참여하여 2003년 공동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러시아 정부의 사업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동 가스전의 확인매장량은 약 10억 톤으로 연간 도입예상 물량은 한국이 700만 톤, 중국이 1,400만 톤으로 추정된다.

62) 탐사비는 전액 한국측 계약자(석유공사와 삼성물산이 각각 50%)가 부담하고 개발비는 지분비율에 따라 석유공사와 삼성물산이 각각 35%, Sinopec이 30%를 부담하였다. 석유공사와 삼성물산의 지분은 각각 30.8%로 한국측이 보유한 총 지분은 61.6%이다.

전력 부문에서는 주로 중국 전력발전소와 신형원전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의 설비와 기자재를 공급하는 형식으로 대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 허난성(河南省)의 10만kW 열병합 발전소인 우즈(武陟)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이 양국 간의 첫 협력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는 2006년 중국 허난성의 지우리산(九里山) 화력발전소(120만kW) 건설사업을 양국 간 대표적인 전력 분야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원자력 부문은 중국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화석연료의 소비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장기적인 원자력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잠재적인 에너지시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에서는 2007년 6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중국 핵공업 제23건설공사와 305만 달러 규모의 중국 링아오(嶺澳) 2단계 원전 시공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였고 광동핵전집단공사(CGNPC)와 원전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원전개발부터 건설, 운전, 정비 등 모든 과정에서 양국 간 정보 및 기술협력, 인력훈련, 정례협의 등 다양한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표 3-23. 한전의 대중 전력사업 진출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프로젝트	사업 내용	금액	추진 현황
무척 무연탄발전 건설·운영사업	100MW 무연탄 열병합 발전소 건설·운영(BOO)사업	71	2004년 10월 착공, 2006년 10월 준공 최초 중국진출 사업
감숙 풍력 건설·운영사업	49MW 풍력발전소 건설·운영(BOO)사업	57	2005년 10월 착공, 2006년 12월 준공
구리산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사업	1,200MW(600MW×2기), 초임계압 석탄화력 발전소	623	2004년 12월 투자협의를 체결, 중국 중앙정부의 비준
중국 산서성 발전·탄광사업	산서성 국영발전회사(SIEG)와 합자회사 설립	450	2005년 12월 MOU체결, 34% 지분참여 등 합자 계약 체결(2006년 6월)

자료: 산업자원부(www.mocie.go.kr).

현재 원전 부문에서는 2007년 상반기에 두 번째로 개최되었던 ‘한·중 원전

기술포럼'과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⁶³⁾가 양국 간 주요 협의채널로서 기능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동 채널을 통해 원자력 발전 분야의 원전운영, 사업관리, 인력교류 등과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스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왔다. 실제로 양국은 2004년 중국 칭화대학에 '한·중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현재는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에너지 개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⁶⁴⁾

(다) 에너지 안보와 협력

중국은 최근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적 안보 사안으로 간주하고 매우 공세적인 자세로 전방위적인 해외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이슈들은 여타 에너지 다소비 국가들이 동시에 직면한 문제들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80% 이상의 석유 수입을 말라카 해협 이서지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확보를 위한 중국의 공세적인 태도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게다가 중국은 연평균 9% 이상의 경제성장으로 세계 석유수요 증가와 유가급등의 주요 원인국으로,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향후 석유 소비량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레버리지를 위한 자금력이나 외교적 역량, 기술 등 모든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한국은 에너지 확보 경쟁을 제로섬에 바탕을 둔 갈등상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에너지 안보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회로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살펴보았듯이 현재 에너지와 관련한 양자간 협력관계는 석유제

63)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는 과학기술부와 중국의 국가원자능기구(CAEA) 간에 체결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약정(1999. 10)」에 의거, 2000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7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8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64) 원자력 이외에도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개발 기술협력을 위해 양국은 6개의 공동연구센터를 추가로 설립해두고 있다. 과학기술부(www.most.go.kr) 참고.

품을 중심으로 한 교역과 원유,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공동개발, 그리고 전력 분야, 특히 원전을 위주로 한 대중국 투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에 비하면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협력의 범위 또한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대중국 에너지 통상 전략은 상기한 기존 협력분야의 지속적인 확대발전과 양자 간 협상이 가능한 추가적인 통상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또한 하나의 거대경제권으로서 중국의 국내문제와 정책방향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양자 간보다 지역 및 국제적인 협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대중국 통상 이슈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의한 에너지 소비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작금의 국제환경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유가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한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가 한국을 포함한 에너지 수요국의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을 결정지을 것이다. 현재는 중국정부와 중국 현지 메이저 석유업체들이 해외 에너지 확보를 위한 공세적인 자원외교와 기업인수 전략을 펼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소비 억제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국의 정책은 여전히 수요 측면의 조절보다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 환경문제 개선이나 효율성 제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대체에너지 개발 등 장기적으로 더욱 근본적인 대안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역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라. 기술개발협력

1) 한국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책

(가) 한국의 기술개발 현황

한국은 2005년 R&D 비용으로 GDP의 2.99%에 해당하는 235.8억 달러를 지

출하였고 이는 2000년 대비 약 92.5%가 증가한 비용으로 R&D 지출 증가속도가 선진국을 상회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개발은 1990년대 후 외환위기로 인한 R&D 구조조정과 벤처기업 육성법 제정 등을 통해 이전의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1960~70년대에는 정부가 정부출연을 통해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주로 지원하였고 1980년대에는 「기업연구소 설립신고 및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연구소 육성과 관련한 조세지원,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관세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2005년 현재 국가의 총 R&D 투자와 연구 인력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6.9%와 65.7%로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이 현 국가기술혁신체제(NTIS)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과 산업이 연계되어 산업현장의 R&D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표 3-24. 산업계 R&D 투자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1981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총 R&D 투자	520	1,390	4,670	12,190	12,250	23,580
산업계 R&D 투자	210	910	3,310	8,910	9,070	18,140
산업계 비율(%)	41.1	65.4	70.9	73.1	74.0	76.9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표 3-25. 산업계 인력 현황 ▮

(단위: 명)

	1981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총 연구원 수	20,720	41,470	70,500	128,320	159,970	234,700
산업계 연구원 수	7,170	18,990	38,730	68,630	94,330	154,300
산업계 비율(%)	34.6	45.8	54.9	53.5	59.0	65.7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 기업의 R&D 투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대

기업, 그리고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 전방위적인 R&D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7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06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⁶⁵⁾ 삼성전자가 전체 R&D 투자의 3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규모 30대 기업이 전체 R&D 투자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6년 한국의 R&D 투자는 전년대비 12%나 증가하였지만 이는 삼성이 2006년 동안 지난 4년 평균치 투자액인 18억 8,000만 달러보다 3배나 증가한 54억 4,000만 달러를 투자한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 또한 대상 기업 전체 R&D 투자의 60% 이상이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동차(15.2%), 운송장비(6.5%), 화학(6.2%) 등이 큰 차이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최근 연구개발투자의 증가 추세가 다양한 기업군에서 나타나고 있긴 하나, 글로벌 기업을 제외한 상장대기업들의 R&D 투자가 기업수의 약 50%, 매출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도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6대 R&D 투자국이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논문 수에서 13위에 그치고 있어 R&D 투자에 비해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편이다. 그리고 2005년 기준 R&D 예산의 84.7%를 응용 및 개발 연구에 지출한 반면, 대학의 순수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비용은 9.9%에 불과해 산업기술과 기초과학 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나) 한국의 해외 기술개발 협력 현황과 정책

현재 한국 R&D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미만으로 97%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 R&D 주체와의 협력은 필수이며 최근 기술의 복잡화 및 대형화 추세, 기술수명주기 단축 등으로 인해 국내단독개발로 대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기준 정부의 총 R&D 지출에서 해외 기술협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로 핀란드(54.1%)의 1/20, 독일

65) 김석현 외(2006).

(12.7%)의 1/5, 일본(9.8%)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부 부처별 해외 기술협력 현황을 보면, 2006년 현재 산업자원부가 1% 미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 R&D 비중으로 볼 때 산업자원부 예산이 190억, 정보통신부가 280억, 과학기술부가 515억 원으로, 산업자원부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 부처의 주요 사업별 투자 비중을 보면 산업자원부는 국제공동기술개발에 가장 높은 비중인 53%를 투자하고 있으며 주로 공동 R&D 지원을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과학기술부는 동북아 R&D 허브 구축에 예산의 57%를 투자하며 국제화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는 예산 전액을 국제 공동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제공동 R&D로 해외 R&D 센터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⁶⁶⁾

한편 국내에서는 기업이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기업의 활동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000년 이후 해외 기술협력을 수행한 기업의 비중은 25%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협력 추진 비중은 4.3%로 핀란드(22%), 스웨덴(14%), 독일(11.5%) 등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2005년 기준, 해외 연구소 설립 현황을 보면 총 28개의 국내 기업이 전세계 60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17개(15개사)로 가장 많고 중국이 15개(11개사), 일본 7개, 러시아와 독일이 각각 5개 등이다. 이것은 1994년 조사에서 파악된 22개(14개사) 연구소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기는 하나 기업 규모별로 볼 때, 삼성전자 10개소, LG전자가 10개소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연구소가 54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해외연구소는 6개소에 그치고 있다.⁶⁷⁾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내외 기술개발 및 협력현황은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66) 산업자원부(2006).

6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5).

2) 대중화권의 기술개발 협력 현황

(가) 중화권의 기술개발 현황 및 정책

2006년 말 기준 중국의 과학기술 R&D 지출액은 전년대비 22.6% 증가한 3,003.1억 위엔(약 400.4억 달러)로 GDP의 1.42%를 차지하였고, 그 중에서 중앙재정 투입액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1,009.7억 위엔으로 총 R&D 지출에서 10.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기업이 차지하는 R&D 투자 비중은 전년대비 27.5%가 증가한 2,134.5억 위엔으로 전체 R&D 지출의 7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 또한 매년 R&D 투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의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기초연구를 위한 투자비용은 155.8억 위엔으로 전년대비 18.8%가 증가하였으나 총 R&D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2%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중국에서 기업은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의 핵심주체로서 2006년 기준, 기업의 기술계약 체결은 총 13만 125건에 이르며 기업의 기술 수출액은 전년대비 66.3% 증가한 1,528억 위엔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였다. 또한 기업의 기술도입액은 1,524.8억 위엔으로 전년대비 30.2%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도입액의 83.9%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내자기업이 1,179.9억 위엔으로 기업 전체 기술도입액의 7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투자기업(境外企業)과 외상투자기업, 홍콩·대만 투자기업이 각각 12.4%, 9.0%, 0.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연구기관 및 대학교의 기술수출능력도 점차 강화되고 있어 2006년

|| 표 3-26. 중국의 R&D 지출 추이 및 계획 ||

(단위: 억 위엔,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10년*	2020년*
R&D 지출	1,043	1,288	1,540	1,966	2,450	3,003	3,600	9,000
R&D/GDP	0.95	1.07	1.13	1.23	1.34	1.42	2.0	2.5

주: * 國家中長期科技和技術發展規劃綱要(2006~2020) 참고.

자료: 중국과학기술통계정보(www.sts.org.cn).

과학연구기관과 대학교가 수출한 기술 프로그램이 각각 4만 4,079건(141억 위엔), 1만 8,401건(65억 위엔)에 이른다. 전체 기술교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자정보기술과 선진제조기술로, 전자정보기술이 총 교역액의 36.4%를 차지하고 있다.⁶⁸⁾

실제로 중국은 2004년부터 첨단기술제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연평균 30.5%의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2006년 첨단기술제품의 무역 흑자액은 전년대비 무려 66.3% 증가한 341.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2004년의 8.5배에 달한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첨단기술제품 수출입의 핵심주체는 여전히 외자기업이며 내자기업의 수출입 규모는 사실상 매우 작다는 사실이다. 2006년 기준, 외자기업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2,478.6억 달러와 1,974.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수출입 총액의 88.1%와 79.8%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 내자기업의 2006년 수출액은 335.9억 달러, 수입액은 498.5억 달러로 외자기업 수출입의 1/7과 1/4에 불과한 수준이다.⁶⁹⁾

그리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2006년 산업기술수준 분석에 따르면⁷⁰⁾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기술 수준 또한 최고 산업기술보유국을 100으로 볼 때 61.1로 한국 76.8, 미국 93.9, 일본 90.8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 기술수준을 결정하는 기술혁신역량도 아직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중국정부는 기업중심 기술혁신 구조로의 전환 촉진, R&D 규모 확대 및 효율성과 자주적인 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강력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제11차 5개년 과학기술발전 계획」에서 구체화된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획 강요 2006~2020」⁷¹⁾을 발표하여 기존의 「시장·기술 교환전략」을 파기하고 자주적인 혁신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이 강요는 2006~2010년 동안 에너지, 자원, 환경 부문의 기술혁신과 독자적인 지적재산권 획득

68) 中国科技统计(www.sts.org.cn).

69) 中国经济信息网(www.cei.gov.cn).

70)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6).

71) 國家中長期科技和技術發展規劃綱要(2006~2020).

을 통한 산업기술혁신, 사회 공공 영역의 과학기술 서비스 능력 제고, 국방의 현대화, 기초연구와 선행기술 연구능력 강화 등을 통해 자체의 혁신능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대만은 해외로부터 R&D 자원을 흡수하고 자체의 연구개발과 혁신능력을 제고하여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을 위한 역내 R&D 거점화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 국가의 R&D 지출 비중을 2008년까지 GDP의 3%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2005~2006년 기간 동안 대만의 44개 기업이 전자와 컴퓨터 부문을 중심으로 총 46억 달러 이상의 R&D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는 지난 4년의 평균치에 비해 44.6%가 증가한 금액이다. 그리고 기술개발을 위한 대만의 R&D 투자는 한국과 대조적으로 다수의 중소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2005년 기준, 총 R&D 투자에서 기업과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7%와 21%였다.⁷²⁾

■ 표 3-27. 대만의 R&D 지출 추이 ■

(단위: 억 위엔(NTS))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R&D 지출	1,976.3	2,049.7	2,244.3	2,429.4	2,632.7	2,809.8
R&D/GDP	1.97	2.08	2.20	2.35	2.44	2.52

자료: 대만과학기술통계요람 2006.

한편 2004년 대만의 기술도입액은 521.6억 위엔으로 89.4억 위엔인 기술수출액의 약 6배를 기록하였고 그 차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의 기술도입액에서 국가별 비중을 보면 2004년 일본과 미국이 41%와 3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수출의 약 46%는 중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⁷³⁾

대만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1999년 「과학

72) 그 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4%였다.

73) 미국, 태국이 각각 10.2%, 0.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기술기본법」을 제정하였고 해당 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발전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기술백서』를 함께 출판하고 있다. 2007년 발표한 『과학기술백서 2007~2010』에 따르면,⁷⁴⁾ 대만 정부는 GDP 대비 R&D 지출을 3%대로 확대하고 제조업의 R&D 지출비율을 매출의 2.5%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산업혁신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기업 지원방식의 R&D 지출을 2009년까지 9.1%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나) 대중화권 기술개발 협력 현황과 문제점

중국은 산업부문의 기술역량이 부족하여 외국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FDI를 통한 기술 이전 및 확산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최근 외자기업들에 의한 중국 내 연구개발센터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2002년 252개에 불과하던 외국기업의 R&D 센터가 2003년 420개, 2004년에는 690여 개로 증가하는 등 매년 200여 개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⁷⁵⁾ 한국 역시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

■ 표 3-28. 중국내 한국 기업연구소 설립 현황 ■

삼성	중국연구소	중국시장 SW, DTV, MP3 개발
	北京연구소	중국시장 이동통신 관련 표준화 및 상품화 개발
	중국반도체연구소	반도체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
LG전자	LG北京연구소	이동통신 단말기, 디지털 TV, 디지털 Media 기술개발
	LG北京디자인연구소	중국지역 디자인 개발
	LG烟台연구소	중국시장 CDMA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
	LG天津연구소	생활가전기술 개발
LG화학	淸華대학연구소	정보전자소재, 에너지, 바이오, 환경

주: R&D 투자 상위 20대 기업 중 일부 현황을 기술함.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4) 中华民国科学技术白皮书 2007~2010.

75) 이에 반해 한국은 2004년 외국연구기관 9개, 공동설립 연구기관 33개 등 총 42개의 외국계 출연 연구기관이 한국을 떠나 중국 등으로 이전하였고 32개의 외국 연구기관이 국내에 신설되었다.

장과 저렴한 노동력을 염두에 둔 일부 대기업들이 중국 내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해 두고 있으나 대부분이 기초연구보다는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응용연구 및 제품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최근에는 중국이 휴대폰, 플랫패널, 기타 디지털 디바이스를 위한 자체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SK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중국 자주표준의 산업화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 예로 중국은 최근 TD-SCDMA라는 3G 시스템의 독자개발에 성공하였고 2007년 말 공식 가동할 예정인데 TD-SCDMA 휴대폰 개발에 삼성, LG 등 다수의 한국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참여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SK텔레콤과 지난 2006년 8월 「TD-SCDMA 프로젝트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와 동시에 공동개발센터도 설립하였다. 동 MOU의 체결로 SK텔레콤은 한국에 TD-SCDMA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게 되었고 중국의 다탕이동(大唐移動)과 중싱통신(中興通訊)은 이를 위해 전면적인 TD-SCDMA 시스템 및 단말기 솔루션, 네트워크의 최적화,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자문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 외 산업기술 협력과 관련해서는 1979년 기업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한 산업기술개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부 산하에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2002년 중국과학기술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산업, 기술, 기업, 인력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기술조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또 2007년 7월에는 중국과학기술 교류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기술성과의 이전, 협력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포럼, 세미나 개최와 한국 산업기술혁신 모델의 중국 내 확산 지원 등에 합의하였다. 양국 간 기술이전, 상용화 및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한·중 Techno-Fair도 부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기업, 대학, 정부출연 등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중국과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1992년 사회과학 협력에 대한 한·중 합의를 체결하였고 그 해부터 부정기로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⁷⁶⁾를 개최하면서 공동연구 및 과학 분야의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어왔다. 제5차 공동위 이후에는 공동위가 없는 해에 국장급 실무회의가 개최

되었으며 양국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성공적인 과학기술 정책 및 R&D 동향 등에 대한 현지조사활동을 위한 기술조사단이 상호교환되기 시작하여 1992~2006년까지 양국이 총 93회, 471명이 상대국을 방문 조사하였다. 그리고 1993년 한·중 대기과학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2007년 현재 총 8개의 공동연구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 센터들은 대기과학, 생명공학, 신소재, 광기술, 나노기술, 천연약물, 도플러라이 등 주요 기술 분야별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양국은 과학기술장관회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52개 과제에 118.1억 원이 투입되었다. 또 양국 연구기관 간에 교환한 양해각서 등에 의거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상호 기술조사단을 파견하거나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한·중 공동 논문 건수도 SCI(과학기술논문색인) 기준으로 1990~2001년 간 240건이었는데 반해 2001~2005년 동안에는 2,398건으로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국제 논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8%에 이르며 2005년 한 해만 663건으로 국제 공동 논문의 10.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0~2001년간 한·중 공동출판물은 240여 개로 한·일과 일·중의 공동출판물이 각각 760개, 1,170개인 데 반해 그 성과가 매우 저조한 편이다.⁷⁷⁾

대만과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대만의 과학기술정책연구정보센터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 정보자료 교환, 정보분석 기법 교류 및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005년 국립대만대학교, 국립대만사범대학교 등 5개 기관과 의료 관련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해 중소기업청은 국내 혁신형 중소 벤처기업의 외자유치 지원과 한·중·대만 벤처캐피털 업계의 상호협력을 위해

76) 2007년 개최된 제9차 공동위에서는 향후 협력방안으로 첨단기술협력 로드맵 작성,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촉진, 항공우주·신소재 등 나노분야, 전통의약, 바이오 연료 등 환경관련 기술협력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 확대 및 한·중·일 지역협력의 상호협조 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77)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에서 한국과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각각 38%와 27.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중·대만 벤처캐피털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 외 한국의 큐로컴은 세계 5대 DLP 프로젝터 생산업체인 대만의 벤큐(BenQ)와 사업협력 제휴관계 업무협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수교 이후 정부간 회의, 기관간 협력, 공동연구센터 설립 운영 및 인적교류 등을 통해 여러 측면에서 협력기반을 구축해왔으나 아직 내실 있는 구체적 성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협력과 교류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측 협력은 여전히 탐색적인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기술협력의 대부분이 R&D 투자에 집중되어 있고 연구개발 시스템 자체도 응용 및 개발연구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 전방위적인 기술교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동북아 특색을 반영한 양측의 프로젝트 협력에 대한 추진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대만과는 장기적인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간 협의채널이 부재한 상황이며 따라서 기존의 기술협력은 대부분이 단발성으로 그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4장

주요국의 대중화권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주요국의 대중화권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1. 미국

가.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경제협력 전망

중국은 이미 미국의 4위 수출대상국, 2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과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미국의 투자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중국의 무역 및 투자 등에서 미국의 중요도는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경제규모 확대로 미국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양국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도 증가될 전망이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일정과 미국 등 선진국의 개방 압력 가중에 따라 미중 양국간 서비스 산업 분야의 협력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정부의 통제로 억제되어 왔던 하이테크산업 역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나.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1) 미·중 간 전략대화 강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협력 방향 및 통상 전략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시각

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주요 기존 시각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와 우려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중국의 위상제고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으며, 양국간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중국을 경계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책임있는 동반자관계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변화에 따라 양국간 대화의 성격이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글로벌 규범 수용 압박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책임감 있는 태도요구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 협력분야도 기존의 무역불균형, 위안화 절상, 지적권 보호에서 중국 국내정책, 환경, 에너지, 공정한 무역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2007년 5월 2차 경제전략대화(SED: Strategic Economic Dialogue)에서 양국은 구체적인 양자간 통상 현안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발전경로와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도시 농촌 간 균형발전, 에너지,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등에 대한 광범위 논의를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

이렇듯 중국 국내정책이 양자간 대화의 주제가 된 것은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성장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여타 개도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반증한다. 즉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이 국내 및 대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이러한 영향력에 부합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이 맥락에서 미·중 양국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고부가가치 혁신형 서비스업 발전 및 의료개선, 투명성 문제, 자원 및 환경문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미·중 상무합동위원회(U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를 통해서 하이테크 교역확대, 지적재산권보호, 시장경제지위 인정, 구조개혁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2006년 2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미·중 통상관계’⁷⁸⁾에 잘 드러나 있다. 동 보고서

에서 미국은 대중 통상관계 변화를 3단계⁷⁹⁾로 나누고 2006년부터 추진할 6대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이행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6대 정책목표는 첫째,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무역기구에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중국이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는 WTO 정부조달(GPA),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인터넷협정, 국제수역사무국(OIE) 등의 국제기구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현재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도하 개발어젠다(DDA), 국제 플랜트 보호회의(IPPC), 국제식품규격(IEC), 전기전자 엔지니어기구(IEEE)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 국제통상규범의 이행과 준수를 촉구한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제고, 통신, 유통, 건설 등 서비스시장에 있어서의 시장진입 장벽 제거, WTO 규정에 위배되는 보조금, 산업정책, 국영기업에 대한 특혜 제거, 표준 및 기술규정의 WTO 규정과의 일치, WTO 규정에 위배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장벽,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제거, 중국 반덤핑법의 WTO 규정과의 일치, 법의 투명성과 일관성 관련 WTO 규정 준수를 촉구한다.

셋째, 반덤핑, 1974년 통상법 201,⁸⁰⁾ 421조, 1930년 수정관세 337조,⁸¹⁾ 미·중 섬유 관련 양해각서 등 미국의 통상구제법 및 중국과의 관련협정을 보다 강력하게 집행하고자 한다. 또한 국경 검색을 강화하여 위조, 해적판 및 저임이나 불법·강제 노역자를 이용해 생산된 상품의 적발과 수입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넷째, 철강과 자동차 분야 등에서 자원배분이 행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

78) USTR(2006).

79) 1단계(1986~2001년)는 중국의 GATT/WTO 가입준비시기로, 이 시기 중점목표는 중국을 rule-based 국제무역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 2단계(2001~2005년)는 WTO 가입 후 4년으로 중국의 국제무역시스템 내 통합상황을 감시하고 특히 WTO 가입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 3단계(2006년~향후)는 단순한 국제무역 참여국이 아니라 책임있는 이해관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함.

80)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해당. 통상법 201조는 대통령직속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규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수입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1)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수입배제 조치.

장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비차별적인 경쟁법과 건전한 반독점법, 자발적이고 산업주도의 표준 준수, 지방정부에 의한 진입장벽 제거 등을 통해 외자기업과 현지기업이 원칙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영상·음악 및 도서 등 지식집약적 시장진입 장벽을 철폐하고 유통, 통신 및 기타서비스 산업, 금융산업 부문의 시장접근 제고를 촉구한다.

다섯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지역을 해안 지역에서 내륙지대로 확대하고, 중소기업들의 중국시장 및 수출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미국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이테크제품의 수출을 극대화하며, 미국이 경쟁력이 있으면서 중국 내 잠재수요가 있는 수출 분야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여섯째, 미국은 통상현안에 대해 정부 부처간 조율된 협력을 통해 중국정부에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통상정책 입법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보조금 문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와 같은 WTO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지금까지 살펴본 미·중 통상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간 다양한 채널⁸²⁾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다양한 채널 활용과 더불어 중요한 점은 미국의 올바른 대중국 통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상문제의 조기파악 및 장기적 트렌드 분석, 부처 간 조율 및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82) 미·중간 통상이슈 관련 주요 대화 채널은 ① 미·중 합동통상위원회(U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JCCT: 중국 부총리와 미국 상무장관 주재), ② 미·중 합동경제위원회(US-China Joint Economic Committee, JEC: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미국 재무장관 주재), ③ 합동연대그룹(Joint Liaison Group, JLG: 중국 외무부와 미국 법무 장관 주재), ④ 미·중 경제발전개혁대화(US-China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 Dialogue, State-NDRC Dialogue: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무부 주재), ⑤ 농업협력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Cooperation in Agriculture, JCCA: 중국 농업부와 미국 농업부 주재), ⑥ 미·중 경제전략대화(US-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 SED: 중국 부총리와 미국 재무장관 주재)가 있다.

2) 미·중 간 무역 분쟁 전망

먼저 위에서 살펴본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향후 미중 양국 간 무역분쟁의 양상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의 범위가 넓어지고 요구사항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이 확대 및 강화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미국에 대한 20%대의 수출의존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수 확대와 더불어 미국을 대체할 만한 수출대상국가나 있어야 하나 어느 것도 단기간에 달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성장 동력의 한 축인 수출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미·중 간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수세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중국은 고정환율제 포기 및 위엔화 평가절상, 지적권 보호 강화법규 제정 등 여러 측면에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크고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분쟁이 촉발될 수는 없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정당화되려면, 대중 무역적자 확대가 중국의 덤핑, 보조금, 위엔화 평가절하, 지적재산권 침해, 노동과 환경에 관한 국제기준 위반, 차별적 산업정책 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위엔화 평가절하, 지적재산권 침해, 노동과 환경에 관한 국제기준 위반의 불공정 무역은 양국 간 무역 분쟁의 장기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중 양국간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강하지만 대중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분야, 금융 등 서비스 분야, 농산물, 첨단산업 등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이면서도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 품목, 예를 들면 전기 및 가전제품, 보일러·기계류 등도 양국간 무역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대미 수출품 또는 수입품 중 미국 국내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산업, 예를 들면 섬유, 철강, 자동차부품, 쇠고기 등에 있어서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강화 및 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로 향후에도 반덤핑관세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은 시장경제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WTO 가입 양허안 협정에 명시된 시장경제지위 부여시기인 2016년까지는 중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반덤핑 피소 대상국 중 가장 많은 조사를 받은 국가이며, 관세부과 판정 비율도 가장 높다. 이 외에도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섬유, 의류제품 긴급수입제한 조치와 상계관세의 보호무역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조사는 의류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데, 2003년 3건이었던 조사건수가 2004년 12건, 그리고 2005년 30건으로 확대되었다. 의류 이외 분야에서도 향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표 4-1 참고). 또한 그동안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최근의 사용 조치로는 보조금 관련조치도 있다.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철강, 섬유, 광택제지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특별조치 301조(Special 301 action)와 337조(Section 337)를 활용하여 영화 등 서비스업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양자간 무역분쟁 도구 이외에도 서비스와 농업분야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는

■ 표 4-1. 통상법 421조에 의한 미국의 대중국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사례 ■

상품	조사 개시연도	조사 결과
축반이 작동기(Peestal actuators)	2002년	피해가 인정되나, 제한조치 안함
옷걸이(Steel wire garment hangers)	2002년	피해가 인정되나, 제한조치 안함
브레이크드럼 및 로우터(Brake drums and rotors)	2003년	피해 불인정
연철수도관장치(Ductile iron waterworks fittings)	2003년	피해가 인정되나, 제한조치 안함
이너스프링 장치(Uncovered innerspring unit)	2004년	

자료: Bown and McCulloch(2005).

WTO 을 통한 제소도 고려할 수 있으나,⁸³⁾ 교섭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자간 틀보다는 우선적으로 양자간 분쟁해결을 선호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 미·중 간 FTA 전망

장기적으로 점차 미국의 중화권과의 FTA 체결 논의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미국이 대만 및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FTA 대상국가 선정과정이 매우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선정기준이 실제로 거의 이용되지 않기 때문이다.⁸⁴⁾ 미국일반 회계청(GAO: General Account Office)이 밝히고 있는 미국의 FTA 상대국 선정 기준은 상대국의 무역 규모면에서의 준비성, 정치적 및 법률적 성숙도, 개혁 의지,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 미국의 무역자유화 목표의 지지정도, 미국의 외교 및 경제정책적 실익과의 정합성, 의회 또는 민간부문의 지원 등이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미국의 중화권과의 FTA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대만은 대부분의 기준을 충족시키나 미국의 외교 및 경제정책적 실익과의 정합성에서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어 보인다. 대만은 보이지 않는 중국정부의 간섭으로 수교국가와의 FTA 이외 다른 국가들과의 FTA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세계적인 FTA 추세 속에서 대만경제가 고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은 ASEAN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한국, 인도 등과 FTA 체결을 추진하면서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만은 미국과의 FTA 체결을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의 출발점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천수이볜 대만 총통은 미국과의 FTA 체결을 대만의 가장 우선적 외교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이자 외교적으로 중요한 대만과의 FTA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83) 실제로 2007년 4월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84) 권오복(2005).

왜냐하면 대만 경제가 고립되고 위축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외교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만경제가 점점 더 중국 의존적으로 되어가는 상황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도 대만과의 FTA는 미국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내 일부 상원의원 등은 미국·대만 FTA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2005년 대만을 방문한 존 록펠러(John D. Rockefeller) 상원의원은 미·대만 FTA가 아시아의 안정에 필요하다며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국 양제를 주장하면서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감수하면서 까지 미국이 대만과의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미국이 대만과 전격적인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대만과 미국 간 FTA 체결은 양안관계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단기간 내 성사는 어려울 것이다. 대만에 있는 미국연구소(American Institute in Taiwan)는 “우선 중국과 3통(통신, 통상, 통항)을 실현하고 나서 미국과 FTA 체결을 협의하자”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만당국에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미·대만 FTA 체결 지원을 약속한 존 록펠러 상원의원 역시 양안간 경제통합이 더욱 공고화될 때 미·대만 FTA가 양안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역시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미·대만 FTA 체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은 미국과의 무역투자협정인 TIFA(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를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FTA를 이끌어 간다는 전략이나, 미국은 TIFA 체제하에서 양국간 경제관계를 심화발전시킨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미·중 FTA 체결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우선 중국은 미국이 밝히고 있는 FTA 상대국 선정기준 대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정치적 및 법적 성숙도, 개혁의지, 미국의 무역자유화 목표 지지정도, 의회 또는 민간부문의 지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후 법률정비, 개혁추진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다른 국

가들에 비해 여전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DDA 협상에서 경제규모에 맞는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서의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개도국의 입장에 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권, 환경, 노동 문제 때문에 미국 민간과 의회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미국 산업계와 의원들이 중국의 보조금 지원, 인위적인 환율조정 때문에 미국의 시장과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과 의회의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EU와의 FTA 체결이 세계무역 양대 축인 미국과 유럽에 상호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다자간 무역체제에 부정적 측면을 준다며 미국·EU FTA 체결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⁸⁵⁾ 같은 맥락에서 보면 거대경제권인 중국과의 FTA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EU,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는 양자간 FTA보다는 WTO 채널을 통한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선호하고 있다.

2. EU

가. EU의 중장기 경제협력 전망

2002~2006년 EU-25의 역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출이 9.5%에서 14.2%로 상승하였고, 수입은 9.51%에서 14.2%로 늘어났다. Global Insight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교역이 전세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8%대에서 2012년에는 12%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EU와 중국의 교역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과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은 EU의 역내 교역이다. 현재 EU의 역외 교역과 역

85) 권오복(2005).

내 교역의 비율은 40:60 정도인데, EU 역내 경제통합이 더욱 공고해지고, 앞으로 신규 가입할 터키,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등이 포함되면 역내 교역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⁸⁶⁾ EU는 다른 경제체에 비하여 역외 교역보다 역내 교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교역증가에 따른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는 하지만, EU 역내의 경제협력, 또는 EU와 미국의 경제협력이 그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유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 EU와 중국의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요인은 EU에 새롭게 가입한 국가들이다. 2004년 가입한 중동구와 남구의 신규회원 10개국인 신 EU-10과 2007년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그리고 가급적 이른 가입을 원하고 있는 터키,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등이 가입할 경우 중국과의 통상문제에서 이들 국가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기존 EU-15는 선진국들로 중국과 주력 산업이 분리되어 있어 경쟁보다는 보완관계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가 중국 내 시장접근이나 중국산 불법 복제품 밀수에 대해 불만을 갖고는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중국과 교역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경험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신생 회원국 또는 앞으로 가입할 국가는 산업구조면에서 상대적으로 중국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⁸⁷⁾

최근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⁸⁸⁾ EU-15와 중국의 교역품에 대해 현시비교우위지수(RCA)로 분석한 결과 EU-15보다는 EU-10이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의 유럽 진출시도가 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EU-10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대한 반면 중국은 2000년도 중반부터 자동차의 수출에 나서고 있어 EU-10의 경쟁력이 아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중국이 자동차산업에서 적극적인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고 중저가형 자동차 위주로 생산하고 있어 앞

86) 역내 교역을 감안하면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현재의 40% 수준인 5~6%에 불과하다.

87) Friends of Europe(2006), p. 6.

88) Lerais, Levin, Sochacki, and Veugelers(2006, pp. 144~146) 참고. 1995년과 2001년의 통계로 분석하였다.

으로의 경쟁 격화가 예상된다.

비교우위 분석결과 EU-10은 섬유, 가죽 제품, 음식료 부분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중국은 이들 분야에서의 비교우위가 빠르게 늘어났다. 컴퓨터와 전자제품 분야는 중국의 비교우위가 빠르게 늘어나는 분야인데 EU-10의 비교우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EU-10이 중국과 경쟁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⁸⁹⁾

한편, 투자 측면에서는 전자, IT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유럽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컴퓨터, PC 주변기기,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제품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의 정부정책은 단순히 최종 조립단계만이 아니라 부품생산을 포함한 가치사슬의 전 공정을 중국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부품이나 중간재의 수입 의존도가 하락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부품의 국내생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EU-15의 경우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자제품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갖지 못한다. 만일 중국기업이 전자제품의 모든 공정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면, 유럽으로 부품을 수출하고 유럽 내, 특히 동구권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유럽 소비자에게 판매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기업의 대(對)유럽 투자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⁹⁰⁾

나. EU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EU는 지난 1998년 대중국 중장기 전략의 기초를 마련하여 지금까지 그 틀 안에서 대중국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⁹¹⁾ i) 중국과의

89) 최근 유럽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응을 보면, 북유럽 국가들은 크게 이사회하지 않는 반면,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등 구 동구권 국가, 그리고 터키 등이 주로 강경 발언을 한다.

90) 현재 중국기업의 유럽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유럽의 핵심 자원(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투자이나, 앞으로는 무역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대체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 대화 수준을 제고한다. ii) 중국이 법질서에 기반을 두고 인권을 존중하는 개방된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ii) 중국이 세계경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v) 유럽의 자원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v) 중국 내 EU 기업의 활동이 중국 국내 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2003년 대중국 정책의 장기 목표와 실행 계획이 재확정 되었다.⁹²⁾ 기본 정책 방향은 (i) 중국이 순조롭게 세계경제에 통합되고 세계경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ii) 중국경제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통해 EU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한다. 둘째, 중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의 발전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 셋째, EU의 정책은 EU 기업의 대중국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중국 충격에 대한 EU의 적응력을 제고한다. 다섯째, 중국 제품에 대한 EU의 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시장접근의 기회를 얻도록 한다.

1) 중국의 경제발전 지원

EU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이 세계경제에 완전히 편입되고 개방되어야 한다. 따라서 EU는 중국이 체제전환과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 개선, 시민사회 강화, 법·질서 확립, 경쟁정책, 사회보장제도 등의 측면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EU의 대중국 지원은 금전적인 지원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이제 중국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EU가 중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더라도 민간 또는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91) European Commission(1998); European Commission(2006c).

92) European Commission(2003).

2) EU 기업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 제공

EU 기업은 기술과 노하우 측면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바, 이러한 경쟁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반드시 정상적인 시장국가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WTO 가입 이후 중국 시장은 여전히 외자기업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감성적인 국가주의로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조치를 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지재권 위반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EU는 중국측에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EU 기업이 불확실성 속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중국에서 사업하는 EU 기업을 위한 언어 및 비즈니스 훈련을 지원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상하이에 중·유럽 비즈니스스쿨(China Europe Business School)을 설립하여 중국 및 외국 학생에게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중국에 투자한 EU 기업, 특히 중소형 기업에게 투자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수출상담회나 교역회를 조직한다. 교역은 EU 회원국이 담당하는 부분이지만, 소국의 기업은 관련정보 부족으로 독자적으로는 중국 사업에 임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3) 법·제도 측면의 글로벌 스탠더드 요구

EU는 중국이 이미 개도국이라기보다는 세계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선도 국가로서의 임무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한편 EU가 중국 제품에 대해 개방한 정도에 비해 중국의 개방화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주요 분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이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관세장벽을 낮추었지만, 새로운 비관세 장벽을 만들어 EU 제품의 시장접근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조달, 보조금, 국유은행으로부터의 대출우대 등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국내 기업들이 우대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EU 기업들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자동차, 유화 등에서 투자제한 등의 규제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통신사업에서

는 허가절차, 금융업에서는 자본금 제한 등의 차별정책이 시행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EU의 전략산업이 중국 시장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둘째, 지적재산권 보호이다. EU는 중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어느 나라보다도 우려를 나타낸다. EU 제품의 가장 큰 경쟁력은 기술과 노하우로, 이는 브랜드 파워와 디자인으로 나타난다. 불법복제, 위조품의 난립은 중국 내 EU 기업의 시장접근을 방해할 뿐 아니라 EU 시장으로 불법 유통되어 EU의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역할까지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문제는 지금까지와 같이 EU가 중국측에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할 분야로 예상된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문제의 해결

비록 EU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상당한 무역적자를 보고는 있으나, 전체 EU의 교역 또는 개별 국가의 교역 차원에서 대중 무역적자는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EU 회원국의 개별 교역에서 역내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므로 회원국의 최우선 관심은 역내 무역구조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EU 내 대중 무역적자 논의는 중국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수단이거나 중국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국가의 요구에 머물고 있다. EU의 관심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의 무역흑자 지속 및 미국채 매입이라는 글로벌 불균형이 야기할 수 있는 국제자본시장의 불안이다. 이로 인해 EU는 중국정부가 자국의 민간 저축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스템을 개선하고, 위엔화를 절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바,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금융제도와 사회복지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5) 중국의 해외자원 개발 견제⁹³⁾

EU는 중국이 최근 들어 무차별적으로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을 상

당히 우려하고 있다. EU는 중국의 해외 자원개발 목적이 국내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강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이 분쟁지역에서의 에너지 개발을 이유로 반서구적인 세력의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EU의 입장은 첫째 중국이 자원개발 분야에서 미국, EU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도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관련자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 정보교환을 활성화한다. 둘째는 중국의 에너지 기술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중국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희토류와 같은 중국 내 지하자원에 대한 수출규제 해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6) EU 내부의 적응력 제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이 모두 중국측에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될수록 중국이라는 변수가 유럽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증가할 것이므로 EU 내부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첨단 IT 분야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산업 부문에서 빠르게 비교우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신생 회원국들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주력 산업이 중국과 중첩되고, 또한 경쟁이 격화되는 산업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해 유럽 내부적으로는 충격흡수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유럽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일자리 상실뿐만 아니라 성장기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유럽의 대중국 통상전략은 중국에 대한 시장접근뿐만 아니라 EU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정책은 다음과 같다. (i) EU 역내 교

역을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보다 양호한 기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역내 시장의 완전한 단일화, 규제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진일보된 시장자유화 획득, 진입장벽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 (ii)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한다. R&D 지출을 늘리고, 고위험 고수익의 벤처산업으로 자원을 전환하기 위하여 벤처캐피탈시장 육성과 같은 혁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iii) EU 정책은 EU 경제가 충격에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인적 자본의 축적과 같이 규제를 줄이는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역외 교역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노동자 재취업시스템을 갖추는 등 유연한 조정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은 교역으로 인한 충격으로 고용이 불안해진 EU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3. 일본

가. 일본의 중장기 대중국 경제협력 전망

지금까지 중국경제의 부상에 대한 일본 내 견해는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밀접해지면서 일본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산업공동화가 심화된다는 ‘중국위협론’이 주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중 무역수지 적자폭이 이전 수준에 머물고, 일본의 제조업 기반이 여전히 견고하며 오히려 해외로 나갔던 일본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추세를 보이자, 중국경제의 성장이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중국특수론’이 나오고 있다.⁹⁴⁾ 따라서 중·일 관계는 앞으로도

94) 田邊敏恵(2006), pp. 72~74.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경제의 활력을 일본 경제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중국과의 경합을 피하고, 각자의 비교우위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지난 2003년부터 중국 등 해외로 기점을 옮긴 기업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제조업의 국내귀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기업들이 일·중 간 인건비 차이는 중요한 요인을 제외하면 오히려 노동력의 질적 차이, 수요에 맞는 신속한 신제품 출시, 기술유출의 방지 등에 좌우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첨단기술 제품은 일본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일본기업의 범용제품 생산기지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5년부터 총인구도 감소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일본기업이 중국 투자에서 직면할 위험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열거할 수 있다.

첫째, 투자환경의 악화이다. 인민폐의 절상에 따른 외환 위험, 경제성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 전력부족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기업의 투자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점진적인 제도개혁 과정에서 불거지는 부작용이다. 중국이 시장경제체도로 이행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매우 느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혁이 부분적으로는 타당하더라도 부작용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외국기업들이 일관성있는 제도와 정책을 예상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 셋째, 환경오염이라는 외부비경제의 위협이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은 환경보호보다 눈앞의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지만,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나중에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일선상에서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13억 명의 인구와 지역간 소득격차가 매우 큰 중국은 이러한 일반론이 성립하기 어렵다. 중국이 최근 환경보호를 중시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절충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상당기간 동안 사례별로 정책이 집행되는 비

합리성과 차별성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정치적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장경제에 합치하는 정치시스템은 투명한 민주주의체제지만, 공산당 일당 지배의 정치체제하에서 정부부문이 시장 활동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자원배분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경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정치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경제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일본에서 해외투자를 중국 중심에서 인도, 베트남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도나 베트남이 중국을 대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장기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분업전략의 일환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인건비 상승, 환율 상승 등으로 저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지로서의 매력력이 줄어들면 베트남 등의 투자처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대신 중국은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종합하면, 중국경제는 적어도 2020년까지는 현재와 같은 성장패턴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지만, 동시에 제도·정책, 시장운영과 투자환경 등의 투자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기업이 중국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산업의 위험성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일본기업은 주요 목표 수요층을 명확히 선정해야 하며, 경영 현지화 전략도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맞춰 계속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 스스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나. 일본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일본의 대중국 통상전략의 근간은 산업적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경쟁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중국과 전면적으로 협력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협력할 부문은 협력하고, 일본의 이익에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마찰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본과 중국 간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i) 일본의 농산물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ii) 일본의 대중국

수출제품 품질 문제, (iii) 일본의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승인 문제, (iv) 기술유출 방지 등이다.

첫째, 일본은 2006년 5월 농산물 잔류농약 등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15가지 사용금지 농업화학품을 규정하고, 농약, 사료첨가물,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약 5만 5,000개의 잔류기준을 설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조치는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 잔류기준이 강화되었고, 검사설비와 인원 부족으로 인해 검사 기간이 길어진 것이 중국산 농산물의 대일 수출을 방해하는 무역장벽 역할을 한다고 비난한다.

둘째, 중국 정부의 일본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제기이다. 이는 첫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일본의 농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중국측의 보복 성격이 강하다. 물론 중국측은 일본산 제품에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본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명분 싸움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일·중 간 통상마찰은 상호 보복적인 성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양국 정부, 국민간 상호 견제의식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일본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의도적으로 낮추면서 중국의 부당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중 투자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데, 일본 내부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셋째,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승인 문제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65개국이 이미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승인하였으나, 일본은 아직 그렇지 않다. 일본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기간이 짧다는 점과 지적재산권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장경제지위 승인을 미루고 있다. 향후 중국은 계속해서 일본측에 시장경제지위 승인을 요청할 것이며, 일본은 획기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로 중국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국 기업이나 중국 기술자를 통한 기술유출 방지이다. 일본은 중국과 기술력 격차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반면, 중국은 일본의 기술을 획득하려 노력한다. 일본 정부는 중국 기업의 일본 기업 인수, 중국 기업의 일본산 첨단제

품 수입 등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중 일본기업에 근무하는 중국 인력이 기업 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만일 일본 정부가 중국 기업의 일본 기업의 인수를 승인하지 않거나, 민감 품목을 이유로 중국 기업의 일본 제품 수입을 제한한다면 양국간 통상마찰을 가져올 것이다. 이상의 측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지만, 쌍방의 이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⁹⁵⁾

첫째,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것이다. EU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일본과 중국이 중심이 되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도록 한다. 일본·ASEAN FTA와 함께 일·중 간 FTA도 추진하여, 재화 및 서비스 거래의 자유화, 인적 이동의 자유화, 통화 및 금융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통화면에서 일중 양국은 장래의 ‘아시아 공통통화’의 실현을 목표로 우선 아시아 채권시장의 설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전세계 에너지수급 동향을 주시하면서 양국은 신에너지의 공동개발과 상업화, 동중국해의 천연자원 공동개발 등을 추진한다.

셋째,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 분야에서 협력한다. 일본은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중국에 전수하여 양국간 협력체제를 강화한다.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중국의 공해 문제는 일본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의 환경오염 해결은 일본의 이익과도 직결된다. 중장기적으로 일본은 황사·적조 대책, 지구 온난화가스 삭감 등에서 일·중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절약 분야에서의 기술협력과 사업화, 자원순환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철강, 화학, 전력,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산업에 대한 정보의 교환, 기술교류의 촉진을 도모한다.

넷째,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 일본이 전략적으로 협력한다. 2000년 이후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 기업이 제3국에 진출할 경우,

95) 經濟同友會(2006), pp. 9~11.

일본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경험, 노하우와 중국기업의 값싼 생산비용, 노동력을 결합할 경우 양국 모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바라는 대중국 관계는 ‘약간의 거리를 둔 경제적 동반자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은 2차 대전에 따른 정치적 앙금이 아직 상당히 남아있고, 현재도 아시아에서의 정치, 경제적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 이득을 얻는 것은 좋으나, 중국의 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4. 대중국 통상정책 비교

앞에서 분석한 미국, EU, 일본의 주요 통상 현안, 경제협력 전망 그리고 중장기 통상전략을 요약하면 [표 4-2]와 같다. 공통적인 통상 현안으로 무역적자,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그리고 서비스 및 투자부문에서 중국국내기업과의 차별 대우를 지적하였다. 특히 사항으로는 EU는 중국의 공격적인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우려와 일본의 ODA 제공 지속 여부이다. 중장기 경제협력은 모두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현재보다 더 긴밀해 질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을 경계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EU의 대중국 무역마찰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통상전략을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의 감정적 대응을 가져올 수 있는 직접적인 통상협상보다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협상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의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한데, 특정 사안에 대한 중국과 담판을 하기 보다는 중국 내부의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개혁되기를 희망한다. 일본 역시 중국의존도를 줄여 견제하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며, 중국과 일대일 협상보다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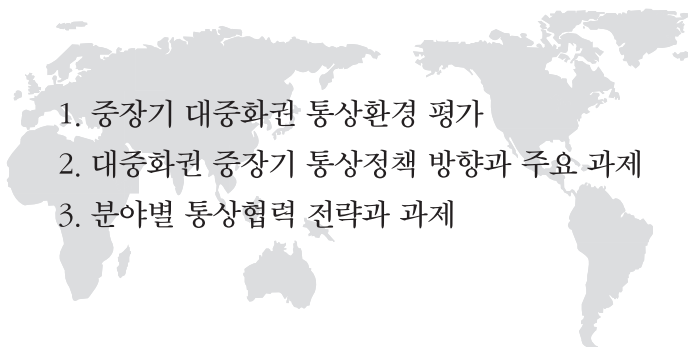
표 4-2. 주요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비교

	주요 통상 현안	경제협력 전망	증장기 통상 전략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적자 축소와 인민폐 절상 - 지적재산권 보호 - 금융시장의 실질적 개방 - 중국산 농산물 안정성 - 신설된 외자의 투자제한 제도 시정 - 서비스 산업에서의 실질적 개방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규제 철폐로 서비스 분야 협력 확대 - 미국의 첨단기술 이전 제한 폐지로 협력 확대 - 무역분쟁 가능성 확대(환율, 지재권, 환경 및 노동 기준) - FTA 가능성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 현안에 대한 지속적 시정 요구 - 직접적인 통상압박은 지양 - WTO, DDA, IEC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중 압박 - WTO-GPA, WIPO, OIE 등 미가입 국제기구 가입 유도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장벽 완화 요구 - 새로운 비관세장벽 (강제인증제도 등)의 폐지 - 공산품 수입의 급증 가능성 - 신설된 외자의 투자제한 제도 시정 - 서비스 산업에서의 실질적 개방 요구 - 중국의 공격적인 해외자원 개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의 대중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 다만, EU 교역 최우선순위는 유럽국가와 미국 - 지재권 및 중국산 불법복제품의 EU 시장 진입 우려 - EU 신흥원국과 중국간 무역마찰 가능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기업에 시장 접근 기회 제공 - 법, 제도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요구 -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결 - 중국의 해외자원 개발을 견제 - EU 내부의 적응력 제고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수입품의 안정성 문제 - 지적재산권 보호 - 투자기업의 기술 유출 가능성 - ODA 제공의 지속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 경제협력은 긴밀해 지겠지만, 급속한 대중 의존도 증가는 없을 것 -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 투자의 위험성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농산물 안정성 여부 - 기술유출 문제 - ASIAN+3의 경제공동체화, 중국과의 쌍무 FTA는 반대함. - 에너지, 환경분야 협력 강화 - '약간의 거리를 둔 경제적 동반자 관계' 유지

자료: 본문 내용 정리.

제5장

한국의 대중화권 통상전략



1. 중장기 대중화권 통상환경 평가
2. 대중화권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3. 분야별 통상협력 전략과 과제

한국의 대중화권 통상전략

1. 중장기 대중화권 통상환경 평가

한국과 중국은 양국간 수교 이후 지난 15년간 상호보완적 산업 및 무역관계에 기초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즉,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한국은 대중국 통상전략에서 ‘협력’을 강조하는 통상전략을 추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간재를 수입, 가공하여 소비재나 저기술 자본재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세계의 조립공장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중국이 외국인투자의 확대 → 수출증가 → 투자확대의 성장패턴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주변국이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이 조립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국제분업관계가 정착되어 왔다. 이러한 우호적인 분업관계가 바탕이 된 시기에는 중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기업이나 정부가 선택하였던 바람직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중화권의 부상은 한·중 간 쌍무적 통상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다.

첫째,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 1위 외환보유국, 세계 2위의 수출대국, 세계 3위의 무역대국,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세계의 금융, 무역, 통상, 글로벌 이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정착되면서 에너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이 급등하고, 글로벌 생산기지가 조성됨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서비스의 이동이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값싼 중국의 수입품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물가가 안정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최근에는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무역수지와 자본수지 흑자가 확대되면서 선진국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이 심화되고 있기도 하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중국, 홍콩, 대만을 연결하는 대중화 경제권이 형성되고, 중화권내에서 각 소지역 경제권이 분할되어 갈 것이다.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기적인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홍콩은 CEPA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대만 간 FTA 추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대만, 홍콩간의 경제적 통합이 지속됨으로써 하나의 자연적 경제권이 형성되어 갈 것이다.

셋째,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중화권의 통합이라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한·중 간 쌍무적 통상환경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경제의 입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약화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한·중 간에는 경쟁관계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중국산의 기술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중국 내 수입대체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투자협력에서도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투자구조가 점차 쌍방향 투자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2. 대중화권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중장기적으로 대중화권, 특히 대중국 통상전략도 변

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중 간에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쌍무적인 무역과 투자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협력범위를 동북아시아 통합, 글로벌 이슈 등으로 확대·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화권의 통합과 역할 분담에 맞추어 다층적 협력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즉, 중화권 지역과의 협력에서는 기존의 중국 편향의 협력에서 홍콩과 대만을 포함하는 중화권으로 넓히는 동시에 중국 대륙지역과의 협력은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효과(China effect)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보다 실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즉, 중국과의 새로운 분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국 산업의 고도화와 추격에 따른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의 부품과 소재산업의 R&D를 통해 한·중 간에 형성된 수직적 분업관계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맞추어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한 수평적 분업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중국의 글로벌 파워(global power)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우리의 대중국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와 동시에, 양국 교류 확대로 수반되는 다양한 통상 현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과 전문기구 정비가 필요하다.

▮ 표 5-1. 중장기 대중화권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주요 과제
포괄적·다층적 협력관계 구축	- 협력과제의 다양화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파트너십 구축 - 다층적 대중화권 협력 전략
중국효과(China Effect)의 지속	-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고부가가치화 - R&D 정책 강화 - 중국 소비시장과 생산자 시장 공략
대중 협상력 제고	- 대중 협상기구 정비와 국제적 공조

가.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과제

1) 협력과제의 다양화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 급속도로 발전해왔다. 중국은 무역과 투자부분에서 200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인 동시에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물론 인적교류 역시 빠르게 발전⁹⁶⁾하였으나 이는 경제관계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반면 중국은 한·중 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 중국은 한국과 협력하여 선진기술과 경영관리의 경험을 전수받고, 전략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여 미국과 일본을 견제함과 동시에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글로벌 경제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을 둘러싼 경제이슈는 정치, 외교적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보다 광범위한 통상외교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실리적인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 가능성을 내다보고 한·중 관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토대를 둔 대중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한 무역 및 투자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 양국의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경제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소는 취약한 농업경쟁력, 부족한 자원, 허약한 금융시스템, 식량자급 능력, 석유 부족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한·중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96) 2006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가 중국이며, 연 440만 명이 양국을 방문하였다.

2)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파트너십 구축

동아시아 경제는 1960년대 이후 대외지향적 공업화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를 맞게 되고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중국은 고도성장을 지속하였고, 2001년 WTO 가입과 더불어 더욱 강력한 개방정책을 통해 동아시아로부터 많은 투자를 유치하였다. 중국에 대한 동아시아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동아시아와 중국 간 분업이 진전되어 왔다. 이러한 분업은 기존 일본과의 분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평적 분업에 가까웠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 증가는 동아시아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국가발전에 필요한 안정적 주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와 정치·안보 관계도 강화해 왔다. 게다가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FTA를 통해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적 통합도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 역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의식하여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에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가 농업 문제,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우회개방 위협성, 한·중 간 무역구조에서 기인하는 FTA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중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미루고 협상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할 경우,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 경쟁에서 다른 나라에 뒤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FTA 추세에서 소외되어 우리 경제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 한편 중국과의 FTA는 경제적·정치적 차원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고 그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준비나 협상과정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되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며 경제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다층적 대중화권 경제협력 체제 구축

중장기적으로 중국, 홍콩, 대만을 연결하는 중화경제권이 형성되고, 중화권 내에서 각 소지역 경제권이 분할 형성되어 갈 것이다. 특히 금융, 물류 등 일부 영역에서는 중국 대륙, 대만, 홍콩이 상호 경쟁과 협조를 통해 역할을 분담해 갈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면에서 중국 대륙에는 상하이와 대련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허브화 전략이 추진되고 있고, 홍콩 역시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서 재도약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물류면에서도 중국 대륙의 상하이, 홍콩, 대만의 가오슝 등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처리 항만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중화권 물류 중심으로서 이들 지역간 경쟁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통합과 경쟁의 과정에서 중국 대륙, 홍콩, 대만은 각 지역의 장점을 활용하여 소경제그룹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과 시장으로서 중국 대륙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어 갈 것이다. 대만은 하이테크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중심의 구조로 전환을 추구함으로써 중국 대륙에 대한 핵심부품의 공급기지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홍콩은 중국 반환 이후 중국의 중계무역기지로서, 중국 대륙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대륙의 자본시장의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홍콩의 이러한 기능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대중화권 통상전략에서 지나치게 중국에 편향된 부분은 수정·검토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홍콩,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대중화권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하나의 중화 경제권’과 중화권 내 수 개의 경제권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국 비즈니스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성장점의 다핵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의 연해지역에는 3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최초 개방지역이었던 광둥성(廣東省)의 주장(珠江)삼각주, 최근 성장세가 뚜렷한 창장(長江)삼각주, 그리고 베이징(北京)과 텐진(天津)을 중심으로 하는 환발해만 지역이 그것이다. 한편, 중국 내 또 다른 새로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동북3성 지역, 충칭(重慶)-청두(成都)를 연결하는 서남지역(成瀋)이다. 동북3성 지역은

중화학공업이나 에너지 및 자원 활동의 경제 집적지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⁹⁷⁾ 성우(成瀟)지역은 중국 서부대개발 전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자리잡아 갈 것이다. 이처럼 중장기적으로 중국 대륙의 성장점이 다핵화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연해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중국 진출전략에서 벗어나 중국 지역의 다핵체제에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중국효과(China Effect)를 지속시키기 위한 과제

1)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고부가가치화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가의 경공업 제품을 파는 나라였지만, 2000년대 들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 휴대폰, 디지털 가전 등 IT 제품이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을 제치고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했으며, 철강,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발전 속도도 매우 빠르다. 향후 중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기술주도적인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지배력을 가진 주도적인 제조국가이자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비록 첨단기술 관련업종에서 지배력을 가진 참여자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며, 고가 첨단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요 대중국 수출품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옮겨가거나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가 제조업 위주로 갈 것이냐, 서비스 산업 위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97) 중국 사회과학원은 동북3성 진흥의 장기계획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세계적인 자본재 생산기지, 특히 대형설비의 생산기지로 부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외국자본 및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클러스터, 전력장비 제조 클러스터, 석유화학 산업 클러스터, 철강 및 야금공업 클러스터의 조성을 강조하였다.

많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 활동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전 과정의 가치사슬 중에서 고부가가치에 집중해 차별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까지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추격해 오는 중국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R&D, 디자인, 핵심 부품 개발, 마케팅 등의 부가가치가 높으므로 이들 고부가가치 과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저가의 공산품을 생산하면서도 기술력도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과정으로의 집중은 더욱 중요하다.

산업별로 보았을 때, 현실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중심산업인 철강, 전자, 석유화학, 조선 등의 제조업 수명을 늘려야 한다. 부품 소재 사업의 경우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으나 소재의 품질이나 다양화가 최종 조립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므로 라이프 사이클이 짧지 않은 기초소재에 대해 품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 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서비스 산업이 무형적·지식 집약적·자본집약적 특성이 강한 데다, 각종 법규 마련과 규제 완화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까닭에 일시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R&D 정책 강화

중국진출에 있어 R&D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의 비중은 아직까지 높지 않고 기능을 갖추었다고 해도 규모가 작고 R&D 센터의 역할이 기초기술연구보다는 개발이나 지원업무에 편중되어 있다. 물론 R&D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처음에 소규모로 시작하고 나중에 시장 상황에 따라 규모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산업의 기술 확보와 국가 전체의 기술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기초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기술 수준, 풍부한 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러한 기초역량을 동원하여 산업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 예컨대 기업, 정부, 학계의 R&D 협력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3) 중국의 소비자시장과 생산자시장 공략 확대

중국이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다.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소비재 판매총액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4.4%의 성장을 기록하며 GDP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도시화 진전 등으로 중국의 소비시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중 간 무역 및 투자 패턴과 분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생산자 시장의 확대도 중요하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으며, 이는 한·중 간의 무역과 투자에도 나타나 있다. 중국이 세계적인 최종조립가공 기지로 등장하면서 관련설비 및 부품의 수입도 급속히 증가하여 왔는데,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의 대중국 부품과 소재의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투자 역시 중국 진출 초기와 달리 2000년대 들어 전자통신부품과 운송기기(자동차 부품)와 같은 다층적 분업구조를 가진 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투자기업의 중국 내 매입매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릴 계획을 가진 기업이 많다는 점에서 중국의 생산자시장 확대에 대한 고려도 매우 중요하다.

생산자 시장공략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중국에서 신규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부품과 자본재 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장수요의 세분화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다. 대중 통상 협상력 제고방안

향후 한·중 간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될 경우 중국과 단순히 무역과 투자문제를 넘어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경제교류의 양적 확대와 이슈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한·중 간 통상 분쟁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의 협상 전략에 대한 연구는

물론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중국 협상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선택적 공조를 통해 대중국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투자환경에서의 차별화 등은 여러 국가들이 함께 인정하는 중국의 불공정 거래 사항이다. 이러한 현안은 선진국과의 공조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접근이 효율적일 수 있다.

3. 분야별 통상협력 전략과 과제

가. 무역분야: 무역역조시대의 대비

한·중 간 무역 분야 협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한·중 간 분업구조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에 관한 것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핵심부품산업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통 제조업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대중국 수출 잠재력 저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1) 한·중 간 보완적 산업구조의 지속 방안 강구

양국간의 분업구조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등 후발자의 추격에 직면한 산업이나 기업이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전략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브랜드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를 통해 기존의 분업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 등이다.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에서 한·중 무역관계를 고려할 때, 부품 및 소재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거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중국산과의 경쟁을 회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이 취약한 부품과 소재산업에서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중국은 완제품 조립과 가공산업에서 저임금을

활용하여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과 소재산업에서는 경쟁력이 대체적으로 약하다. 이러한 중국 산업구조의 특성에 맞춰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는 전통 제조업에서는 기술력과 브랜드 등 비가격 요소의 강화는 물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대중국 경쟁우위는 물론 대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가야 한다. 예컨대 섬유산업에서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봉제업종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절대적인 열위에 놓여 있으나, 첨단 섬유소재를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지속시켜 가고 있다.

2)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 강화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1992년 3.5%에서 2006년에는 21.3%로 높아졌다.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31.2%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은 물론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왔다. 특히 일부 중간재의 경우 지나치게 수출의 중국의존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내 수요산업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국 수출에 있어 출혈수출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제품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시장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76%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향하고 있고, 50% 내외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국 수출의 25% 가량이 중국기업으로 향하고, 25% 가량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제3국 기업으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56%가 가공무역을 위해 수출되고 있고, 투자용 설비가 3.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대중국 가공무역용 수출과 투자용 수출의 상당부분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들의 가공무역을 위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의한 대중국 수출유발 효과가 줄어들 때를 대비하여 중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나. 투자협력: China+1 전략과 쌍방향 투자시대의 대비

중국이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중국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서 투자협력 구조도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일방적 투자에서 쌍방향 투자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대중국 투자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해외투자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China+1’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의 잠재성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투자지로서 매력을 지속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임가공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중국으로의 진출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중국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중국의 중서부지역 또는 동북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들 지역 역시 단순 임가공기지로서의 장점이 빠른 속도로 상실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경우 베트남, 동남아 등 중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소비자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투자와 첨단산업분

야의 경우 중국의 전반적인 외국인투자제도와 환경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을 단순한 생산가공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각종 규제가 더해지고 있어 전반적인 투자여건, 특히 연해지역의 투자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향후 중국에 대한 투자는 중국을 가공기지로 이용하려던 투자를 지양하고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투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내수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미 다국적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도 대폭 제고되었다. 그러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제품과 브랜드의 경우 중국 진출 이후 성공적인 안착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중국 진출에 앞서 기술적인 경쟁력은 물론 현지 마케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중국의 서비스 시장 규모 확대와 개방에 맞추어 금융, 유통, 물류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 분야의 진출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은행 부문 개방에 맞추어 외국계 은행들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 역시 중국 진출에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점과 같은 영업점 진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소매금융시장 개방에 맞추어 중국 개인에 대한 소매금융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의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중국진출기업 안정화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기구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중국에 진출한 노동집약적 업종 기업들의 경우 중국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금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진출 기업의 정상적인 퇴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 포괄적 한·중 FTA 추진

1) 경제적 실익을 우선하는 한·중 FTA

한·중 FTA 추진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양국 간에 급속한 경제교류 확대라는 현실에 입각하여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과다의존성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하는 쪽에서는 한·중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FTA 체결로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잠재적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FTA라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⁹⁸⁾

그러나 한·중 FTA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 역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FTA라는 틀이 없이도 양국 간의 경제교류는 그 내재적 필요에 의해 확대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연구와 광범위한 국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유리한 협상결과 도출을 위한 준비시간을 가진 후 추진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특히 현재 체결된 한·미 FTA와 협상이 진행 중인 한·EU FTA에서 파급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추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중 FTA를 추진하여 더 큰 불확실성을 노정하는 것은 국내 경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FTA에 대해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파급효과와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은 순수한 경제적 동기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

98)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에서 중국측의 협상기간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2007년에 협상을 시작할 경우 2010년 정도에 발효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외교·안보적 동기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경제통합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은 한·일 FTA에 앞선 한·중 FTA의 체결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은 한·중 FTA 추진을 통한 대중국 수출 증대 등 경제적 동기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간 교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FTA를 통한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한국은 한미 FTA 타결에 이어 한·EU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은 동아시아 내의 경제통합 흐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과의 FTA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협상에서의 경제적 실익을 최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포괄적 FTA 지향

한·중 간 교역 특성을 감안할 경우 양국간 FTA로 상호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산품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기존의 한·중 FTA 관련연구 결과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⁹⁹⁾ 반면 중국산 제품 또는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중 FTA에 따른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 철폐와 더불어 비관세조치의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내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FTA 추진시 상품 분야 협상을 먼저 체결하고, 서비스 분야 협상을 나중에 체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인 FTA를 체결할 경우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세 이외의 분야에서는 개방에 민감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개방시한을 늦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품 분야

99) 자세한 내용은 양평섭 외(2007)를 참고할 수 있다.

의 관세인하만을 포함하는 낮은 수준의 FTA는 실익이 적다. 따라서 서비스와 투자를 포괄하며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통관과 검역 등 비관세장벽 이슈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 FTA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농업시장 개방, 민감품목의 선정 등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은 이슈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협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슈간의 교환(trade-off)이 가능하고, 협상타결의 여지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라. 기타 분야 협력: 협력과 경쟁

1) 금융협력: 협력과 경쟁

치안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은 다자간 협력 틀 내의 금융협력은 정부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역내 국가간 통화스왑협정 체결이 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 채권시장 형성 논의에서 각국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정부 간 금융협력 실무자급 회의를 운영함으로써 인적 교류 확대와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화권 금융기관 간의 협력은 양국 무역과 투자의 장기적인 확대와 지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현지 금융 부문의 각종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계 은행들은 현지 지원 업무를 통해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상대로 채권관리나 거래선 지원 등의 서비스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지역 간의 금융협력을 위해 금융기관 간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금융협력의 한 방향이 될 것이다. 중국에서 영업하는 은행들에 부과되고 있는 많은 영업상 제한규정들이 완화되고 철폐되는 것도 양국 간의 금융협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향후 중국의 몇몇 대도시는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한국과 경쟁적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추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을 정보통신 및 물류 허브 등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로 발전시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한 방안으로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국제금융센터가 형성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외여건도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세계의 자원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자본시장인 중국과 인접한 한국은 경쟁자인 중국을 동시에 배후지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홍콩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센터로서 중국 반환 이후의 역사, 정치, 사회, 경제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현재 아시아 최고의 국제 금융 중심지로 자리잡게 된바, 홍콩과의 금융협력과 이를 통한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의 국제금융 중심으로서의 발전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의 상하이도 향후 홍콩을 대체할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다롄은 동북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서 중국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런던이나 뉴욕처럼 전통적인 금융 중심지가 아닌 이상 인근 지역의 금융수요를 집중시켜 소화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금융허브 전략의 첫 단계라면, 이 도시들은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인접하여 있으며 타국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서 향후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허브화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연구 분석하고,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금융 분야에 대한 특화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다른 금융센터가 취약한 부문을 먼저 공략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홍콩에 부족한 자산운용산업을 한국이 특화하는 것과 같은 전략을 들 수 있다.

2) 지역물류 협력

우리나라를 둘러싼 물류환경은 항만을 중심으로 한 중국 물류네트워크의 급

속한 성장 및 인프라 확충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및 세계 물류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물류 허브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물류기업의 성장은 우리나라 국제물류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허브 전략의 패러다임은 중국과의 물류 허브 경쟁보다는 효율적인 물류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차이와 다양성에 기반을 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 허브화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물류허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물류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선 물류 허브의 개념을 주변국가의 공항, 항만과 비교해 상대적인 우월성을 가진 단일 허브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복수의 허브 중 하나로 인식하고 주변국의 또다른 물류 허브와의 경쟁과 협력을 강화하는 ‘다핵의 허브’ 개념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화권 물류 중심지와의 경쟁과 협력이 가능한 물류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우 한·중·일 3국의 무역액 가운데 85%가 수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항만 간의 경쟁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공급사슬망 체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우리나라는 중국내 주요 항만 및 공항 등 주요 물류거점과의 네트워크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정보통신(IT) 인프라의 우위를 활용하여 화물의 단순 집산지가 아닌 다양한 부가가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보다 포괄적인 물류허브 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물류산업의 전반적인 육성을 위해 우선 정부는 물류네트워크가 전 산업 부문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물류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기업의 물류 활동이 중국, 홍콩, 대만 등지에서 자유롭게 수행되도록 국가간 네트워크 및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간 물류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물류 표준화, 정보화,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물류 전문인력 양성, 물류 허브

추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강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2년 전에 물류산업을 완전 개방하여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시장개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중국의 항만과 공항이 폭발적 내수물량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물량 위주의 경쟁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부가가치 항만 및 공항의 육성과 종합물류기업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계적인 항만운영업체나 해운선사의 한국 투자를 적극 유도, 효율적인 통관제도 및 높은 질의 내륙운송서비스 등 물류의 소프트웨어 측면을 개선하여 고부가가치 항만과 공항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수의 대형화·전문화된 물류기업을 육성하여 이들이 동아시아 및 세계물류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의 기업정책 변화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와 동반 진출한 물류기업 역시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 및 물류시장의 성장과 위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중 간 항공로는 2008년 완전개방을 앞두고 있고, 한·중 해로는 2009년 컨테이너선, 2012년 카페리선을 완전개방하기로 합의된 상황이다. 이를 의식해 일부 세계적인 해외 회사들이 한·중 및 한·중·일 정기선 영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한·중 간 항공로와 해로의 완전개방으로 세계 각국 기업간 무한 경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물류시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우리 물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다양한 노력과 전략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3) 에너지 협력

대중국 에너지 통상전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는 한·중 양국 간에 실현가능한 통상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현 국제유가 급등과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안 현상의 주요 원인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안보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한·중 양국 간의 협력은 석유제품 중심의 교역,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의 공동개발, 원전 건설 중심의 대중 투자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향후 중국과의 통상협력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고유가에 대비하여 기존의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석유수요 증대와 석유시장의 개방으로 최근 메이저 등 외국 기업들이 정제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등 중국 석유시장의 상·하류 부문에 동시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 국영 석유 전문 업체들¹⁰⁰⁾도 국제 자금조달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중점적인 성장 분야를 강화하고 메이저를 비롯한 외국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실현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약정에 따라 2004년 12월 석유제품 소매시장이 외국자본에 개방¹⁰¹⁾되었고 2007년 1월에는 석유도매시장이 추가적으로 개방되는 등 중국의 시장개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대중국 에너지 부문의 교역과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교역증가와 함께 중국 석유시장에 대한 국내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관련하여 중국은 2005년이 되어서야 석유 비축을 시작하였다. 2008년까지 저장성(浙江省)의 진하이(鎮海)를 포함하여 다이산(岱山)과 산둥성의 황다오(黃島), 요녕성의 신강(新港) 등 4곳의 석유비축기지를 완공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비축규모를 IEA 회원국들의 전략 석유비축기준인 90일치 수입규모로 늘릴 전망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모두 9개 석유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축규모도 2007년 9월 현재 공동비축사업 물량을 포함하여 124일분에 해당하는 1억 300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¹⁰²⁾ 게다가 비축기지 건설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

100) 현재 중국 3대 국영 전문업체인 CNPC(中国石油天然氣集團)와 Sinopec(中國石油化工集團), CNOOC(中國海洋石油集團)가 중국 석유의 99.1%와 천연가스의 98.9%를 장악하고 있다.

101) 외자기업은 주유소를 30개 이내에 한 해 100% 지분율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단, 30개 이상을 설치할 경우에는 중국측과 합작해야 하며 외국기업의 출자율도 50%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

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비축과 관련하여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서산 석유비축기지를 중국 차이나오일에 대여해 주기로 한 계약체결 건¹⁰³⁾ 외에는 현재 별다른 성과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경험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석유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해외 전략 석유류 비축사업에 국내 민간업체와의 공동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중국 비축기지 건설에 국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기술협약 체결 등 적극적인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어느 한 주요 수요국이 생산국과 특별관계를 형성하여 수요를 확보하는 것보다 수요국들 간에 협조해 생산국들을 견제함으로써 공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임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¹⁰⁴⁾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수입국들은 시장의 과다 경쟁, 불투명성, 낙후성 등으로 서구 수입국들보다 더 비싼 가격, 즉 ‘아시아 프리미엄’으로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는 모두 중동산 석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고 중동산 석유의 80% 이상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 동아시아로 유입되고 있어 수송로와 관련한 지정학적 불안이 아시아 프리미엄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정치경제적 레버리지가 취약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송유관 확보 경쟁을 벌이거나 수송로를 상호 경쟁하는 영토적 목표로 인식하기보다는,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더 나아가 중국의 에너지 수요 급등으로 중동 산유국들에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동북아 수요국들의 입지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석유 수입가격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가격구조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역내 석유 선물시장의 창설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동북아에 석유 선물시장이 창설되면 석유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수입국들이 중동 산유국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102) 한국석유공사(www.knoc.co.kr).

103) 동 계약은 2005년 10월에 체결되어 몇 차례의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 2010년 9월까지 대여해 주는 것으로 체결되어 있다. 계약 당시 비축물량은 약 270만 배럴이었다.

104) Zweig and Jianhai(2005).

것이다. 세계 석유시장에서 석유 선물 시장의 비중을 보면 선물 거래량이 현물 거래의 7, 8배가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¹⁰⁵⁾

이 외에 에너지 수급 차원이 아닌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관련한 기술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경쟁의 압박을 완화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방출을 감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도 최근 에너지 절약형 사회건설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 그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 등 화석연료의 수요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해결책으로 핵에너지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국 역시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에너지의 사용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원전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여 년간 무려 300%의 원자력 에너지 사용증가를 기록한 바 있는 우리나라는 기존의 원전 건설에 대한 대중 투자를 바탕으로 원자로의 관리 안전성 문제,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처리 문제 등 건설 사후의 운영·관리상의 측면으로 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전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술협력을 통한 원자력 발전 안전기술, 석탄 청정연소, 대체에너지 등의 공동개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한편 에너지 가격과 관련하여 중국을 상대로 중국 국내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국내 에너지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및 석탄 등의 소매가격을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 실수요자들이 높은 시장가격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최종 수요자의 소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왜곡하게 된다. 최근 중국의 소비보조금 지급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 총 소비보조금이 약 110억 달러¹⁰⁶⁾로 전년대비 5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품목에서는 정부의 시중 유

105) Moon and Lee(2003).

106) IEA(2006) 참고. 2006년 총 소비보조금에서 석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은 약 30억 달러였으며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천연가스와 coking coal이다.

가 통제로 에너지가 저가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할 때 지역적인 차원에서 권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중국이 에너지 안보를 국가적인 선결과제로 인식하면서 전방위적 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은 궁극적으로 안정된 국제정치 환경을 유지하는 데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에너지 절약의 동시 추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임을 역설하고 정부·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력채널을 확대·구축하여 논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통의 이익을 협조를 통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기술협력

중국의 산업기술은 우리나라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는 산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3~5년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중국의 기초과학 역량과 풍부한 인적 자원, 외상기업의 투자와 기술이전 등이 중국의 기술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중국정부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기업 중심의 기술혁신구조 확립 등으로 향후 중국의 빠른 기술발전이 예상되며, 특히 중국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제품개발 측면에서는 단기간 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¹⁰⁷⁾ 따라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면서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만은 우리나라와 기술 추격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핵심 원천기술의 해외 아웃소싱을 바탕으로 제품 생산능력과 세부적인 설계능력 차원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중심으로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가 주축을 이루어왔다. 한편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의 기술

107) 조윤애(2007).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소수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기술 혁신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기업간 지식의 교류 및 확산이 적은 반면, 대만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상호 협력적인 네트워크 전략을 취하고 있어 상호간 지식교류와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¹⁰⁸⁾ 이것은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위한 벤치마킹의 요소를 제공해준다. 이에 대만의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중소기업들의 R&D 활동과 네트워킹을 위한 기술인력 및 학술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술 분야에서 중국, 대만과 선결해야 하는 과제는 기술의 복잡성과 기술변화에 따른 동태적 특성으로 인해 갈수록 규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기술장벽의 해소 문제이다. 특히 중국은 무역·투자 부문에서 상호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술규제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정보 수집과 제시된 규제에 부합하기 위한 기술개발 관련기반이 취약하여 이와 관련한 예기치 못한 비용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이 향후 개시될 경우, 상대국 간 기술 장벽 완화를 위한 별도 분과를 개설하고 주요 의제로 논의하는 등 FT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 등과 함께 비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미국과 유럽의 기술포맷과 경쟁하기 위해 산업표준의 설정이 가능한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자체 표준 개발과 산업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중국 자체 표준인 TD-SCDMA의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99협력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중국 자주 표준의 산업화를 지원해 줌으로써 한·중 양국 간 정보통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

108) 이 근(2007),

고, 해외 진출전략의 일환으로 잠재적인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국제 기술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의 통일, 기술장벽의 축소 등 산업표준의 제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함께 위험 공동부담 및 이익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더욱 긴밀한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외에도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R&D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협력의 범위를 기초연구역량 강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원자력, 우주, 핵융합 등 대형 공동연구의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양국 간의 협력 차원을 넘어 환경, 에너지 등 지역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과학기술 분야 한·중 협력」. 2007中韓科技合作高层政策研讨会会议资料.
- 국회예산정책처. 2006.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권오복. 2005. 『미국 FTA 추진 동향과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석현 외. 2006. 『기업연구개발투자와 성과 2006: Korean R&D Scoreboard』.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남수중. 2005. 「한·중 금융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중국학연구』, 제31권, pp. 295~32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한·중 FTA 종합보고서: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주요 이슈』. KIEP 내부 참고자료.
- 문일재. 2006. 『홍콩 금융정책과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삼일기획.
- _____. 2007. 『홍콩 은행 현황과 경영 성과 분석』.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www.korea.org.hk/index2.html>
- 박월라 외. 2006.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백권호. 2005. 「중국기업의 국제화와 그 의미」. 지만수 외.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pp. 201~2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자원부. 2006. 「국제기술협력 현황 및 발전방향」.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 양평섭 외. 2007. 『한·중 교역특성과 한·중 FTA에의 시사점』.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동북아 지역의 FTA 체결을 위한 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 중국, 일본의 에너지 부문』. 에너지경제연구원.
- 원동욱 외. 2006.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추세와 한국 물류기업의 중국진출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여자나. 2007.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현황과 시사점」. 『지역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 근. 2007. 『동아시아와 기술추격의 경제학』. 박영사.
- 이성우. 2007.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물류기업 동향과 전망」. 『월간 해양수산』, 제271호, pp. 24~43.
- 이장규 외. 2006.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코노미스트. 2005. 「New Oil Road를 따라서」. 『이코노미스트』. (12월 13일)
- 조운애. 2007. 「중국의 기술혁신 역량 변화와 시사점」. 『KIET 산업경제』. (5월)
- 주 홍콩영사관. 2007. 『홍콩 기업공개제도 및 2007년도 전망』. (5월)
- 지만수. 2007a. 『한국기업의 대중투자』. 폴리테이아.
- _____. 2007b. 「미·중 경제전략대화: 중국위협론에서 중국책임론으로」.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원기. 2007. 『미국의 대중 경제통상전략의 새로운 변화: 양국 경제전략대화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 최재선 외. 2005. 「중국, 세계물류를 움직인다」. 『월간 해양수산』. 제249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5. 『국내기업의 해외연구개발활동 실태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_____. 2007. 「한·중 산업기술협력 현황 및 과제」. 2007中韓科技合作高层政策研讨会 会议资料.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6. 『2006년 산업기술수준 조사·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2007. 「중국경제의 리스크와 정책과제」, pp. 7~62. 한국은행.

· 중문 자료

- 高长 外. 2006. 「两岸双边贸易, 投资与产业分工发展趋势」. 『经济情势评论』. 第12卷 第3期
- 國務院發展研究中心. 2007. 『港台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战略构想』. (2007.2.6)

- 中国国务院. 2006. 『国家中长期科技和技术发展规划纲要(2006-2020)』
- 中国经济信息网. 2007. 『2007年中国电力行业年度报告』. 중국경제신식망 사이트
- 中经网数据有限公司. 2007. 『中国物流行业分析报告(2006 年4 季度)』
- 台湾行政院经济建设委员会. 2004. 『迈向竞争优势的产业发展政策』.
- 台湾经济部. 『2015年经济发展远景第一阶段三年冲刺计划(2007~2009年)』.
- 台湾经济永续发展会议. 2006. 『全球布局与两岸经贸』.
- 行政院国家科学委员会. 2006. 『台湾科学技术统计要覽2006』
- 行政院国家科学委员会. 2007. 『中华民国科学技术白皮书 2007~2010』
- 田邊敏憲(2006). 『東アジア環境エネルギー共同體構想と日中協力』. 富士通總研(FRI) 經濟研究所
- 經濟同友會(2006). 『今後の日中關係への提言-日中兩國政府へのメッセージ-』

· 영문 자료

- Boeing. 2006. Current Market Outlook 2006.
- Bown, Chad P. and Rachel McCulloch. 2005. “U.S. Trade Policy Toward China: Discrimination and Its Implications.”
- BP. 2007.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7.
- Business Week. 2005. “International Cover Story: Why Taiwan Matters.” (May 16)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7. “China’s Economic Prospects 2006-2020.” Carnegie Papers.
- Economist. 2007. “Country Briefing on Taiwan.” Economist.com.
- EIU. 2006. Country Profile 2006: Taiwan.
- _____. 2007a. China Hand, Chapter. 11: Infrastructure.
- _____. 2007b. Country Report: China.
- _____. 2007c. Country Report: Hong Kong.
- _____. 2007d. Country Report: Taiwan.
- European Commission. 1985. 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 Cooperation betwe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_____. 1995. A Long Term Policy for China-Europe Relations.
- _____. 1998. "Building a Comprehensive Partnership with China," COM(1998) 181.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 _____. 2003. "Commission Policy Paper for Trans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A Maturing Partnership-Shared Interests and Challenges in EU-China Relations." COM(2003) 533.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 _____. 2005a. The EU Economy: 2005 Review-Rising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 _____. 2005b. Joint Statement of the 8th EU-China Summit.
- _____. 2006a. "Closer Partners, A Policy Paper on EU-China Trade and Investment: Competition and Partnership." COM(2006) 631.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 _____. 2006b. "EU and China: Closer Partners, Growing Responsibilities." COM(2006) 632.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 _____. 2006c. "Press Release 2771st Council Meeting, General Affairs and External Relations, External Relations." Brussels, 11-12 December 2006. (<http://register.consilium.europa.eu/pdf/en/06/st16/st16291.en06.pdf>)
- _____. 2006d. "Ninth EU-China Summit Helsinki 9 September 2006: Joint Statement." 12642/06(presse 249).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 _____. 2006e. Ninth EU-China Summit Helsinki 9 September 2006, Joint Statement. http://ec.europa.eu/external_relations/china/summit/index.htm
- Eurostat. 2007. Eurostat Yearbook 2006-2007. Eurostat.
- Friends of Europe. 2006. EU-China Relations Defining a New Partnership. http://www.friendsofeurope.org/Adv_Board_Netherlands_HCSSL/2006

/430/tabid/945/eventtabname/programme/Default.aspx

Global Insight. 2007. "World Overview." (First Quarter)

Goldman Sachs. 2003.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October)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2006. Annual Report 2006.

Hong Kong Policy Institute Limited. 2003. Neo-Industrialization in Hong Kong. <http://www.tdctrade.com/econforum/hkpri/hkpri030401.htm>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07. World Energy Outlook 2007, China and India Insights.

Lerais, F., M. Levin, M. Sochacki, and R. Veugelers. 2006. *China, the EU and the World: Growing in Harmony?*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Lin, Cheng-Chang. 2004. "Taiwan and the changing Logistics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Korea Transport Institute.

Moon, Young-Seok and Dalsok Lee. 2003. "On Asian Premium of Crude Oil: Causes, Patterns and Counter Measures." 『에너지경제연구』.

Oxford Analytica. 2007. Taiwan: Hsieh carries DDP presidential hopes. (June 12)

Research Department HKTDC. 2004. "Reaching Out, Not Hollowing Out: Hong Kong Industry and Trade Development Trends Under Globalisation." *TDR Research*.

_____. 2006a. "Development and Contribution of Hong Kong's Manufacturing and Trading Sector." *TDR Research*. <http://www.tdctrade.com/econforum/tdc/tdc061103.htm>

_____. 2006b. "PRD Manufacturing + Hong Kong Service." *TDR Research*.

Shenkar, Oded. 2005. "The Chinese Century." Wharton School Publishing.

TDC Research. 2006. "The Future Position of Hong Kong as a Regional Distribution Center."

The McKinsey Quarterly. 2002. The Greater China: High-Tech Highway.

(November 4)

USTR. 2006. *US-China Trade Relations: Entering a New Phase of Greater Accountability and Enforcement.*

_____. 2007. *Foreign Trade Barriers.*

World Energy. 2006. "China and the World Economy: Prospects and Challenges," vol. 9, no. 1.

Zhao, Min. 2006. "External Liberalization and the Evolution of China's Exchange System: Empirical Approach." World Bank China Office Research Paper no. 4.

Zweig, David and Bi Jianhai. 2005. "China's Global Hunt for Energy." *Foreign Affairs.* (Sep/Oct)

· 웹사이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한국석유공사. <http://www.knoc.co.kr>

과학기술부. <http://www.most.g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주 홍콩 한국총영사관. <http://www.korea.org.hk>

中国经济信息网. <http://www.cei.gov.cn>

行政院国家科学委员会. <http://web.nsc.gov.tw>

中国科技统计. <http://www.sts.org.cn>

세계 FTA 관련기사 모음. <http://www.bilaterals.org>

Global Insight. <http://www.globalinsight.com>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http://www.tdctrade.com>

.....
Executive Summary

**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for the Greater China**

Pyeong Seob Yang, Jina Yeo, Hyunjung Park, and SeungBin Pae

Since entering into the WTO, China has turned its protective foreign-trade policies into more engaging ones, as it is expected to reach a responsible attitude corresponding to its higher position in the global economy. Moreover,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and Taiwan have accelerated the formulation of the greater Chinese economic sphere. These changes urge us to tackle a paradigm shift in the strategic trade policies toward a greater China.

Korea's economy is heavily dependent on China and is inevitably sensitive to the impact of Chinese economic changes on the world, especially on the East Asian economy. Korea is confronting increasing uncertainty in its present competitive industries in the global market, in which China is rapidly building up its competitiveness. Therefore, we need to understand correctly the chances and challenges caused by China's increasing economic power so that we can establish strategies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future. What is the exact meaning of the Chinese or Greater Chinese economy to us? This is the first question that we are to answer in order to cope with the detailed problems of the changing environment in China.

This book presents the shifting of direction toward new trade policies for Greater China in the mid and long terms.

First, economy-oriented cooperation needs to be developed to be more

comprehensive and have more than one focus to diversify the cooperation agenda of Korea-China relations. It is time for us to consider long-term economic security as our economic dependency upon China has deepened, despite that there is no guarantee that China will secure high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We should widen the foreign trade-policy venue to encompass political, diplomatic, and economic issues. We can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mpetition not only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ut also between China and Japan, and China and Russia to establish regional trade policy for China. In the Korea-China FTA, one of the main issue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Korea should take an initiating role in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f the East Asian region by deciding the proper time and exerting negotiation power.

Second, the strategic importance of Hong Kong and Taiwan needs to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a regional trade policy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specific character of regions and the several economic segmentations in Greater China should be remembered when proceeding with Chinese business in the private sector. China seems to accelerate Greater China's economic integration and allots the roles in finance and logistics throug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Furthermore, China will multiply its growth points in the longer terms.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and the southwestern regions of China will witness the formation of new economic clusters following the Pearl River Delta, Yangtze River Delta, and Bohai Bay Rim, on which our interests are focused.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arising regional clusters in China.

Third, we have to upgrade and realize high-value-added industr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s in order to maintain our benefits from China as part of the 15-year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 need to concentrate more on the high-value-added process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designing, developing core components, and marketing. In terms of industries, the life spans of the main manufacturing industries such as steel, electronics, petrochemicals, and shipbuilding should be lengthened. Developing components and capital

goods will help the producer markets as well as the consumer markets in China. In addition, enterprises should build up their competence to deal with the segmented market's needs.

Finally, it is urgent that we enhance negotiation power in trade deals with China. FTA negotiation agendas should include more comprehensive issue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etition, and environment policies, as well as trade and investment. Increasing economic activities between the nations will inevitably incur more trade disputes. We need to establish a network among professional negotiators with China who are familiar with the matters concerned. Also, we can cooperate with other significant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enhance our negotiation power with China.

This book also comes up with the strategies and tasks for each field under the new direction of trade policy toward China mentioned above.

In terms of trade, we must maintain the structure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longer term. In order to continue to expand Korean exports to China, it would be a strategic choice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in components and materials for advancing into Chinese niche industry markets. As a longer-term strategy, we should boost exports to the Chinese local and FDI firms in China in order to cope with shrinking exports to Korean FDI firms in China in the future.

On the investment side, China+1 strategy, in which we select one more investment destination in addition to China,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it is sure to strengthen selective policy implementation in foreign investment and it will reduce the room for us to utilize China as manufacturing center. Also, investments targeting the consumer market in China should be reinforced. The manufacturing sector supporting service industries such as finance, distribution, and logistics will see an opportunity to advance into China, as it is opening its service market. In addition, China will boost its outward foreign investment to utilize its huge foreign-exchange reservoir and it will change the present investment structure, in which China is only the investment destination of Korea. Interactive investment between the two

nations will demand a new investment paradigm and we need to strive to attract more capital from China.

The Korea-China FTA, the main trade issue of the two nations in the near future, should be approached in a cautious manner. We take a prudent attitude toward the Korea-China FTA, carefully studying the impacts and changes caused by the Korea-US FTA. We can also try the Korea-Japan FTA and Korea-EU FTA to secure more negotiating power in the Korea-China FTA. For maximizing the export-increasing effect of a Korea-China FTA, we should pursue a more comprehensive FTA with China that includes the easing of non-tariff measures,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FDI firms in China, and opening the service market. This book also suggests specific cooperation strategies in several areas such as finance, logistics, energy, and technology so that Korea can develop some fields that we can dominate in competition with China.

■ 연구보고서

- 07-01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권 율·박복영·정성춘·이성봉 외
- 07-02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최낙균·이홍식 외
- 07-03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계에 대한 시사점 / 서진교 외
- 07-04 글로벌 이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혜정·김혁황·김민성·박철형
- 07-05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송원호 외
- 07-06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채 욱 외
- 07-07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안형도·박제훈
- 07-08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양평섭·이장규·박현정·여지나·배승빈·조현준
- 07-09 한·중 금융·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 신규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형곤·오용협·원동욱·나승권
- 07-10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 연구: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정성춘·이형근
- 07-11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 이순철·최윤정·정재완·Prabir De
- 07-12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이재영·채 욱·한홍렬·신현준

- 07-13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 가능성 /
박복영 · 채 욱 · 이재민 · 이 근 · 이상철
- 06-0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채 욱 · 김세원 · 유재원 외
- 06-0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 김홍중 · 신정완 · 이상호
- 06-03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권 율 · 김한성 · 박복영 · 황주성 · 홍수연
- 06-04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
서진교 · 송백훈 · 송영관 · 정지원 · 박지현 · 이창수
- 06-05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
김상겸 · 박성훈 · 박인원 · 박순찬
- 06-06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
이성봉 · 윤미경 · 현혜정
- 06-07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
이홍식 · 강성진
- 06-08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
오용협 · 조종화 · 윤덕룡 · 송원호 · 이호진 · 이인형 · 진 익
- 06-09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이호진 · 송원호 · 장국현 · 정삼영
- 06-10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
박월라 · 박현정 · 이 근 · 은종학
-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이장규 · 이인구 · 여지나 · 조현준
- 06-12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정성춘 · 김양희 · 이홍배 · 이형근 · 김은지
- 06-13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 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
이재영 · 이철원 · 신현준 · Victor Kalashnikov
- 06-1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및 현지화 전략 연구 /
이순철 · 정재완 · 최윤정 · 오민아

■ 2007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06-15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
박복영 · 황주성 · 박철형
- 06-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
김원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곽재성
- 06-17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
이홍식 · 신관호 · 이종화 · 김형주
- 07-0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 07-02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
양평섭 · 여지나 · 박현정 · 배승빈
- 07-03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 07-04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
권율 · 정재완 · 이재호
- 07-05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대양주 /
김한성 · 배희연
- 07-06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
이순철 · 최윤정
- 07-07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
박복영 · 박철형
- 07-08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
박영호 · 허윤선
- 07-09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
이준규 · 김종혁 · 고희재 · 오민아
- 07-10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김원호
- 07-1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
김박수 · 홍유수 · 이철원 · 김근태 · 오태현

■ 지역연구시리즈

- 07-12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 이재영·한종만·성원용·이광우
- 07-1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 이재영·신현준 편저
- 07-01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박상남
- 07-02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파워 통상 전략 / 이 근
- 07-03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 최의현·김완중
- 07-04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 훈
- 07-05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tentials / Anjan Roy
- 07-06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 / 인남식
- 07-07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한국 농촌개발 경험의 전수를 중심으로 / 전승훈·허길행·유철·최미애
- 07-08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안덕근
- 07-09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 주재우·김민수
- 07-10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정 훈
- 07-11 차베스 에너지정책의 형성배경 및 전망 / 임배진
- 07-12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방안 연구 / 김영철
- 07-13 페루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와 전망 / 하상섭
- 07-14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 전개 / 이상현
- 07-15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한종만

■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16 주요국의 대중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박상남 · 강명구

07-01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 정지원 · 박혜리 · 여지나

07-02 한·중 FTA 보건의료 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 성한경 · 강준구 · 배승빈

07-03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 조미진 · 엄부영 · 박현정

■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06-01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 김남두

06-02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 Prabir De

06-03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Korea and Japan / Kenya Fujiwara

06-04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 Korea FTA / Zhang Jianping

■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

07-01 러시아의 주요 산업 / 신현준 · 이광우 · 김정훈

07-02 멕시코의 주요 산업 / 김진오 · 유성준

07-03 베트남의 주요 산업 / 정재완 · 김동현 · 박근형

07-04 브라질의 주요 산업 / 권기수 · 지윤정

07-05 알제리의 주요 산업 / 박영호 · 박범준

07-06 이집트의 주요 산업 / 박철형 · 권세영

07-07 인도의 주요 산업 / 최윤정 · 박민준 · 김정현

■ 세미나자료모음

- Africa in the World Economy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Emerging Financial Risk in East Asia /
Doo Yong Yang ed.

■ 연구자료

- 07-01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 07-02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 · 박상남
- 07-03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
김원배 · 안형도 · 박세훈 · 정옥주 · 이성수
- 07-04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양평섭 · 구은아
- 07-05 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Remedies for a Fail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 07-06 한·뉴질랜드 경험방향과 통상전략 / 김한성 · 배희연
- 07-07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박복영
- 07-08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
도의 실효성 검토 / 송영관 · 안준성
- 07-09 한중일 3국의 하이테크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 방호경
- 07-10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 이준규 · 고희채

- 07-11 EU의 세계통상전략 / 김세원
- 07-12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 윤창인
- 06-01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 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김정곤
- 06-02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열린경제 / 강인수 · 한홍렬 · 김관호 외
- 06-0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협력경제 / 박성훈 · 박순찬 · 정재완 외
- 06-04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통상거버넌스 / 최병일 외
- 06-05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 유진수 외
- 06-06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 이성봉 · 김관호 · 이준규 · 현혜정

■ Working Papers

- 07-01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ffect Intra-FDI? / Jung Sik Kim and Yonghyup Oh
- 07-02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 Inkoo Lee and Jonghyup Shin
- 07-03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As: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Gravity Model / Hea-Jung Hyun and Hyuk Hwang Kim
- 07-04 A Roadmap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The Necessary First Step / Kyung Tae Lee and Deok Ryong Yoon
- 07-05 An Empirical Assessment of a Trade-off Between FDI and Exports / Hongshik Lee and Joon Hyung Lee

- 07-06 Understanding Wage Inequality: Trade, Technology, and Location / Chul Chung and Bonggeun Kim
- 07-07 What Kinds of Countries Have More Free Trade Partner Countries?: Count Regression Analysis / Jung Hur and Backhoon Song
- 07-08 Experimental Economic Approaches on Trade Negotiations / Hankyoung Sung
- 06-01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 Hak K. Pyo
- 06-02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eong-Bong Lee and Mikyung Yun
- 06-03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Property and Perspective / Woosik Moon, Yeongseop Rhee, and Deokryong Yoon

■ 단행본

-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외교통상부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홍중·손병해 공편저
-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평섭(楊平燮)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학(중국경제 전공)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現, psyang@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국의 대한국 공산품 수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2007)

『산업패널을 이용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결정요인분석』(『동북아경제연구』, 2007) 외

여지나(呂智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중국지역연구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現, jina7@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국 방송시장 현황과 진출전략 - TV 시장과 규제를 중심으로』(KIEP 정책자료 06-04, 2006)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2006)

박현정(朴炫貞)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現, hj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중 FTA 지식재산권분야의 이슈 점검』(2007)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KIEP 연구보고서 06-10, 2006)

배승빈(裴升彬)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중국지역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現, sbpae@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중 FTA 보건의료 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KIEP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2, 2007)

연구자료 07-13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2007년 12월 20일 인쇄

2007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李景奭**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대표 **이호열**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2124-3 94320

978-89-322-2064-2(세트)

정가 10,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개 인 회 원

연 구 자 회 원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I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